

정책보고서 2011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이상영 김동진 윤강재 오영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본 연구결과는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정책보고서 2011-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11년 3월
저 자 이 상 영 외
발 행 인 김 용 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가 격 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490-2 93510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3.

책임연구원 : 이 상 영

제1장 서 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방법	16
제2장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21
1. 2008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21
2. 2009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28
3. 2010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36
4. 최근 3년간의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평가	44
제3장 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7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47
2.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체감도와 평가	53
3. 향후 규제개혁 정책의 필요성	70
제4장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	83
1. 규제개혁특구 운영 현황	83
2. 규제개혁 추진 현황	85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07
제5장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 전략	113
1. 규제개혁의 특성	113
2. 규제개혁의 비전과 주요 국정목표	119

제6장 결 론	225
---------------	-----

참고문헌	229
------------	-----

부 록	231
-----------	-----

부록 1. 2008년 규제개혁 효과	233
---------------------------	-----

부록 2.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일본의 규제개혁	240
-----------------------------------	-----

부록 3. 일본 규제개혁 특구 운영 사례	286
------------------------------	-----

부록 4. 외국의 규제개혁 일반 현황	315
----------------------------	-----

표 목차

〈표 II- 1〉 2008년 규제개혁 발굴 과제수	21
〈표 II- 2〉 2009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	28
〈표 II- 3〉 2009년 보건복지부 한시적 유예 대상과제 현황	29
〈표 II- 4〉 대상집단별 2009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과제 추진 현황	30
〈표 II- 5〉 국정목표별 2009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과제 추진 현황	32
〈표 II- 6〉 정책영역별 2009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과제 추진 현황	32
〈표 II- 7〉 기대효과에 따른 규제개혁(2009년)	34
〈표 II- 8〉 2010년 규제 발굴 및 개혁 추진 현황	36
〈표 II- 9〉 대상 집단별 기대효과에 따른 규제 개혁 과제 분류	37
〈표 II-10〉 국정목표와의 연계성별 규제개혁과제 분류	39
〈표 II-11〉 주요 정책영역별 규제 개혁 과제 분류	39
〈표 II-12〉 기대효과에 따른 규제개혁(2010년)	41
〈표 III- 1〉 규제개혁정책 성과평가와 필요성 파악을 위한 사례 예시	49
〈표 III- 2〉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성별 분포	50
〈표 III- 3〉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51
〈표 III- 4〉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연령대별 응답자 분포	52
〈표 III- 5〉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체감도	54
〈표 III- 6〉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55
〈표 III- 7〉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체감도	56
〈표 III- 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57
〈표 III-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에 대한 체감도	58
〈표 III-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59
〈표 III-11〉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정책에 대한 체감도	60
〈표 III-12〉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61
〈표 III-13〉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체감도	62
〈표 III-14〉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63

〈표 III-15〉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체감도	64
〈표 III-16〉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65
〈표 III-17〉 행복e음 구축에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체감도 ..	66
〈표 III-18〉 행복e음 구축에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성과 평가	67
〈표 III-19〉 현정부의 3년간 보건복지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68
〈표 III-20〉 규제개혁 조치 체감도별 전반적 평가	69
〈표 III-21〉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규제개혁의 필요성	71
〈표 III-22〉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72
〈표 III-23〉 국민연금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73
〈표 III-24〉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74
〈표 III-25〉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규제개혁의 필요성	75
〈표 III-26〉 현재 및 과거 일상생활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불편함 경험율	76
〈표 III-27〉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불편한 사항	77
〈표 III-28〉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추구해야 할 목표	78
〈표 III-29〉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추진시 기준	79
〈표 IV- 1〉 일본의 규제개혁: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 확대	87
〈표 IV- 2〉 일본의 규제개혁: 기업의 참여 및 외부위탁 확대	89
〈표 IV- 3〉 일본의 규제개혁: 시설설치 및 운영 기준 완화	92
〈표 IV- 4〉 일본의 규제개혁: 자원의 공동활용과 운영의 합리화	96
〈표 IV- 5〉 일본의 규제개혁: 고용, 건강 등 기타 규제 합리화	98
〈표 IV- 6〉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운영사례	102
〈표 V- 1〉 공정사회 구현 관련 규제 개혁 과제 요약	172
〈표 V-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 기준	178
〈표 V-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79
〈표 V-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80

〈표 V-5〉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부지원 조항	184
〈표 V-6〉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지도원 관련 조항	185
〈표 V-7〉 아동복지지도원 확충 연차별 계획(안)	185
〈표 V-8〉 식품진흥기금 활용 관련 법률	187
〈표 V-9〉 장애인연금법 수급권자 기준	188
〈표 V-10〉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190
〈표 V-11〉 우리나라 장애판정 관련 법률	192
〈표 V-12〉 서민생활 안정 지원 관련 규제 개혁 과제 요약	194
〈표 V-13〉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 개혁 과제 요약	202
〈표 V-14〉 의약품 소포장 관련 법률	204
〈표 V-15〉 식품위생법에 따른 재검사 기준	205
〈표 V-16〉 식품위생법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207
〈표 V-17〉 병상관련 법률	209
〈표 V-18〉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12
〈표 V-19〉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214
〈표 V-20〉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조항	215
〈표 V-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 조항	216
〈표 V-22〉 종합병원 진료과목 설치 규정	217
〈표 V-23〉 성장동력 확충 관련 규제 개혁 과제 요약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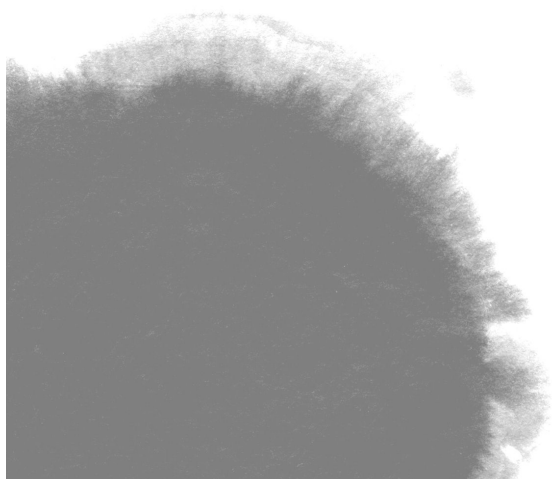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규제개혁 비전과 추진방향	22
[그림 2]	일본의 구조개혁특구(규제개혁) 운영 절차	85
[그림 3]	정책목표와 규제개혁의 목표	115
[그림 4]	공리주의적 입장의 사회 후생함수	117
[그림 5]	평등주의적 입장의 사회 후생함수	117
[그림 6]	존 롤즈의 사회 후생함수	118
[그림 7]	규제개혁의 비전 및 원칙	122
[그림 8]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국정목표	125
[그림 9]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개방 관련 주요 과제 로드맵	133
[그림 10]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관련 주요 과제 로드맵	136
[그림 11]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관련 주요 과제 로드맵	140
[그림 12]	대상집단·영역별 형평성 제고 관련 주요 과제 로드맵	146
[그림 13]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 관련 주요 과제 로드맵	153
[그림 14]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관련 주요 과제 로드맵	159

01

K
I
H
A
S
A

서 론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규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적 틀 속에 규제적 요소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정책의 목표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일부 제한하게 되는데, 정책의 달성을 통해 국민에게 귀속되는 편익이 규제로 인해 희생되는 권익보다 커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는 규제의 정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규제는 연구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김정해 외, 2006). 예로서, Vogel(1996)은 규제를 국가가 특정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규, 규정 또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구체적인 규제의 형태는 개인의 권한을 국가가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그 규제가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Micir(1985)는 민간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규제를 정의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OECD(1997)는 규제를 “정부 또는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나 기구들이 기업, 국민, 정부자체를 대상으로 요건을 부여하는 법, 질서, 기타 규율”로 정의하고, 규제의 범주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¹⁾. 권장준 및 정규진(2009)은 규제란 “기본적으로

정해진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위주체의 자유선택을 제한하거나 변경시킴으로써 행위를 간섭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행위주체를 간섭함으로써 다른 행위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규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규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허가·인가와 허용·금지 등의 행정적 수단에 의해 사업자 또는 국민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르면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정의는 규제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규제의 존재로 인해 달성되는 공공의 목적이 어느 정도이며, 규제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권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에 따라서는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권익이 공적 목표의 달성도에 비해 클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규제가 처음 탄생할 당시와 달리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로 인한 공적 목표 달성도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는 문제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이 계량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자를 세밀하게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국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러한 규제의 개혁은 규제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 높은 규제”(better regulation) 또는 “똑똑한 규

- 1) 경제적 규제: 가격설정, 경쟁, 시장진입 및 탈퇴 등에 관한 기업과 시장의사결정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는 규제
- 사회적 규제: 건강, 안전, 환경, 사회적 결속 등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는 규제
- 행정적 규제: 행정절차 및 서류작업, 즉 ‘red tape’

제”(smart regulation)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규제에 질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우며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찾아내기 어렵다. 특히 똑똑한 규제는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이를 규제개혁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한편, 김종석(2004)은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국가경쟁력의 강화, 정부부패의 감소, 국민생활의 질 향상,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제도의 국제화 등을 들었으며, 이철우(2008)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국민의 체감도 향상, 국민의 참여 등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미흡했다. 이런 측면에서 규제개혁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정비를 통해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추진의 예측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진행 중인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측정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토대로 보건복지 부문의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positive)이고 능동적 측면에서의 규제개혁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자율권과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집권후반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분석하고, 그 동안 진행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남은 후반기 동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개혁 대상 중점 과제 및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향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개혁 조치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3개년간(2008~2010년)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규제개혁 조치들을 일별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였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규제개혁 조치들의 시행과정에는 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정부는 현재 정책을 검토하며, 서비스 공급자의 의견과 수요자인 국민의 여론을 수용함으로써 규제개혁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기획·입안하고 이를 시행하며, 서비스 공급자(의료인,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들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측에 제시하고 그 의견이 규제개혁 조치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인 국민들은 규제개혁 조치들의 체감정도에 따라 정책의 신뢰도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 개선의 feedback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보건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부, 공급자,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수요자인 국민들의 경우 규제개혁 조치들이 국민의 생활 전반과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향후 규제개혁 조치들의 성패에 정책의 신뢰성과 순응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정책의 수요자 입장, 즉, 일반 국민 입장에서의 평가와 방향제시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표본추출하여 3년간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규제개혁의 필요성 등을 전화조사하였다. 전화조사는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현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체감도와 성과 평가, 둘째,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개방 등 향후 주요 규제개혁 정책별 필요성 인식 정도, 셋째, 규제개혁 조치 시행시 고려해야 할 방향성과 목표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직능단체와 협회, 전문가 단체와 연구기관의 제도개선 건의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필요한 규제조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수렴 기관/단체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한병원협회 등 8개 단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 등 7개 단체였으며, 의견수렴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또는 규제개선 담당자와의 간담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불참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거나 추가로 의견수렴이 필요한 기관/단체들의 경우 연구진이 직접 방문,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영역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취합하였다.

물론 이는 해당 직종 또는 분야의 의견이므로 서로간의 상충이 있거나 오히려 수요자 입장에서는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각 기관/단체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정부측의 조율을 거쳐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제안한 구체적인 규제개혁 제도개선 안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소관 과·팀별로 담당자들(예: 국민연금연구원 건의안→국민연금정책과)을 수시로 방문하여 정부측의 수용가능성 및 수용이 어려울 경우 그 근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제2장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1. 2008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가. 규제개혁 추진현황

2008년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은 국경위 및 총리실 관리 중점관리 과제 2개, 부처 자체 중점관리 과제 1개, 일반과제 184개 등 총 187개 과제가 발굴되었다.

〈표 II-1〉 2008년 규제개혁 발굴 과제수

등록 규제수	발굴 과제 수			
	국경위·총리실 관리 중점관리과제 (A)	부처 자체 중점관리과제(B)	일반과제 (C)	계 (A+B+C)
616 개	2개	1개	184개	187개

규제개혁과제는 경제단체, 지자체, 타 정부부처, 유관기관, 국민제안 등을 통해 발굴 되었는데, 2008년 4월말까지 46개 과제를 발굴한 이후 총 10여 차례의 발굴절차를 거쳐 11월말까지 187개를 발굴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 “2008년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추진단(10명), 민간전문가(14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50명) 등으로 규제개혁 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였다. 아울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규제개혁 국민제안코너 등을 통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였다.

2008년의 규제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은 “국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이라는 비전하에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추진방향은 ① 국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②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③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 해소, ④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1]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규제개혁 비전과 추진방향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의 합리화 및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²⁾. 특히 복지대상자의 불편해소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해소·완화하거나 민원처리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허가, 등록, 신고 등의 민원처리 절차상 규제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 국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

국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규제개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 자격상의 선택권 부여, 의료기관 이용시의 환자 편의 제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화로 사각지대 해소('08.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개정)
-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소급분연금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 도모('08.11 국민연금법 국회제출)
- 미납보험료를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한 경우 체납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감면함으로써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완화('08.11 국민연금법 국회제출)
- 만성질환자 중 거동불편 환자의 경우 보호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08.10 의료법 국회제출)
-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증 제출의무 완화('08.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타 신분증에 의하여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 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제외('08.11 노인장기요양보험

2)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 2008. 12.

법 국회제출)

- 학대피해노인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대상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전체 노인복지시설로 확대('08.7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화로 사각지대 해소('08.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개정)
-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도록 하되, 희망하는 경우 적용 제외('08.11 국민연금법 국회제출)

2)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선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제 개혁은 법인 및 개인의 제출서류 완화, 신고절차 간소화, 실적 보고 주기 연장 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제출서류 완화('08.8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
 - ※ 법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등기내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을 같음
-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원 신고절차 간소화('08.11 건강기능식품법 국회제출)
 - ※ 판매업자가 판매원명부만을 시군구청에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같음
-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개선('08.1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주기를 매반기에서 연 1회로 완화('09.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 예정)

- 보건의료 R&D관련 연구계획서 간소화 및 최종평가시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생략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09.2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관리규정 고시 제정 예정)
-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 및 뇌사판정과 관련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폭을 확대하여 편의도모('09.7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장기이식 및 뇌사판정 관련 신청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의 불편 완화('09.7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한 서류(소모품대장, 준공검사서, 기성부문검사조서 등) 작성의무 폐지('09.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 예정)

3)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은 관련 업체의 종사자 교육과 관련한 부담 경감, 신고제도 폐지, 의무고용 인력제도 폐지 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 공중위생에 관한 정규위생교육 축소 및 2년 이내 동일업종으로 영업시 신규위생교육 면제('09.6 공중위생관리법 국회제출 예정)
-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종사자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폐지('08.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약사·한약사 의무 고용제도 폐지('08.11 약사법 국회제출)
-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경우 개개 품목별 허가에서 동일 품목류별 허가로 개선('08.11 의료기기법 국회제출)
-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경우에는 현지

실사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09.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건강기능식품판매 신규영업자의 교육 요건 완화('08.11 건강기능식품법 국회제출)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시간 완화('09.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무단폐업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영업신고사항 말소요건을 완화하여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신규 영업자의 편의 도모('09.2 식품위생법 개정)
-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신청범위를 기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및 수입업에서 판매업까지 확대('08.11 건강기능식품법 국회제출)
- 주택단지안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선하여 주택건설 활성화 도모('08.11 청소년활동진흥법 국회제출)

4)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해외환자 유치에 위한 제도 개선과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의료법·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규제특례 도입('08.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 경영합리화 도모('08.10 의료법 국회제출)
- 의료채권 발행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 자본조달수단 다양화('08.10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허용하여 해외환자유치 활성화('08.10 의료법 국회제출)
-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08.10 의료법 국회제출)

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³⁾

2008년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의 비전으로서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을 설정하였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은 규제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중의 하나로서 규제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전체적인 규제 또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비전을 설정하였다고 해서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규제개혁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8년은 현 정부 출범 첫 해로서 규제개혁에 대한 향후 5년 동안의 비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 공정사회 구현” 등 주요 국정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진방향과 관련하여서도 ① 국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②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③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 해소, ④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네 가지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나 규제개혁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은 국정지표와 연계하여 이러한 국정지표 달성을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2008년 규제개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평가는 부록 참조

이와 함께 규제개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규제개혁의 합목적성 증대, 규제개혁의 성과 제고, 규제간의 연계 및 효율성 제고, 규제개혁의 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의 추진 등의 측면에서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국민생활에 비중 있는 과제보다는 관련자가 아니므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세부적인 과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이후에 이루어진 규제개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ad-hoc 방식에 기반한 과제의 발굴과 추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2009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가.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

1) 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

2009년 10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규제의 수는 총 586개로서, 이 가운데 2009년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한 과제의 수는 총 108개(핵심 규제개혁과제 18개, 일반과제 90개)에 달한다.

〈표 II-2〉 2009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

등록규제수 ('09.10월말)	발굴과제 수		
	핵심규제개혁 과제(A)	일반과제 (B)	계 (A+B)
586개	18개	90개	108개

2) 한시적 유예 대상과제

한시적으로 규제 유예 대상인 과제는 2009년 5월 말 기준으로 총 64건으로서, 타기관에서 발굴된 과제가 52건이며, 보건복지부 자체 소관과제로

제출된 것이 10건, 타부처 소관과제로 제출된 것이 2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타기관에서 발굴된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과제 52건 중 16건이 수용되어 그 비율은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2009년 보건복지부 한시적 유예 대상과제 현황

타기관 발굴과제			자체 소관과제 제출 건수 (‘09.5.27 기준)	타 부처 소관 제출건수 (‘09.5.27)
검토의뢰 과제건수 (‘09.5.27일 기준)	수용(‘09.5.27 기준)			
	건수	비율(%)		
52건	16건	30.8	10건	2건

나. 2009년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평가

규제개혁을 위한 조치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2009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및 그 실적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 규제개혁의 대상집단 측면, 둘째,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계성 측면, 셋째, 주요 정책영역의 측면, 넷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의 차별성 측면에서 평가하기로 한다.

먼저 2009년의 규제개혁 조치들의 특성을 대상집단별로 분류할 경우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 개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규제개혁을 ①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소비자 비용 절감, ②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③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등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소비자 비용 절감과 관련한 규제개혁은 21건(33.9%),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에 관련된 규제개혁은 34건(54.8%),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규제개혁은 7건(1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다른 영역들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한 규제개혁의 건수가 많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급자 위주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 과제들이 정책목표에 대한 합목적적 기반이나 방향성을 토대로 발굴되기 보다는 ad-hoc 방식으로 발굴된 결과로 지적받기도 한다.

〈표 11-4〉 대상집단별 2009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과제 추진 현황

구 분	계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소비자 비용 절감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건수(건)	62	21	34	7
비율(%)	100.0	33.9	54.8	11.3

현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를 ① 공정사회 구현, ② 서민생활 안정, ③ 일자리 창출, ④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전 등으로 대별하고 2009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들과의 연계성 및 파급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과제의 비중이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공정사회 구현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규제 개혁 실적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주요 국정목표와 관련한 규제개혁은 전체 62개중 약 31개로 집계되는데, 이는 공정사회 구현 관련 5개, 서민생활 안정 19개, 일자리 창출관련 1개, 성장동력산업 육성 6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처벌의 형평성 제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에 관련된 규제개혁이 포함되는 바, 이에 대한 주요 정책 또는 조치들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향후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계층에게 보다 많은 편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2009.4.3)를 통해 타 식품접객업자와의 관련 규정 위반시 형평성 제고
-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2009.4.20)을 통해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 심사 미이수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2009.5.29)을 통한 민원인의 피해 최소화
- 집행유예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제한 폐지 추진(2009.6.22)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의 집행유예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보장
- 무단폐업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요건 완화(2009.8.7)를 통해 사실상 폐업한 영업자의 영업신고를 직권 취소함으로써 건물소유주 재산권 보장 및 신규영업자의 편의 제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추진된 규제 개혁은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2009.4.3)’ 단 1건이며, 그나마 실질적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가 가지는 고용효과와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 완화는 필요성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물론 일자리 창출의 특성상 규제개혁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이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다른 영역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 할 것이다.

〈표 II-5〉 국정목표별 2009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과제 추진 현황

구 분	계	공정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산 업 육성	기타
건수(건)	62	5	19	1	6	31
비율(%)	100.0	8.1	30.6	1.6	9.7	50.0

2009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보건복지 정책영역별로 구분할 경우 보건의료 및 건강정책, 보건산업 정책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보건의료 및 건강정책 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은 18건으로 전체의 29.0%를 차지하였으며, 보건산업정책 영역은 15건으로 24.2%를 차지하였다. 또한 복지정책·복지서비스 영역과 인구·아동·청소년 영역에서의 규제개혁 과제가 각각 12건(19.4%), 노인·장애인·보육 영역에서의 규제개혁 과제가 5건(8.1%)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노인, 장애인, 보육 분야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연금정책 등과 같이 규제개혁 사항이 없는 영역도 존재하고 있다.

〈표 II-6〉 정책영역별 2009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과제 추진 현황

구 분	계	보건의료/ 건강정책	보건산업 정책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인구·아동· 청소년	노인·장애인· 보육
건수(건)	62	18	15	12	12	5
비율(%)	100.0	29.0	24.2	19.4	19.4	8.1

또한 2009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과제 중에는 규제개혁 과제로서 추진되었으나, 실제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 규제개혁이 아닌 제도개선 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또는 조치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자녀수에 따른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기준 폐지(2009.1.29)
- 외국인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2009.4.30)
-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설(2009.4.30)
- I-사랑카드(보육전자 바우처) 도입(2009.4.30)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효율성 제고(2009.4.30)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2009.7.15)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신고 지자체 이양(2009.8.6)

총괄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2009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내용은 2008년에 비해 발전한 형태를 보였고, 내용상 국민편의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과 관련된 사항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으나, 공급자 측면에서의 부담경감과 편의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과 추진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규제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공정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계성이 비교적 낮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62건의 2009년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국정목표와의 연계성을 가진 과제는 절반 정도인 31개 과제에 불과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쳐진 모습을 보였다. 단순한 지원혜택의 확대 차원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계층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발생하도록 하는 ‘공정사회 구현’과 파급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측면에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규제개혁이 공급자 중심이고 미시적인 사안들이 많아서 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을 개선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지속과 복지요구도 확대에 따른 재정 문제(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부담 문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문제 등이 주요한 미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장기적 사회변화 예측에 기초한 과제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II-7〉 기대효과에 따른 규제개혁(2009년)

구 분	규제개혁 내용
생활편의 증진 및 소비자의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1.1) • 한국화귀의약품 센터가 신청한 약제의 약가 산정 절차 간소화(1.13) • 자녀수에 따른 장난감 복원수술 지원기준 폐지(1.29)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과정 이수기간 완화(1.31) • 외국인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4.30) •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설(4.30)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편의 제고(3.20)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대상 확대(3.21)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3.31) • 피임시술 등 관련 규정 폐지(3.31) • 식품관련 영업자 및 그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시기 명확화(4.3)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화(4.6) •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를 통한 실퇴직자들의 건강보험 부담료 완화(4.6) •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4.20) • 보육료 지원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4.20) • 사망진단서 서식에 본적란 삭제(4.29) • 의료인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4.29) • I-사랑카드(보육전자 바우처) 도입(4.30) •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고(신청) 처리절차 개선(5.29) •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시 배우자 관계 명시(5.29) • 집행유예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제한 규정 폐지 추진(6.22)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지정후원금의 사용범위 완화(1.1) • 국민건강보험 임의비급여 개선(1.1) • 출장검진시 출장검진계획서 폐지(1.19) • 아동학대통계 보고체계 간소화(1.31) •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한 서류작성 의무 완화(2.5)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영수증 발급 간소화(2.5) •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수입지출 보고주기 완화(2.5)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효율성 제고(4.30)

〈표 11-7〉 계 속

구분	규제개혁 내용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고부담 완화(2.25) •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2.26) • 암검진기관의 출장검진계획서 보건소 제출 폐지(3.3) • 암검진기관의 유소견자 보건소 동시통보 절차 폐지(3.3) • 정신요양시설 설치 절차 완화(3.18) • 말기암환자 정보등록의 간소화(3.25) • HACCP 관련 교육 훈련 시간 완화(4.3) •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4.3) • 식품 수입신고에 따른 신고수수료 폐지(4.3) • 수입식품 사전확인 등록제 개선(4.3) • 위탁 급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4.3) • 의료법인 임원 선임 및 재산 증가보고 기한 완화(4.29) • 장애인 생산품 인증 기준 완화(6.10) •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등 통지기간 단축(6.30) •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7.3)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관련 보고주기 간소화(7.10)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예정지역 상 축적 기준 삭제(7.10) •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신청 처리기간 단축(7.10) • 청소년 수련시설의 단위시설기준 및 개별 기준완화(7.10) •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7.15)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영업신고 지자체 이양(8.6) • 무단폐업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요건 완화(8.7) •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완화(8.7) • 아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지역제한 폐지(8.7)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신약 및 개량신약의 재평가기준 개선(1.13) • 화장품 원료관리 품목 네거티브 방식 도입(3.27) •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구비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3.31)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유효성 심사 적합 받은 의료기기의 심사기간 단축(5.29) • 의료기기의 품목관리 기준 적합 인정 미이수자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일원화(5.29) •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 정기심사 미이수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5.29) • 실거래가 조사에서 적발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제한기간 단축(1.13)

3. 2010년에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가.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

2010년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정비방향은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미래대비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은 사회보장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서민부담 경감,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등의 기대효과가 있으며,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은 영업규제 합리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 도모, 자격요건 완화로 신규인력의 고용기회 마련, 세 번째 미래대비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은 규제완화를 통한 보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R&D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0).

이러한 방향에 따라 총 560개 등록규제 중 2010년도에는 총5차에 걸쳐 중점과제 3건(세부과제 28건), 일반과제 94건을 개혁대상 규제로 발굴하였다.

〈표 II-8〉 2010년 규제 발굴 및 개혁 추진 현황

등록규제	구분	계	2010년 1월	추가발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총 560개 (‘09. 12.31, 주규제 기준)	중점 과제	3건 (세부과제 28건)	1건 (세부과제 6건)	-	1건 (세부 과제 14건)	1건 (세부 과제 8건)	-	-	-
	일반 과제	94건	77건	5건	2건	1건	2건	2건	5건

나. 2010년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평가

규제개혁 과제를 대상집단,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계성, 주요 정책영역, 그리고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의 차별성으로 나누어 평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 대상집단

규제개혁 대상집단별로 구분하였을 때,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일반 국민 혹은 소비자 보다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 개혁이 많았다.

전체 121개 세부과제를 나누어볼 때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소비자 비용 절감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51건(42.1%),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은 “의료기관 평가 개선” 등을 포함한 59건(48.8%),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유치환자 편의제공 범위 완화”를 포함한 11건(9.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급자에 대한 규제개혁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의 민원 혹은 의견수렴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국민 생활편의 증진 분야 규제개혁 성과는 2009년의 33.9%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보건산업 등 성장동력을 위한 기획적 규제개혁 과제 발굴은 2009년(11.3%)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규제발굴이 보다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9〉 대상 집단별 기대효과에 따른 규제 개혁 과제 분류

구분	계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소비자 비용 절감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건수(건)	121	51	59	11
비율(%)	100.0	42.1	48.8	9.1

2)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계성

2010년도에 발굴된 개혁대상 규제를 주요 국정목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일자리창출(1.6%), 공정사회 구현(8.1%)

과 관련된 규제 개혁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반적으로 주요 국정목표와 관련한 규제개혁은 전체 121개중 37개로 30.6%에 불과하였는데, 세부하여 보면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된 규제 개혁 과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 확대”를 비롯한 5개 과제, 서민생활 안정은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등 21개 과제, 일자리 창출 관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의 1개이며, 성장동력 산업 육성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유치환자 편의제공 범위 완화” 등의 10개 과제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특정계층의 사회권이나 건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 확대(2010.6.30)”를 통해 취약지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 제고, 둘째, “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 기준 특례 개선(2010.3.31)”을 통해 영세농어의 기본소득 보장, 셋째,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2010.12.31)”를 통해 시간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넷째, “시간제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 완화(2010.8.)”를 통해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조건 향상, 다섯째, “근로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2010.1.31)”를 통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특히, 공정사회 구현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인 만큼 장애인, 노인, 아동, 저소득층, 영세상공인 등 특정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주류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에 발굴된 개혁대상 규제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012년 이후)”의 1건이며, 이를 통해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확대가 예상되며, 지역 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표 II-10〉 국정목표와의 연계성별 규제개혁과제 분류

구 분	계	공정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산업 육성	기타
건수(건)	121	5	21	1	10	84
비율(%)	100.0	4.1	17.4	0.8	8.3	69.4

3) 주요 정책영역

보건복지 정책영역별로 나누어보면 보건의료 및 건강정책 분야가 “항암제 급여 확대” 등 6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보건산업정책은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중복 규제 완화”를 포함한 19건, 복지정책·복지서비스는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통합 및 조사 업무 일원화” 등 14건, 인구·아동·청소년은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을 포함한 7건, 장애인·노인·보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을 포함한 13건 등으로 분류되었다.

보건의료 및 건강정책분야에 대한 과제가 가장 많은 것은 보건의료 관련 공급자와 관련된 제도개선이나 규제 완화가 상당수를 차지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I-11〉 주요 정책영역별 규제 개혁 과제 분류

구 분	계	보건의료/ 건강정책	보건산업 정책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인구·아동· 청소년	노인·장애 인·보육
건수(건)	121	68	19	14	7	13
비율(%)	100.0	56.2	15.7	11.6	5.8	10.7

4)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의 차별성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개혁대상으로 발굴된 규제에는 규제개혁 이라기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2010.4.30)
-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2010.6.30)
- 항암제 급여 확대(2010.10.31)
- 회귀난치치료제 급여 확대(2010.10.31)
-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 적용(2010.10.31)
- MRI 검사 보험급여 확대(2010.10.31)
- 연구자 친화적 보건의료 R&D 관리시스템 구축(2010.8)
- 선진 보건의료 R&D 평가시스템 구축(2010.8)
- 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 기준 특례 개선(2010.3.31)
- 기초수급자에게 본인의 급여내역 제공(2010.12.31)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012년 이후)
- 근로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2010.1.31)
- 시간제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2010.8)
-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2010.12.31)
-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 개선(2010.8)

이상과 같은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2010년도에 개혁대상으로 포함된 규제의 내용은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공정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목표와의 연계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개혁 발굴이 대상자별 민원수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때문에 향후에는 중장기적 사회변화 예측에 기초한 선제적 접근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12〉 기대효과에 따른 규제개혁(2010년)

구분	규제개혁 내용
생활편의 증진 및 소비자의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10.4.30) ●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10.6.30) ● 항암제 급여확대('10.10.31) ●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10.10.31) ●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10.10.31) ● MRI검사 보험급여 확대('10.10.31) ● 간호조무사 자격교육 이수 일수 완화('10.10) ●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 확대('10.6.30) ● 관광취업(H-1) 사증 소지자 지역건강보험 적용('10.12.31) ● 피부양자 취득신고 기한 확대('10.12.31) ● 장애인 등록전 구입보장구 보험 급여 소급 적용('10.8) ●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10.9) ●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완화(추진중단) ● 건강진단 등 신고 기간 단축('10.1.31) ●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10.12.31)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수수료 납부방법 개선('10.9) ●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대상자 조정('10.1.31) ●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비용 부담 완화('10.1.31) ●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필수 이수 영역 조정('10.1.3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진 경력 인정범위 확대('10.1.31) ● 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기준 특례 개선('10.3.31.)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통합 및 조사업무 일원화('10.1.31) ● 기초수급자에게 본인의 급여내역 제공('10.12.31) ● 외국인의 기초 수급 신청범위 확대('10.12.31) ●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10.12.31) ● 농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10.12.31) ● 저소득층 생업 자금 차량기준 삭제('10.12.31) ● 입양기관변경 신고처리기간 단축('11.6) ● 봉안당 설치신고시 종교단체등록증 제출 규정 정비('10.12) ● 자연장지 조성지역 제한 완화('10.12) ● 화장신고시 사망자 통보('10.9.30)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12년 이후) ● 노노케어 가정에 현금보상 추진('10.10 이후.) ● 행동변화 관련 인정조사 6개 항목 추가('10.2.28.)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확대('10.12.31) ● 장애인등록증 반환시 국민편의 제공('10.6.30) ● 이동복지시설에 대해 국유재산 무상대여 확대('10.12.31) ● 사전등급분류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간 중복개선('11.12.31)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 개선('10.6.30) ● 근로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10.1.31) ● 시간제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 개선('10.8) • 화장시설(화장로) 설치장소 기준 완화('10.10) • 지자체간 공동장사시설 설치조성 기준 완화('10.10) • 화장로 비용보조 확대('10.10)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폐지('10.10.31)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완화('10.10) • 배아의 보존기간(5년) 연장가능 예외규정 마련('10.11.30)
공급자의 합리적 서비스 공급 유도 및 행정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분야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10.12.31)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검사 기관 등록제('10.12.31) • 의료인력 변경신고시 수수료 완화('10.6.30) •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기준(200병상) 완화('10.12.31)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 확대('10.12.31) • 의료기관 평가 개선('10.6.30.) •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내용 단순화('10.3.31) •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개선('10.12)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10.12.31) • 장류의 자가 품질 검사 주기 완화('10.12.31) • 농산 가공품 판매 관련 규제개선('10.12.31) • 자경작물 이용 소규모 음식점자 원산지 증명 대체('10.12.31)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완화('10.12.31) • 건강기능식품 품질 관리인 자격요건 차별 개선('10.10)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10.12.31) • 집단급식소 변경 신고시 수수료 면제('10.12.31) • 의약품 등 취급자의 결격사유 명확화('10.12.31) • 생물학적 제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확대('10.12.31) • 의약품 제조업무관리자 자격요건 차별 개선('10.12.31) • 하나의 의료기기 허가증/신고증에 복수의 제조소 병기 허용('10.12) •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중복규제 완화('10.11) • 방사선장비 병의원 대 업자간 양도양수 허용('10.11) • 차등수가제 개선('10.6.30) • 식대수가개선('10.12.31) • 입원료 산정방법 개선('10.12) • 영양교육/상담료 산정대상 확대개선('10.8.31) •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10.12.31)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 개선('10.8) • 요양기관 인력시설·장비 변경사항 신고('10.8) • 단기 대진의 신고 간소화('10.8) •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개선('11.12.31) • 치과기공소 인정 기준 완화('11년 이후) •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10.11) • 연구자 친화적 보건의료 R&D 관리시스템 구축('10.8) • 선진 보건의료 R&D 평가시스템 구축('10.8) • 보고 명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폐지('1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휴업 미신고시 영업정지 조항 폐지('10.11) • 자카품질검사 기록 미보존 시 영업정지 규정 폐지('10.12.31) • 시설개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대상 제외('10.10) • 식품 등 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폐지('10.10.31) • 품목제조보고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조항 폐지('10.12.31) • 응급의료기관의 예비병상 미확보시 과태료 처분 폐지('10.9.30) • 정신보건시설의 보고 의무위반시 영업정지 조항 폐지('10.10) • 유전자검사기관등 신고의무 위반시 업무정지처분 폐지('10.12.31) •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보존의무 위반 등 과태료 폐지('10.12.31) • 유전자은행 변경 미신고 등 업무정지 폐지('10.12.31) • 유전자은행이 정보관리 및 보안 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폐지('10.12.31) •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사항 미신고 시 업무정지 폐지('10.12.31)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시 행정처분기준의 완화('11.6) • 유전자 검사기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폐지('10.11.30)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제 폐지('10.11.30) • 유전자은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10.11.30) • 유전자검사 서면동의중 일부를 구두동의로 완화('10.11.30) • 유전자 검사대상물의 보존의무(5년) 삭제('10.11.30) • 수입한 줄기세포주를 등록제에서 제외('10.11.30) • 기관위원회 구성 관련 규제완화('10.11.30) •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개선('10.12.31) •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변경신고 절차 개선('11.2.28)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의료기기 허가증/신고증에 복수의 제조소 병기 허용('10.8.31) • 중고의료기기 수출시 전신판매 허용('10.11) • 중고의료기기 수입시 제출서류 간소화('10.11) • 중고의료기기 국내 개보수 판매 허용('10.11) • 의료기기 위해 등급에 따른 회수기일 규제완화('10.11) •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한 의료기기 생산 확대('10.12.31) • 생물의약품 약가우대('10.2.28) •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한 개량신약의 약가인정('10.2.28)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유치환자 편의제공 범위 완화('10.12.31)

4. 최근 3년간의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평가

최근 3년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진 규제개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우선 첫째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영역이 넓은 만큼 양적으로도 매우 많고 국민 생활과 공급자 활동의 세밀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책영역에 걸쳐 다양한 규제개혁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들도 경주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양적으로나 내용상으로 다양한 규제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국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개혁과제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문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양적인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어 따라 규제개혁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세 번째로는, 규제개혁의 기본틀과 중장기적인 추진방향 또는 로드맵 없이 ad-hoc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언제, 어느 수준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웠다.

넷째, 규제개혁이 규제개혁 그 자체만으로서의 목적 즉, 국민의 편의증진이나 비용절감 등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국가적 주요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성이 부족하였다.

다섯째, 규제개혁의 목표 대비 성과를 비교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규제개혁 건수 중심의 양적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규제개혁 이후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와 국민의 만족도, 수혜대상 범위 등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섯째, 규제개혁이 대부분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규제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국민에게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폐지해야 할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03

K
I
H
A
S
A

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제3장 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국민생활 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등을 위하여 대폭적인 규제 감소 및 법령의 선진화를 국정아젠다로 삼았으며⁴⁾, 이러한 국정기조의 일환으로서 보건복지부 역시 2008년부터 2010년간 총 174건(2008년 79건, 2009년 67건, 2010년 7월 현재 28건)의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정비하였다. 아울러 공정한 사회 구현 및 친서민정책의 추진과 같이 현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국정운영의 원칙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규제조치들에 대한 점검과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조치들은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재산, 권리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행정학 등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규제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행위주체의 자유선택이나 권리를 간섭 또는 제한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규제를 ‘정부규제’ 또는 ‘행정규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할 정도로 규제권한이 행정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정부가 취하는 규제개혁 조치는 사안에 따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 개개인을 수요자로 하여 강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규제개혁 조치들이 국민의 생활 전반과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

4)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 2008

을 고려할 때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 즉, 일반인 또는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개혁 발굴 과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순응도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물론 현정부의 규제개혁 조치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현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은 등록규제 수의 감소, 규제개혁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 미등록규제의 정비, 규제개혁에 따른 영향요인 분석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규제사각지대의 상존,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규제개혁이 신속하게 규제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 규제개혁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위한 체계적 연구지원이 미흡했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규제개혁 사례들의 체감도와 성과 평가,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인식하고 있는 필요성, 규제개혁의 목표와 기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 국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3년간 시행된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사례 및 향후 보건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응답자들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들을 제외하였으며,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도가 높고 정책의 대상자로서 체감도가 높을 수 있는 사례들로 선별하였다.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의 평가와 향후 규제개혁 필요성을 위해 조사한 구체적 정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 규제개혁정책 성과평가와 필요성 파악을 위한 사례 예시

구분	규제개혁정책	주요 내용
성과 평가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항암제·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 완화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70세~65세), 연금액(88,000원→90,000원) 확대
	장애인 편의 증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확대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기준 월소득액의 상향 조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증가와 투명성 제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확대, 중복수급 등 불투명성 방지
향후 필요성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개방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 확보	고소득 피부양자의 고액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계층별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확대
	국민연금제도의 공정성 확보	불합리한 장애연금 수급기준 보완 및 자격관리·장애판정 기준 일원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연령기준 및 등급기준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규제 개선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또한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표본추출과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표본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1년 인구추계로 16개 시·도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 중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규모에 따라 1,000명을 표본추출하여 전화 면접조사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모집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1년 인구추계」를 활용
- 표본의 특성 및 크기: 확보된 예산과 조사일정, 신뢰수준을 감안하여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으로 결정
-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추출법 적용

지역별·성별에 따른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성별 인구추계 규모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추출된 표본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2〉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성별 분포

(단위: 명)

	모집단		계	표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서울	3901256	4093437	7994693	104	107	211
부산	1334276	1405774	2740050	34	38	72
대구	914953	952019	1866972	24	25	49
인천	1028418	1024512	2052930	26	28	54
광주	524842	547034	1071876	13	15	28
대전	571164	580223	1151387	15	15	30
울산	421507	402464	823971	11	11	22
경기	4475087	4450023	8925110	117	118	235
강원	561086	561868	1122954	15	15	30
충북	572442	567173	1139615	15	15	30
충남	775965	751188	1527153	19	21	40
전북	643285	664784	1308069	17	18	35
전남	657885	686657	1344542	17	18	35
경북	1016672	1030212	2046884	27	27	54
경남	1201382	1207484	2408866	32	32	64
제주	201004	205874	406878	5	6	11
계	18801224	19130726	37931950	491	509	1000

한편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수행시 사용해야 할 전화번호

추출작업은 전국 16개 시도별 각 시·군·구에서 보유한 인명 전화번호건설수를 데이터화하여 유효표본 1,000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성별 모집단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인구가 49.6%, 여자인구는 50.4%의 비율로 구성되어 여성인구가 약 1%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0대 이후부터 남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표본의 인구 분포도 모집단의 성별·연령별 비율과 거의 유사한 분포로 추출되었다.

〈표 III-3〉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연령	모집단			표본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3488421	3177639	6666060	90	86	176
30대	4131927	3885015	8016942	111	103	214
40대	4266168	4116930	8383098	112	108	220
50대	3534828	3534851	7069679	92	94	186
60대	1943303	2128052	4071355	50	61	111
70세 이상	1436577	2288239	3724816	36	58	94
계	18801224	19130726	37931950	491	509	1000

〈보건복지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조사 방법은 전화조사 면접방법이었으며 1가구당 1명의 응답자를 목표로 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대와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의 시간대를 병행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으로 추출한 자료를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전화조사원들에게 분배하였고, 전화조사대상자를 인명전화번호부에서 계통추출방법에 따라 선정하여 전화조사를 수행하였다. 숙련된 전화조사원들은 유효 표본 1,000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명전화번호부에서 채택한 가정집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걸어 표본특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별·연령별 조건을 확인한 후 표본 특성에 일치하는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을

간략히 안내하고 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진행 중에 응답자의 개인사정으로 중단하게 되면 응답이 가능한 시간에 약속을 정한 후 재접속을 시도하여 전화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밖에도 설문조사 중 다수의 강한 응답 거부나 중단과 같은 부정적 태도, 부재 중 이거나 통화 중인 경우, 결번, 직장전화번호, 팩스 등과 같은 부정확한 전화번호의 노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조사대상자의 집 전화번호를 과표본으로 준비하였다. 즉 전화조사원들이 간략한 조사개요에 대한 안내를 시도했었던 27,177명을 과표본으로 하였다.

본 전화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출한 유효표본 1,000명을 얻기 위하여 표본의 27.2배인 27,177명을 과표본(oversample)으로 사용하였고, 과표본 대상자 중에서 설문전화조사에 참여(중도 포기 포함)하였던 대상자들은 10,238명이었으며 이들 중에서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함으로써 9.8%의 응답성공률을 얻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바쁜 사무가 발생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23명에게는 희망하는 시간대에 재통화 약속을 받은 후 다시 전화조사한 결과 18명이 재응답에 협조함으로써 78.3%의 높은 재응답 성공률을 얻을 수 있었다.

〈표 III-4〉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연령대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연령	표본			응답자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90	86	176	90	85	175
30대	111	103	214	112	100	212
40대	112	108	220	111	111	222
50대	92	94	186	92	94	186
60대	50	61	111	50	61	111
70세 이상	36	58	94	36	58	94
계	491	509	1000	491	509	1000

응답자의 인구분포는 표본인구의 남자 30대에서 추출된 인구보다 1명 초

과한 반면 40대에서는 1명 감소하였다. 여성응답자의 경우에는 20대 표본보다 1명, 30대는 3명 감소한 반면 40대 여성응답자가 3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할만한 편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본 전화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였다.

2.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체감도와 평가

조사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년(2008년~2010년) 동안 현정부가 추진한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개혁추진 사례에 대한 체감도와 성과 평가를 질문하였다.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들이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일 최대 4만원 범위, 총 30만원 한도내에서 바우처(고운맘 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신 및 출산진료비는 2010년 4월부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 4월 등록자부터는 40만원으로 지원액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대부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체감도 자체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정책에 대해 제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은 18.1%였으며,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15.3%인 반면, 체감도가 낮다는 응답은 36.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도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다소 체감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체감도가 2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 16.1%, 30대 15.6%의 순으로 체감도가 높았다.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사업의 주된 대상이라 할 수 있는 30대에서 '제도를 잘 모른다'라는 응답이 12.7%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 본 규제개혁 사업에 대한 대상집단에서의 인식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5〉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체감도

(단위: 명, %)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제도를 잘 모름
전체	1,000 (100.0)	15.3	30.5	36.1	18.1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16.3	31.3	37.8	14.6
도지역	534 (100.0)	14.4	29.8	34.6	21.2
성별					
남자	491 (100.0)	15.3	30.3	36.0	18.3
여자	509 (100.0)	15.3	30.6	36.1	17.9
연령***					
20대	175 (100.0)	11.4	30.3	33.7	24.6
30대	212 (100.0)	15.6	31.6	40.1	12.7
40대	222 (100.0)	10.8	31.5	40.1	17.6
50대	186 (100.0)	16.1	32.8	36.0	15.1
60대 이상	205 (100.0)	22.4	26.3	29.8	21.5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12.2	29.7	39.2	18.9
자영업	221 (100.0)	17.2	35.3	31.2	16.3
기계·전기·운수·건설·노동	90 (100.0)	14.4	32.2	38.9	14.4
학생	110 (100.0)	12.7	29.1	36.4	21.8
주부	264 (100.0)	15.5	29.2	38.6	16.7
무직·기타	93 (100.0)	21.5	24.7	30.1	23.7

*p<.1 **p<.05 ***p<.01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사업 확대의 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매우 미흡+미흡한 편)는 평가가 44.3%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평가가 39.2%, 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한 편)는 평가가 16.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성별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실제 사업의 대상집단에서는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사무직에서 52.0%로 가장 높았으며, 주부와 자영업 종사자들에게서는 지원이 충분했다는 응답이 각각 18.8%, 16.5%로 나타나 전문직·사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높았다.

〈표 III-6〉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단위: 명, %)

	N (%)	미흡	보통	충분
전체	909 (100.0)	44.3	39.2	16.5
지역				
특별시·광역시	440 (100.0)	43.6	41.8	14.5
도지역	469 (100.0)	45.0	36.7	18.3
성별				
남자	443 (100.0)	46.7	37.7	15.6
여자	466 (100.0)	42.1	40.6	17.4
연령*				
20대	157 (100.0)	44.6	43.9	11.5
30대	201 (100.0)	48.8	34.8	16.4
40대	198 (100.0)	44.9	39.9	15.2
50대	172 (100.0)	45.9	39.5	14.5
60대 이상	181 (100.0)	37.0	38.7	24.3
직업**				
전문직·사무직	204 (100.0)	52.0	36.3	11.8
자영업	200 (100.0)	46.5	37.0	16.5
기계·전기·운수·건설·노동	82 (100.0)	45.1	40.2	14.6
학생	97 (100.0)	39.2	47.4	13.4
주부	245 (100.0)	39.6	41.6	18.8
무직·기타	81 (100.0)	39.5	33.3	27.2

*p<.1 **p<.05 ***p<.01

다음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규제개혁 조치들에 대해 그 체감도와 성과 평가를 질문하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는데, 본 전화조사에서는 2008년 이후로 적용된 조치들인 중증화상의 본인부담 경감, 항암제·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 적용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전술한 사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체감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5%가 체감도가 높다고 응답하여 체감도가 낮다는 응답(26.7%)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보통 수준의 체감도라는 응답은 30.3%였으며, 제도 자체를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6.5% 수준이었다. 응답자들의 거주 지역별로는 도지역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비해 제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고(도지역: 19.5%, 특별시·광역시 지역: 13.1%),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

령별로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및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관련되 규제개혁을 체감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III-7〉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체감도

(단위: 명, %)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제도를 잘 모름
전체	1,000 (100.0)	26.5	30.3	26.7	16.5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29.8	30.7	26.4	13.1
도지역	534 (100.0)	23.6	30.0	27.0	19.5
성별					
남자	491 (100.0)	27.3	30.3	27.3	15.1
여자	509 (100.0)	25.7	30.3	26.1	17.9
연령**					
20대	175 (100.0)	18.3	33.1	25.7	22.9
30대	212 (100.0)	24.1	30.7	28.3	17.0
40대	222 (100.0)	28.4	32.4	27.0	12.2
50대	186 (100.0)	31.2	28.5	29.6	10.8
60대 이상	205 (100.0)	29.8	26.8	22.9	20.5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21.6	31.5	29.7	17.1
자영업	221 (100.0)	28.1	33.5	23.1	15.4
기계·전자·운수·건설·노동	90 (100.0)	40.0	23.3	26.7	10.0
학생	110 (100.0)	20.9	30.9	26.4	21.8
주부	264 (100.0)	28.0	29.9	25.8	16.3
무직·기타	93 (100.0)	23.7	26.9	31.2	18.3

*p<.1 **p<.05 ***p<.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조치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24.4%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가 43.8%, 미흡하다는 평가가 31.8%로 나타나 여전히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 및 급여 폭의 확대를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거주지역 및 성별, 직업별로 파악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각 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응답이 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단위: 명, %)

	N (%)	미흡	보통	충분
전체	896 (100.0)	31.8	43.8	24.4
지역				
특별시·광역시	433 (100.0)	32.3	43.2	24.5
도지역	463 (100.0)	31.3	44.3	24.4
성별				
남자	445 (100.0)	32.1	44.7	23.1
여자	451 (100.0)	31.5	42.8	25.7
연령*				
20대	156 (100.0)	30.8	50.6	18.6
30대	187 (100.0)	33.2	44.9	21.9
40대	201 (100.0)	36.8	42.8	20.4
50대	177 (100.0)	28.8	41.8	29.4
60대 이상	175 (100.0)	28.6	39.4	32.0
직업				
전문직·사무직	197 (100.0)	35.0	45.7	19.3
자영업	200 (100.0)	29.5	42.0	28.5
기계·전기·운수·건설·노동	85 (100.0)	28.2	42.4	29.4
학생	98 (100.0)	31.6	50.0	18.4
주부	236 (100.0)	29.7	44.9	25.4
무직·기타	80 (100.0)	40.0	33.8	26.3

*p<.1 **p<.05 ***p<.01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규제개혁에 관한 체감도와 성과 평가를 조사하였다.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는 27.3%로 조사되었으며, 체감도가 낮다는 응답은 24.1%, 보통 수준의 체감도라는 응답은 30.1%였다. 제도 자체를 잘 모른다는 응답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규제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연령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인 60대 이상 연령층과 대상자 집단으로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 50대에서의 체감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에서 제도 인지도와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성별로는 여성이, 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인지도,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었다.

〈표 III-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에 대한 체감도

(단위: 명, %)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제도를 잘 모름
전체	1,000 (100.0)	27.3	30.1	24.1	18.5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30.5	30.5	24.2	14.8
도지역	534 (100.0)	24.5	29.8	24.0	21.7
성별					
남자	491 (100.0)	26.5	31.6	23.2	18.7
여자	509 (100.0)	28.1	28.7	25.0	18.3
연령***					
20대	175 (100.0)	20.6	29.1	26.3	24.0
30대	212 (100.0)	18.4	30.7	28.8	22.2
40대	222 (100.0)	23.4	35.1	23.9	17.6
50대	186 (100.0)	39.2	26.9	23.7	10.2
60대 이상	205 (100.0)	35.6	27.8	18.0	18.5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20.7	30.6	27.5	21.2
자영업	221 (100.0)	33.9	28.5	20.4	17.2
기계·전기·운수·건설·노동	90 (100.0)	31.1	31.1	25.6	12.2
학생	110 (100.0)	20.9	30.9	27.3	20.9
주부	264 (100.0)	28.8	30.7	23.5	17.0
무직·기타	93 (100.0)	26.9	29.0	21.5	22.6

*p<.1 **p<.05 ***p<.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29.6%로 충분하다는 평가 24.5%보다 많았으며 보통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5.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성별 등에 따른 성과 평가의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 및 자영업과 기계·전기·운수·건설 노동 조사계층에서 '충분한 성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확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단위: 명, %)

	N (%)	미흡	보통	충분
전체	882 (100.0)	29.6	45.9	24.5
지역				
특별시·광역시	426 (100.0)	28.6	47.9	23.5
도지역	456 (100.0)	30.5	44.1	25.4
성별				
남자	432 (100.0)	30.1	45.6	24.3
여자	450 (100.0)	29.1	46.2	24.7
연령				
20대	148 (100.0)	30.4	48.0	21.6
30대	182 (100.0)	31.3	50.5	18.1
40대	197 (100.0)	28.9	48.7	22.3
50대	173 (100.0)	30.1	40.5	29.5
60대 이상	182 (100.0)	27.5	41.8	30.8
직업				
전문직·사무직	193 (100.0)	30.1	45.1	24.9
자영업	195 (100.0)	31.8	41.5	26.7
기계·전기·운수·건설·노동	82 (100.0)	29.3	45.1	25.6
학생	94 (100.0)	31.9	46.8	21.3
주부	236 (100.0)	25.4	50.8	23.7
무직·기타	82 (100.0)	32.9	43.9	23.2

*p<.1 **p<.05 ***p<.01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를 확대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성과 평가를 질문하였다. 주지하다시피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65세 이하 노인인구 중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게 월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당초 70세 이상 연령이었으나, 2009년 이후 65세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연금액 역시 당초 88,000원(노인단독가구 기준)에서 출발하여 2010년에는 90,000원으로 약 2.3%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제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이 10.2%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제도의 체감도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24.7%)보다 체감도가 낮다는 응답(3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확대와 연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통 수준의 체감도라고 응답한 경우는 35.0%였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는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 집단인 노인 연령층의 체감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기초노령 연금의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44.4%가 높은 체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도가 낮거나(18.0%),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4.9%)는 다른 제도에 대해서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 및 사무직과 학생 집단에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연령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III-11〉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 정책에 대한 체감도

(단위: 명, %)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제도를 잘 모름
전체	1,000 (100.0)	24.7	35.0	30.1	10.2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23.8	35.2	32.6	8.4
도지역	534 (100.0)	25.5	34.8	27.9	11.8
성별					
남자	491 (100.0)	23.0	37.3	30.1	9.6
여자	509 (100.0)	26.3	32.8	30.1	10.8
연령***					
20대	175 (100.0)	13.1	29.7	33.1	24.0
30대	212 (100.0)	17.5	36.3	34.0	12.3
40대	222 (100.0)	18.0	39.2	36.0	6.8
50대	186 (100.0)	30.1	36.0	29.0	4.8
60대 이상	205 (100.0)	44.4	32.7	18.0	4.9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21.2	36.0	29.3	13.5
자영업	221 (100.0)	23.5	39.4	29.9	7.2
가계·전가·운수·건설·노동	90 (100.0)	27.8	32.2	33.3	6.7
학생	110 (100.0)	12.7	32.7	31.8	22.7
주부	264 (100.0)	28.0	34.1	31.4	6.4
무직·기타	93 (100.0)	37.6	30.1	23.7	8.6

*p<.1 **p<.05 ***p<.01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에 대한 성과 평가 질문에 대해

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34.0%, 충분하다는 응답이 22.8%로 조사되어 아직은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낮았다. 성과 평가에 대한 문항에서도 연령 및 직업 집단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성과가 미흡하다는 응답(36.2%)도 적지 않았으나,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응답도 33.7%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았다. 직업 집단에서는 기계·전기·운수·건설 노동 등 블루칼라 집단과 무직자 집단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여겨지는 직업집단이므로 연금액의 확대에 보다 민감할 것으로 여겨지며, 그러한 성향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2〉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및 지원대상자 확대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단위: 명, %)

	N (%)	미흡	보통	충분
전체	944 (100.0)	34.0	43.2	22.8
지역				
특별시·광역시	442 (100.0)	32.8	46.2	21.0
도지역	502 (100.0)	35.1	40.6	24.3
성별				
남자	464 (100.0)	35.1	44.2	20.7
여자	480 (100.0)	32.9	42.3	24.8
연령***				
20대	152 (100.0)	27.6	51.3	21.1
30대	198 (100.0)	37.4	41.9	20.7
40대	211 (100.0)	37.0	48.3	14.7
50대	184 (100.0)	29.9	46.2	23.9
60대 이상	199 (100.0)	36.2	30.2	33.7
직업**				
전문직·사무직	202 (100.0)	31.2	48.5	20.3
자영업	214 (100.0)	34.1	45.8	20.1
기계·전기·운수·건설노동	88 (100.0)	38.6	40.9	20.5
학생	98 (100.0)	28.6	52.0	19.4
주부	254 (100.0)	33.9	39.0	27.2
무직·기타	88 (100.0)	42.0	29.5	28.4

*p<.1 **p<.05 ***p<.01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의 확대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다는 응답이

26.1%였으며, 낮다는 응답이 25.8%로 나타나 양쪽 응답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16.0%였다.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국민들에게 비교적 빈번하게 노출되는 정책이며, 최근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시행 또는 확대되면서 관련 정책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도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특별시·광역시 거주자의 체감도가 높았고, 도지역 거주자들과 여성들의 경우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특별시·광역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에서는 기계·전기·운수·건설 노동 집단과 자영업 집단에서 체감도가 높았던 반면 전문직·사무직 및 학생 집단의 경우 반대로 체감도가 낮았다.

〈표 III-13〉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체감도

(단위: 명, %)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제도를 잘 모름
전체	1,000 (100.0)	26.1	32.1	25.8	16.0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28.3	35.6	24.2	11.8
도지역	534 (100.0)	24.2	29.0	27.2	19.7
성별**					
남자	491 (100.0)	25.7	34.8	26.9	12.6
여자	509 (100.0)	26.5	29.5	24.8	19.3
연령***					
20대	175 (100.0)	16.6	40.0	26.9	16.6
30대	212 (100.0)	23.6	30.7	32.5	13.2
40대	222 (100.0)	27.0	32.9	26.1	14.0
50대	186 (100.0)	30.1	28.5	26.3	15.1
60대 이상	205 (100.0)	32.2	29.3	17.1	21.5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19.8	30.2	37.4	12.6
자영업	221 (100.0)	30.8	30.8	21.3	17.2
기계·전기·운수·건설노동	90 (100.0)	32.2	41.1	20.0	6.7
학생	110 (100.0)	19.1	40.9	24.5	15.5
주부	264 (100.0)	28.8	27.7	24.6	18.9
무직·기타	93 (100.0)	24.7	33.3	19.4	22.6

*p<.1 **p<.05 ***p<.01

장애인정책의 성과 평가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3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0.8%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과가 충분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39.7%) 및 50대(35.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하 연령집단에서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응답이 충분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14〉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단위: 명, %)

	N (%)	미흡	보통	충분
전체	892 (100.0)	30.8	39.2	29.9
지역				
특별시·광역시	433 (100.0)	29.8	41.6	28.6
도지역	459 (100.0)	31.8	37.0	31.2
성별				
남자	445 (100.0)	29.7	40.0	30.3
여자	447 (100.0)	32.0	38.5	29.5
연령***				
20대	160 (100.0)	28.1	51.3	20.6
30대	191 (100.0)	32.5	39.3	28.3
40대	196 (100.0)	33.7	40.3	26.0
50대	171 (100.0)	35.1	29.8	35.1
60대 이상	174 (100.0)	24.1	36.2	39.7
직업				
전문직·사무직	199 (100.0)	35.2	39.7	25.1
자영업	196 (100.0)	29.6	36.7	33.7
가계 전가운수건설노동	85 (100.0)	25.9	35.3	38.8
학생	100 (100.0)	30.0	49.0	21.0
주부	233 (100.0)	30.9	38.2	30.9
무직·기타	79 (100.0)	29.1	39.2	31.6

*p<.1 **p<.05 ***p<.01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기준인 월소득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25.9%의 응답자들이 체감도가 높다고 응답하였고, 제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은 10.9%, 체감도가 낮다는 응답은 28.5%로 나타났다.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들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도지역 거주자들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는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감도에서는 30대 및 40대에서 '체감도가 낮다'는 응답이 각각 32.1% 및 31.5%로 높게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보육료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에 부족함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5〉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체감도

(단위: 명, %)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체도를 잘 모름
전체	1,000 (100.0)	25.9	34.7	28.5	10.9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26.8	36.1	30.0	7.1
도지역	534 (100.0)	25.1	33.5	27.2	14.2
성별					
남자	491 (100.0)	25.9	33.6	28.1	12.4
여자	509 (100.0)	25.9	35.8	28.9	9.4
연령**					
20대	175 (100.0)	20.6	35.4	29.7	14.3
30대	212 (100.0)	25.9	34.0	32.1	8.0
40대	222 (100.0)	24.8	35.6	31.5	8.1
50대	186 (100.0)	31.2	29.6	29.0	10.2
60대 이상	205 (100.0)	26.8	38.5	20.0	14.6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27.5	33.3	31.1	8.1
자영업	221 (100.0)	28.5	31.2	27.6	12.7
가계·전가·운수·건설·노동	90 (100.0)	22.2	37.8	34.4	5.6
학생	110 (100.0)	22.7	35.5	27.3	14.5
주부	264 (100.0)	25.4	35.6	29.5	9.5
무직·기타	93 (100.0)	24.7	39.8	17.2	18.3

*p<.1 **p<.05 ***p<.01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 개혁 조치들에 비해 성과가 충분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성과가 미흡했다는 응답이 39.6%, 보통이라는 응답이 40.8%인 반면, 충분한 성과

를 거두었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이를 근거로 해 볼 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6〉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단위: 명, %)

	N (%)	미흡	보통	충분
전체	927 (100.0)	39.6	40.8	19.6
지역				
특별시·광역시	448 (100.0)	37.3	42.9	19.9
도지역	479 (100.0)	41.8	38.8	19.4
성별				
남자	451 (100.0)	40.4	40.8	18.8
여자	476 (100.0)	38.9	40.8	20.4
연령**				
20대	156 (100.0)	39.7	42.9	17.3
30대	202 (100.0)	44.1	43.1	12.9
40대	207 (100.0)	38.6	42.0	19.3
50대	177 (100.0)	42.9	33.3	23.7
60대 이상	185 (100.0)	32.4	42.2	25.4
직업				
전문직·사무직	212 (100.0)	37.3	42.0	20.8
자영업	203 (100.0)	45.8	35.5	18.7
기계·전기·운수·건설·노동	86 (100.0)	39.5	40.7	19.8
학생	99 (100.0)	40.4	44.4	15.2
주부	245 (100.0)	38.0	42.0	20.0
무직·기타	82 (100.0)	34.1	42.7	23.2

*p<.1 **p<.05 ***p<.0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확대 등 효율성 증가와 중복수급 등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 성과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함으로써 자동화(공적자료 기반 산정), 간소화(서식 등 행정절차 축소), 표준화(자산조사 기준 통일), 통합관리 및 시스템기반 관리를 통해 개인별·가구별 중복·누락 예방, 부정적 수급 및 부정소지 차단과 아울러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행복e음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개혁 조치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 자체를 아직 잘 모르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5.1%) 이상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본 사업에 대한 효과와 의미 전달이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다. 체감도 역시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19.8%였으며, 절반 이상이 보통 수준의 체감도이거나 체감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7〉 행복e음 구축에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체감도

(단위: 명, %)

	N (%)	체감도 높음	보통	체감도 낮음	제도를 잘 모름
전체	1,000 (100.0)	19.8	29.8	25.3	25.1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20.8	32.0	26.8	20.4
도지역	534 (100.0)	18.9	27.9	24.0	29.2
성별**					
남자	491 (100.0)	18.9	32.8	27.3	21.0
여자	509 (100.0)	20.6	26.9	23.4	29.1
연령***					
20대	175 (100.0)	12.0	40.0	24.0	24.0
30대	212 (100.0)	17.0	33.0	30.2	19.8
40대	222 (100.0)	23.0	27.5	27.5	22.1
50대	186 (100.0)	23.7	22.6	29.6	24.2
60대 이상	205 (100.0)	22.4	26.8	15.1	35.6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22.1	32.9	27.0	18.0
자영업	221 (100.0)	20.4	26.7	26.2	26.7
기계·전기·운수·건설·노동	90 (100.0)	17.8	36.7	28.9	16.7
학생	110 (100.0)	11.8	41.8	20.0	26.4
주부	264 (100.0)	22.0	23.1	24.6	30.3
무직·기타	93 (100.0)	18.3	28.0	23.7	30.1

*p<.1 **p<.05 ***p<.0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당초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18.2%에 머물렀으며, 미흡했다는 응답은 37.2%,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4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행복e음 구축에 따른 복지서비스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성과 평가

(단위: 명, %)

	N (%)	미흡	보통	충분
전체	819 (100.0)	37.2	44.6	18.2
지역				
특별시·광역시	399 (100.0)	36.6	46.4	17.0
도지역	420 (100.0)	37.9	42.9	19.3
성별				
남자	412 (100.0)	37.9	43.9	18.2
여자	407 (100.0)	36.6	45.2	18.2
연령***				
20대	143 (100.0)	25.2	58.0	16.8
30대	183 (100.0)	41.5	46.4	12.0
40대	182 (100.0)	44.0	37.4	18.7
50대	153 (100.0)	41.8	39.9	18.3
60대 이상	158 (100.0)	31.0	43.0	25.9
직업				
전문직·사무직	190 (100.0)	37.9	44.2	17.9
자영업	180 (100.0)	42.8	41.1	16.1
기계·전자·운수·건설·농	81 (100.0)	40.7	39.5	19.8
학생	88 (100.0)	23.9	56.8	19.3
주부	207 (100.0)	38.2	44.4	17.4
무직·기타	73 (100.0)	31.5	45.2	23.3

*p<.1 **p<.05 ***p<.01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질문하였다. 규제개혁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10.0%(충분한 편: 9.6%, 매우 충분: 0.4%)였으며, 미흡하였다는 응답은 41.7%(미흡한 편: 34.6%, 매우 미흡: 7.1%)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거주지역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과 직업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을 충분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60대 이상의 경우 19.5%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30대 응답자들은 4.7%의 응답자만이 현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이 충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별

로는 무직·기타 직업군, 주부, 자영업, 기계·전기·운수·건설 노동직업군의 순으로 충분했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19〉 현정부의 3년간 보건복지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단위: 명, %)

	N (%)	미흡	보통	충분
전체	1,000 (100.0)	41.7	48.3	10.0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40.3	49.8	9.9
도지역	534 (100.0)	42.9	47.0	10.1
성별				
남자	491 (100.0)	43.8	46.8	9.4
여자	509 (100.0)	39.7	49.7	10.6
연령***				
20대	175 (100.0)	40.0	53.7	6.3
30대	212 (100.0)	52.4	42.9	4.7
40대	222 (100.0)	45.5	47.7	6.8
50대	186 (100.0)	37.6	49.5	12.9
60대 이상	205 (100.0)	31.7	48.8	19.5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45.9	48.2	5.9
자영업	221 (100.0)	40.7	47.5	11.8
기계·전기·운수·건설·노동	90 (100.0)	47.8	42.2	10.0
학생	110 (100.0)	43.6	50.9	5.5
주부	264 (100.0)	35.2	52.7	12.1
무직·기타	93 (100.0)	44.1	40.9	15.1

*p<.1 **p<.05 ***p<.01

현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조치들 가운데 앞서 사례로서 조사한 7가지 규제개혁 정책들의 체감도를 ‘높은 체감도’와 ‘낮은 체감도’로 구분한 후 체감도 정도에 따른 전반적인 평가 경향을 살펴본 결과, 이번 전화조사에 포함된 모든 규제개혁 정책들에 대해서 체감도가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전반적인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혁 조치들이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표 III-20〉 규제개혁 조치 체감도별 전반적 평가

(단위: 명, %)

	N (%)	미흡	보통	충분
임신·출산진료비 확대***				
체감도 높음	153 (100.0)	39.2	40.5	20.3
체감도 낮음	361 (100.0)	45.7	46.5	7.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체감도 높음	265 (100.0)	37.0	47.2	15.8
체감도 낮음	267 (100.0)	52.8	40.1	7.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체감도 높음	273 (100.0)	36.3	48.4	15.4
체감도 낮음	241 (100.0)	51.0	42.3	6.6
기초노령연금 확대***				
체감도 높음	247 (100.0)	34.0	49.0	17.0
체감도 낮음	301 (100.0)	51.5	43.2	5.3
장애인 편의 증진***				
체감도 높음	261 (100.0)	33.7	48.7	17.6
체감도 낮음	258 (100.0)	50.4	43.8	5.8
근로자·다자녀 가구 보육료 확대***				
체감도 높음	259 (100.0)	34.0	51.7	14.3
체감도 낮음	285 (100.0)	54.0	40.4	5.6
행복e음 구축***				
체감도 높음	198 (100.0)	38.4	46.5	15.2
체감도 낮음	253 (100.0)	50.6	43.5	5.9

*p<.1 **p<.05 ***p<.01

현정부의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정책의 결과물로 시행된 여러 사업들의 체감도와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적인 영역 대신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들로 평가문항을 구성하기는 하였지만, 제도 자체를 잘 모른다는 응답은 항목별로 10% 내외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대상집단에 대한 홍보가 주효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제도의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모두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 설문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규제개혁 조치들이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임신·출산 진료비,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원 규모와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여전히 요구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년간의 규제개혁 조치들에 대한 성과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제도의 체감도 결과와도 연관되는 결과로서, 향후 다양한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할 경우 평가 결과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거의 모든 사업이 최근 3년 이내에 추진되어 대부분 정착 또는 확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도 여겨진다.

3. 향후 규제개혁 정책의 필요성

다음으로 앞으로 정부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규제개혁 정책들에 대한 필요성과 규제개혁을 통해 추구해야 할 목표 및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조사하였다.

먼저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현재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 시설은 거의 모두 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 생활시설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역에 정착한 시설로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생활시설과 해당 프로그램을 지역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지역 개방이라는 규제개혁 조치에 대해서 본 전화조사 응답자들의 대부분인 77.0%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1.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9.8%로 남성의 74.1%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전연령층에서 대체로 고르게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

났다. 직업별로는 기계·전기·운수·건설 노동계층(83.3%)과 주부(80.7%)들에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1〉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규제개혁의 필요성

(단위: 명, %)

	N (%)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전체	1,000 (100.0)	11.5	11.5	77.0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13.3	11.8	74.9
도지역	534 (100.0)	9.9	11.2	78.8
성별**				
남자	491 (100.0)	14.5	11.4	74.1
여자	509 (100.0)	8.6	11.6	79.8
연령***				
20대	175 (100.0)	5.7	19.4	74.9
30대	212 (100.0)	15.1	7.5	77.4
40대	222 (100.0)	10.4	10.8	78.8
50대	186 (100.0)	12.9	10.8	76.3
60대 이상	205 (100.0)	12.7	10.2	77.1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17.6	9.9	72.5
자영업	221 (100.0)	12.2	11.3	76.5
기계·전기·운수·건설노동	90 (100.0)	10.0	6.7	83.3
학생	110 (100.0)	4.5	20.0	75.5
주부	264 (100.0)	9.1	10.2	80.7
무직·기타	93 (100.0)	11.8	14.0	74.2

*p<.1 **p<.05 ***p<.01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국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 납부 및 기준 등에서의 공정성 확보 역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규제개혁 분야이다.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고소득 피부양자들의 고액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소득계층별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확대 등의 규제개혁 조치들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8%가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13.4%,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거주지역과 직업 계층별로는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과 연령에서는 다소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78.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들의 필요성 인정 응답은 69.5%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별로도 20대 응답자들의 경우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65.1%, 보통이라는 응답이 20.0%로 나타나 관련 규제개혁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단위: 명, %)

	N (%)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전체	1,000 (100.0)	12.8	13.4	73.8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13.7	12.2	74.0
도지역	534 (100.0)	12.0	14.4	73.6
성별***				
남자	491 (100.0)	12.4	9.4	78.2
여자	509 (100.0)	13.2	17.3	69.5
연령*				
20대	175 (100.0)	14.9	20.0	65.1
30대	212 (100.0)	12.3	13.7	74.1
40대	222 (100.0)	10.4	9.9	79.7
50대	186 (100.0)	15.6	11.3	73.1
60대 이상	205 (100.0)	11.7	13.2	75.1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10.4	13.1	76.6
자영업	221 (100.0)	12.7	10.9	76.5
가계 전가운수 건설노동	90 (100.0)	13.3	8.9	77.8
학생	110 (100.0)	15.5	16.4	68.2
주부	264 (100.0)	14.0	17.0	68.9
무직·기타	93 (100.0)	11.8	10.8	77.4

*p<.1 **p<.05 ***p<.01

건강보험과 더불어 주요한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국민연금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장애연금 수급기준과 다른 장애인 관련 제도들과의 기준 일원화 및 장애판정 기준의 일원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등이었다. 이러한 규제개혁 조치

들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은 71.5%였으며, 11.2%의 응답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특성별로도 필요성 인식도에 차이가 없었다.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비해 도지역 거주자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20대와 50대가, 무직 및 기타 직업군에 해당하는 응답자에게서 국민연금제도의 공정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23〉 국민연금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단위: 명, %)

	N (%)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전체	1,000 (100.0)	11.2	17.3	71.5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11.2	18.7	70.2
도지역	534 (100.0)	11.2	16.1	72.7
성별				
남자	491 (100.0)	11.6	14.9	73.5
여자	509 (100.0)	10.8	19.6	69.5
연령				
20대	175 (100.0)	8.6	18.3	73.1
30대	212 (100.0)	11.3	19.3	69.3
40대	222 (100.0)	13.1	16.2	70.7
50대	186 (100.0)	12.9	13.4	73.7
60대 이상	205 (100.0)	9.8	19.0	71.2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14.9	14.4	70.7
자영업	221 (100.0)	10.4	17.2	72.4
가계 전가운수 건설노동	90 (100.0)	12.2	20.0	67.8
학생	110 (100.0)	4.5	20.9	74.5
주부	264 (100.0)	13.3	18.2	68.6
무직·기타	93 (100.0)	5.4	15.1	79.6

*p<.1 **p<.05 ***p<.01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지원 확대 측면에서의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조치들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전화설문조사에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 이루어

지고 있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의 연령기준과 등급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규제개혁 조치들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76.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6.2%는 보통, 6.9%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지역, 성별, 직업 등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 별로는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 집단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30대(81.6%) 및 60대 이상(80.0%)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4〉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단위: 명, %)

	N	(%)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전체	1,000	(100.0)	6.9	16.2	76.9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6.9	16.7	76.4
도지역	534	(100.0)	6.9	15.7	77.3
성별					
남자	491	(100.0)	6.7	16.1	77.2
여자	509	(100.0)	7.1	16.3	76.6
연령**					
20대	175	(100.0)	4.6	20.6	74.9
30대	212	(100.0)	6.6	11.8	81.6
40대	222	(100.0)	7.2	20.7	72.1
50대	186	(100.0)	11.3	12.9	75.8
60대 이상	205	(100.0)	4.9	15.1	80.0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9.0	13.5	77.5
자영업	221	(100.0)	7.7	13.1	79.2
기계·전자·운수·건설·노동	90	(100.0)	10.0	16.7	73.3
학생	110	(100.0)	1.8	23.6	74.5
주부	264	(100.0)	6.4	16.7	76.9
무직·기타	93	(100.0)	4.3	19.4	76.3

*p<.1 **p<.05 ***p<.01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항목에 포함된 내용은 첫째,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육아휴

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출산 전후에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 등이었다.

조사 결과 87.3%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차별 규제 개선에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는 앞서 다른 규제개혁 조치들의 필요성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로서 응답자들은 공정한 사회 구현 및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성이 높은 조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이러한 규제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에서 필요성 인식도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III-25〉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규제개혁의 필요성

(단위: 명, %)

	N (%)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전체	1,000	(100.0)	3.1	9.6	87.3
지역***					
특별시·광역시	466	(100.0)	4.3	6.9	88.8
도지역	534	(100.0)	2.1	12.0	86.0
성별					
남자	491	(100.0)	2.6	9.2	88.2
여자	509	(100.0)	3.5	10.0	86.4
연령***					
20대	175	(100.0)	4.6	8.6	86.9
30대	212	(100.0)	4.2	5.7	90.1
40대	222	(100.0)	2.3	9.0	88.7
50대	186	(100.0)	1.6	7.5	90.9
60대 이상	205	(100.0)	2.9	17.1	80.0
직업*					
전문직·사무직	222	(100.0)	5.4	7.7	86.9
자영업	221	(100.0)	1.4	10.0	88.7
기계·전자·운수·건설·노동	90	(100.0)	4.4	3.3	92.2
학생	110	(100.0)	1.8	8.2	90.0
주부	264	(100.0)	2.7	12.1	85.2
무직·기타	93	(100.0)	3.2	14.0	82.8

*p<.1 **p<.05 ***p<.01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불편했거나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6.1%의 응답자들이 불편함을 경

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블루칼라 및 무직·기타 직업군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험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 비해 남성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III-26〉 현재 및 과거 일상생활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불편함 경험율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26.1	24.4	27.7
지역			
특별시·광역시	24.2	20.3	28.0
도지역	27.7	28.0	27.4
성별			
남자	24.4	-	-
여자	27.7	-	-
연령			
20대	12.6***	8.9***	16.5
30대	25.5***	17.9***	34.0
40대	25.2***	23.4***	27.0
50대	32.8***	32.6***	33.0
60대 이상	33.2***	41.9***	26.9
직업			
전문직·사무직	19.4***	14.7***	26.7
자영업	30.3***	29.8***	31.7
기계·전자·운수·건설·노동	32.2***	31.7***	33.3
학생	10.9***	9.4***	13.0
주부	29.2***	-	29.2
무직·기타	35.5***	38.6***	26.1

p<.05 *p<.0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주관식 문항 이용), 242건의 응답이 있었다. 이 가운데 거주 지역에 의료기관 또는 진료과가 부재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1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이 11.2%로 많았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나 약값이 비싸다는 응답이 9.9%로 나타났으며, 각종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응답이 9.1%로 조

사되었다.

〈표 III-27〉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불편한 사항

(단위: 명, %)

불편사항	N (%)	
전체	242	(100.0)
의료기관 및 필요한 진료과가 지역에 부재	29	(12.0)
건강보험료, 연금 보험료 등 보험료 부담이 과중	27	(11.2)
진료비와 약값 등이 비싸서 부담	24	(9.2)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	22	(9.1)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21	(8.2)
보육료 지원 확대(대상 및 지원금액)	19	(7.9)
장애등급, 치매등급 등 등급판정 완화	16	(6.6)
병원 및 의사들의 서비스 개선	15	(6.2)
편법과 허위신고 등으로 받는 혜택 색출	14	(5.8)
치과 의료보험 혜택 확대	11	(4.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8	(3.3)
제도에 따른 사각지대 방지	8	(3.3)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와 홍보 부족	7	(2.9)
약국이 일찍 문을 닫음	2	(0.8)
기타	19	(7.9)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하여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2.9%의 응답자들이 ‘서민생활 안정’을 지적하였다. 이는 각종 지원 확대와 생활 불편 해소 측면에서 규제개혁 조치들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던 앞서 문항의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규제개혁의 목표로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일자리 창출(27.6%)’ 역시 서민생활의 안정이라는 범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공정사회 구현’이 규제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5.7%였고, ‘성장동력 확충’을 지정한 응답자는 3.8%에 그쳤다.

〈표 III-28〉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추구해야 할 목표

(단위: 명, %)

	N (%)	공정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성장동력 확충
전체	994 (100.0)	15.7	27.6	52.9	3.8
지역					
특별시·광역시	464 (100.0)	18.3	27.6	50.4	3.7
도지역	530 (100.0)	13.4	27.5	55.1	4.0
성별					
남자	487 (100.0)	17.9	27.1	50.7	4.3
여자	507 (100.0)	13.6	28.0	55.0	3.4
연령***					
20대	175 (100.0)	13.1	26.9	57.1	2.9
30대	211 (100.0)	18.5	18.5	59.2	3.8
40대	221 (100.0)	17.2	23.1	55.2	4.5
50대	185 (100.0)	18.4	33.0	44.9	3.8
60대 이상	202 (100.0)	10.9	37.6	47.5	4.0
직업					
전문직·사무직	221 (100.0)	14.5	24.0	56.1	5.4
자영업	221 (100.0)	19.0	26.2	51.1	3.6
기계·전기·운수·건설·노동	89 (100.0)	20.2	16.9	57.3	5.6
학생	110 (100.0)	14.5	31.8	50.9	2.7
주부	262 (100.0)	12.2	29.0	55.7	3.1
무직·기타	91 (100.0)	17.6	40.7	39.6	2.2

*p<.1 **p<.05 ***p<.01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로 응답한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대상집단·영역별 형평성 제고’라는 응답도 21.2%로 높게 나타났다.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수요자·공급자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는 각각 18.0%, 16.1%, 15.3%였으며, ‘진입 규제 해소 및 문호 개방’을 지적한 응답자는 7.1% 수준이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규제 개혁을 절차의 간소화로 파악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평성 제고나 수요자 및 지원자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 등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볼 때, 규제개혁을 통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지원과 혜택 확대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29〉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추진시 기준

(단위: 명, %)

	N (%)		진입규제 해소 및 문화개방	정보 비대칭성 완화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간소	형평성 제고	수요자 및 공급자 지원확대	기준의 체계화, 일원화
전체	935	(100.0)	7.1	18.0	22.4	21.2	16.1	15.3
지역								
특별시·광역시	443	(100.0)	6.5	21.2	21.2	20.1	15.3	15.6
도지역	492	(100.0)	7.5	15.0	23.4	22.2	16.9	15.0
성별								
남자	472	(100.0)	7.8	17.4	24.8	21.6	13.1	15.3
여자	463	(100.0)	6.3	18.6	19.9	20.7	19.2	15.3
연령***								
20대	170	(100.0)	2.9	27.6	15.9	26.5	18.8	8.2
30대	206	(100.0)	5.3	12.1	23.3	28.2	15.5	15.5
40대	211	(100.0)	9.5	18.5	19.0	20.9	14.2	18.0
50대	173	(100.0)	7.5	16.2	25.4	19.1	13.3	18.5
60대 이상	175	(100.0)	9.7	16.6	28.6	10.3	19.4	15.4
직업***								
전문직·사무직	214	(100.0)	7.0	18.2	23.8	26.6	12.1	12.1
자영업	213	(100.0)	8.5	13.6	29.6	14.6	14.1	19.7
가계·전가·운수·건설·노동	79	(100.0)	3.8	21.5	20.3	24.1	13.9	16.5
학생	108	(100.0)	1.9	24.1	12.0	30.6	20.4	11.1
주부	240	(100.0)	8.3	17.9	17.9	18.8	21.7	15.4
무직·기타	81	(100.0)	9.9	17.3	28.4	16.0	12.3	16.0

*p<.1 **p<.05 ***p<.01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

제4장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

1. 구조개혁특구 운영 현황

일본은 규제개혁을 구조개혁 특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조개혁특구란 규제개혁을 일시적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하기 이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구조개혁 특구는 영구적으로 고착화된 일반적 의미의 특구와는 구별된다.

구조개혁 특구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부처는 내각관방 구조개혁특구추진실로서, 특정한 규제개혁을 일정 지역에 적용한 다음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어떤 규제개혁을 발굴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제안을 근거로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관방성은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이 가운데 시범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만한 사항을 선별하여 공지한다. 공지된 규제개혁 사항은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이를 받아 들여 자신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구조개혁특구추진실은 규제개혁 및 특구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민간,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접수하고 이를 관련 행정부처와 협의하여 특구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이 이와 같은 구조개혁 특구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있다. 오랜 기간 동안의 국가적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러한 수단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기초로 한 규제개혁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규제개혁사항에 대한 제안 공모에서 특구지정에 이르기까지는 8단계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첫 단계로서 구조개혁특구추진실에서 1년에 1~2회 정도 규제개혁 사항 제안을 모집한다. 제안의 공모에는 민간사업자나 지방공공단체, 개인 등이 응모자격이나 제안영역에 상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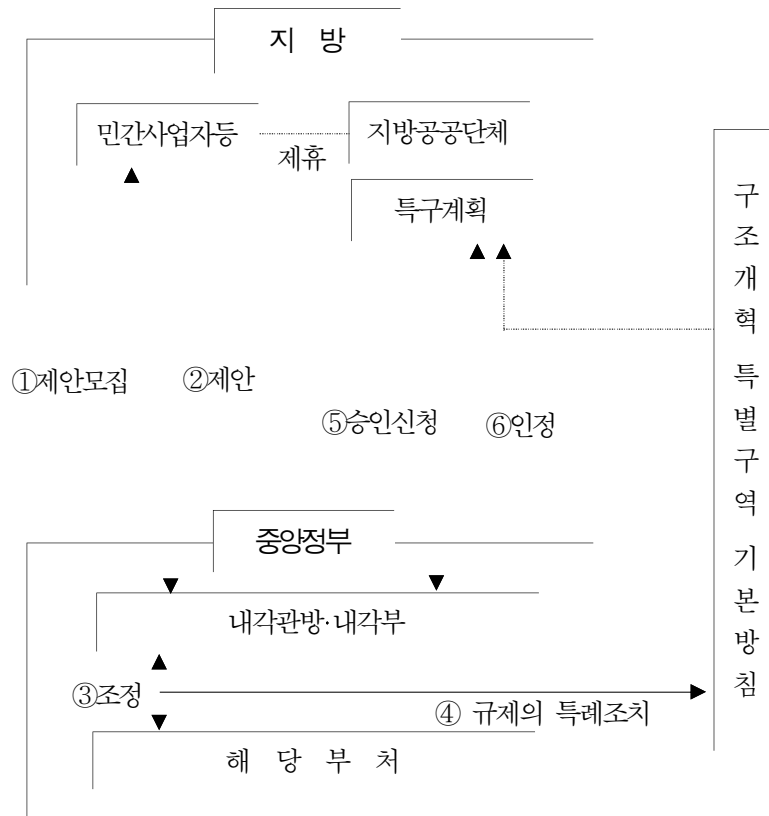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관련 정부부처와 구조개혁특구추진실 간의 협의 하에 제안사항 중에서 규제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선정한다. 여기서 선정된 규제개혁사항은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침」으로 매뉴얼화 하여 발표한다. 이 규제개혁 사항은 특례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법에 규정된 내용의 특례로 인정되어 시범사업 지역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침」에 수록된 각종 규제개혁사항 중에서 자신들이 시행해 보기를 희망하는 규제개혁 사항을 선정한 다음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한 특구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조개혁추진실에 승인을 신청한다.

이 때, 당초 해당 규제개혁 사항을 제안하지 않았던 지방공공단체도 특례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나, 승인 신청은 지방공공단체만이 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나 개인은 지방공공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하는 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로서 구조개혁특구추진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을 신청한 특구추진계획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수혜 대상자 집단의 구체성, 운영 일정의 명확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2] 일본의 구조개혁특구(규제개혁) 운영 절차



자료: 일본 내각부관방구조개혁특구추진실 내부자료

이상영외,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5.

2. 규제개혁 추진 현황

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규제개혁

구조개혁특구 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규제개혁 조치는 총 153건⁵⁾으로서 이중에서 총무성 소관의 규제개혁 조치가 31건으로 가장 많

5) 부록 참조

고, 후생노동성 소관이 29건⁶⁾, 경제산업성 26건, 문부과학성 21건⁷⁾, 국토교통성 15건 등이다.⁸⁾

지금까지 이루어진 후생노동성 소관의 규제개혁 조치 내용은 주로 사회복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 확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참여 및 외부위탁 확대, 시설설치 및 운영 기준 완화,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 확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자격확대와 관련하여, 2006년 10월 개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주를 확대하여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동도 지정통원 개호 시설이나 생활개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7년 3월 어린이집이 타 시설의 통폐합으로 인해 사적 계약에 의해 아동을 정원에 초과하여 받아들일 경우 어린이집 정원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6년 10월 정신지체자 통원 재활 시설을 신체 장애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가 인근에서 생활개호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개호보험법에 의한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법무성과의 공공소관 1건 포함

7) 문부과학성 소관 규제개혁 조치 중에는 취학시의 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과 관련된 규제 개혁 1건이 포함되어 있음.

8) 이외 경찰청 3건, 문부과학성(인사원) 3건, 금융청 2건, 법무성 6건, 외무성 2건, 재무성 6건, 농림수산성 6건, 환경성 4건 등이다.

〈표 IV-1〉 일본의 규제개혁: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 확대

규제의 명칭	구 분	내 용
지정 통원 개호 사업체 등의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수용사업	규제개혁 내용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가, 지정통원개호사업체를, 장애아가 장애인 주간 서비스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새로운 제도를 통해 장애인 및 장애아가 지정 통원 개호 사업체를, 장애아가 생활 개호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입각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171호)
	실시 시기	2006년 10월1일 실시(조치 완료)
어린이집이 사적 계약 아동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다른 시설의 통폐합 등으로 인해 사적 계약 아동을 현행 정원을 초과하여 받아들일 경우, 어린이집 정원을 개정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인정 어린이집 제도에 입각하여 전국에 적용하며, 규제 소관 부처는, 본 특례 조치의 내용이 인정 어린이집 제도에 따라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리도록 한다. 단, 현재 본 특례 조치를 활용 중인 지역의 경우, 규제 소관 부처는, 각 시설이 인정 어린이집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해 잘 홍보하고, 인정 어린이집으로 이행하기까지 본 특례 조치에 따라 실시 중인 내용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어린이집의사적계약아동의탄력적으로수용관련취급에대하여(2007년3월30일자 제0330032호)
	실시 시기	2007년 3월30일 실시(조치 완료)
정신지체자 통원 갱생시설의 신체장애자 수용 사업	규제개혁 내용	정신지체자 통원 갱생시설은, 18세 이상의 정신지체자를 입소시켜 보호하고, 갱생에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하는 시설이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3개 장애가 일원화되어 있어, 장애 구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체계에 따라 전국에서 실시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장애인 자립 지원법(2005년 법률 제123호)
	실시 시기	2006년 10월1일 시행(조치 완료)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규제개혁 내용	사전에 이용 기간(퇴소일)을 정하여 치매 고령자 그룹홈을 이용할 수 있다.

개호 단기 이용 사업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①일정 연수를 받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②그룹홈 개원 후 3년 이상 경과하는 등의 요건을 설정한 다음 이를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126호)
	실시 시기	2006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의 장애아(자) 수용 사업	규제개혁 내용	장애인 또는 장애아가, 근처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법(2005년 법률 제123호)에 규정된 생활 개호 등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개호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호)에 규정된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기준 해당 생활 개호에 한하여,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아동복지시설 최저 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 한 성령(2010년 후생노동성령75호)
	실시 시기	2010년 6월1일 실시(조치 완료)

②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참여 및 외부 위탁 확대

사회복지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참여 및 외부 위탁확대와 관련하여 여서는, 2007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특별양호노인ホーム의 관리자로서 주식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2006년 4월 유아원, 모자 생활지원 시설, 아동양호시설, 정서장애아 단기 치료시설 및 아동자립지원 시설의 조리업무 담당자를 외부에서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3월에는 지체장애아 시설, 제1종 및 제2종 자폐아 시설, 지체장애자 통원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청각 장애인 시설, 난청 유아 통원 시설, 지체 장애아 시설, 자체 장애 아동요양보호 시설, 중증 심신장애아 시설의 조리 담당자를 외부에서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5년 시정촌 소관의 보육 관련 사무를 해당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의 운영 개선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성과 후생노동성 공동 소관 규제개혁으로서, 형사시설이 병원 등의 관리를 공적 의료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공적 의료기관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V-2〉 일본의 규제개혁: 기업의 참여 및 외부위탁 확대

규제의 명칭	구 분	내 용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양호노인홈 관리위탁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양호노인홈 관리 위탁처로 주식회사 등을 인정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양호노인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상의 지정 관리자 제도에 따라, 주식회사 등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한 통지를 발송하고, 이를 전국에 적용한다. 또한, 전국 도도부현 과장회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사업자 등의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통지 내용을 알린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지자체가 설치한 개호 서비스 제공 시설의 지정 관리자 제도 취급에 대하여(2007년 3월30일자 老計発0330006호, 老振発0330002호, 老老発0330004호)
	실시 시기	2007년 3월30일 실시(조치 완료)
아동복지시설의 조리 업무 담당자 파견 도입 사업	규제개혁 내용	유아원, 모자 생활지원 시설, 아동양호시설,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 및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조리 업무 담당자를 외부에서 파견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구조 개혁 특별 구역의 유아원 등의 조리 업무 담당자의 외부 파견 전국 적용에 대하여(2006년 3월17일 雇児発 제0317001호)
	실시 시기	2006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장애아 시설의 조리 업무 외부	규제개혁 내용	지체장애아 시설, 제1종 자폐아 시설, 제2종 자폐아 시설, 지체장애아 통원시설, 시각장애아 시설, 청각장애아 시설, 난청 유아 통원시설, 지체

위탁 사업		장애아 시설, 지적장애 아동요양보호 시설 및 중증 심신 장애아 시설의 조리 담당자를 외부에서 파견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구조 개혁 특별 구역의 '장애아 시설의 조리 업무 외부 위탁 사업'에 대하여' 제0331011호
	실시 시기	2006년 3월31일 2006년 3월3 1일 시행(조치 완료)
보육 실시 관련 사무를 교육위원회에 위임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시정촌의 권한에 속하는 보육 실시 관련 사무를, 해당 시정촌에 설치된 교육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국가의 보조금 등의 정리 및 합리화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할 법률
	실시 시기	2005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 외부 반입 방식 허용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립 어린이집은,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3세 이상 아동에 대한 급식을,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국에 적용한다. 단, 어린이의 발달 상황에 따른 대응, 알레르기 아동/허약체질 아동에 대한 대응, 식사 교육 등의 관점을 중시하여,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좋은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이를 알려나가며, 급식 제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아동복지시설취지기준등의일부를개정한성령(2010년후생노동성령제75호)어린이집의식사제공에대하여(2010년6월1일雇児発0601제4호)
	실시 시기	2010년 6월1일 시행(조치 완료)
특정 형사시설의 병원 등의 관리위탁을	규제개혁 내용	형사시설이 병원 등의 관리를 공적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역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에	형사시설의 병원 등의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적용되는 내용	2007년 12월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벽지 이외에 의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의사 근로자 파견 시스템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구조 개혁 특별 구역법 및 경쟁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9년 법률 제33호)
	실시 시기	2009년 5월1일 시행(조치 완료)

③ 시설설치 및 운영 기준 완화

시설설치 및 운영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2006년 4월 단층으로 건축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될 경우 내화 및 준내화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4년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개호 요원,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리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리실, 세탁실 및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아동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체 장애자 단기입소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개호 요원,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리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리실, 세탁실 및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단기 입소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단독형 지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요건을 갖출 경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4월에는 구호시설, 갱생시설, 숙소 제공 시설에 대해 50명 이상 입소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을 30명으로 완화하였다.

특별양호노인홈이 주시설에 부가하여 위성형 거주시설을 설립할 경우 해당 거주시설의 생활상담원 등의 인원 기준 및 복도 폭 등 설비 기준을 완화하였다. 당초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단계에는 주 시설의 입소인

원을 줄여야 하며, 위성형 거주 시설에 기능훈련 지도원, 개호지원 전문원 등을 각각 1명씩 두어야 한다는 요건을 설정하였으나, 주 시설의 직원을 통해 위성형 거주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장애인 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생활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장애인 위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사정을 고려하여 입주 정원이 4명 이상 7명 이하로 되어 있던 그룹홈에 대해 전체적으로 최저정원 4명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되도록 하였으며, 1개 주거 당 2명 이상의 이면 되도록 하였다.

보일러 등의 개방 검사 주기에 대하여 보일러 등의 운영실적, 시간경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잔여 수명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검사주기를 4년에 1회에서 8년에 1회로 연장하였다.

〈표 IV-3〉 일본의 규제개혁: 시설설치 및 운영 기준 완화

규제의 명칭	구 분	내 용
보일러및 제1종 압력용기 개방 검사 주기 연장 사업	규제개혁 내용	보일러 등의 개방 검사 주기는 현재 최장 4년에 1번이나, 현행 규정을 통해 담보되는 안전성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할 경우, 개방 검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보일러 등의 개방 검사 주기에 대하여, 보일러 등의 운전 실적, 시간 경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남은 수명 평가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8년에 1번으로 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보일러 등의 개방 검사 주기 관련 인정 제도에 대하여'(2008년 3월27일자 基発 제0327003호)
	실시 시기	2008년 4월1일 시행
내화 건축물 및 준내화 건축물 요건을 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단층으로 건축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추고, 또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내화 및 준내화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본 특례 조치를 통해 실현된 내용을 확보한다. 단, 폐해 예방조치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필요 최소한의 조치만 취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지정재택서비스 등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 '(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33호) '지정 지역 밀착 형 서비스의 사업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34호) '특별양호 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38호) '양 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 부를 개정한 성령'(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57 호) '신체장애자갱생지원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76호) '통지를 통해 조치가 이 루어진 구조 개혁 특별 구역의 '내화 건축물 및 준내화 건축물 요건을 적용에서 제외함으로 써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전국 적용에 대하여'(2006년 3월31일老発 제0331004 호)
	실시 시기	2006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인원 및 설비 요건을 완화한 단독형 아동 단기 입소 사업	규제개혁 내용	아동 단기 입소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개호 직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 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개호 직 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 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단독형 아동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관련 단독 형 단기 입소 사업 등에 대하여 (2004년 3월29 일자 障害発 제0329003호)
	실시 시기	2004년 4월1일 실시(조치 완료)
구호시설 정원 요건의 완화	규제개혁 내용	사회적 입원환자 등을 받아들일 곳을 확보하 기 위해, 소규모 구호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 는 경우, 현행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구호시 설 정원 요건을 30명 이상으로 줄인다.
	전국에	현행50명 이상의 인원이 입소 가능한 규모이

	적용되는 내용	어야 하는 구호시설, 갱생시설 및 숙소 제공 시설의 규모를, 30명 이상의 인원이 입소 가능한 규모로 줄인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구호시설, 갱생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숙소 제공 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최저 기준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4년 후생노동성령 제48호)
	실시 시기	2004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신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을 하는 시설을 확대	규제개혁 내용	해당 사업체의 실정에 따라 야간에 적당한 인원수의 종사자를 배치하고, 거실, 욕실 및 세탁실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보호를 실시할 수 있을 경우, 신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신체장애자 통원 복지 시설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개호 직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단독형 신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관련 단독형 단기 입소 사업 등에 대하여 (2004년 3월29일자 障害発 제0329003호)
	실시 시기	2004년 4월1일 실시(조치 완료)
인원 및 설비 요건을 완화한 단독형 정신지체자 단기 입소 사업의 허용	규제개혁 내용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개호 직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정신지체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개호 직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단독형 정신지체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관련 단독형 단기 입소 사업 등에 대하여 (2004년 3월29일자 障害発 제0329003호)
	실시 시기	2004년 4월1일 실시(조치 완료)
위성형 거주	규제개혁	기존의 특별양호노인홈이, 입소정원을 줄이고,

시설 설치 사업	내용	각방유닛케어형 시설로 바꾸는 등의 요건을 갖추며, 또한 해당 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성형 거주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위성형 거주 시설의 생활상담원 등의 인원기준 및 복도 폭 등의 설비 기준을 완화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본체 시설의 입소 정원을 줄인다는 요건을 철폐함과 동시에, 위성형 거주 시설에 기능훈련 지도원, 개호 지원 전문원 등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본체 시설 직원을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처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들을 두지 않아도 되는 등 본 특례 조치를 통해 실현된 내용을 더욱 완화하여,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34호)' '구조 개혁 특별 구역의 '위성형 거주 시설 설치 사업'의 전국 적용에 대하여(2006년 3월31일社援発令0331029호/老発令0331018호)
	실시 시기	2006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위성형 장애인 시설 설치 사업	규제개혁 내용	입소 시설 이용자의 지역 생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룹홈 등 본래의 지역 이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과 밀접한 연계를 확보한 가운데, 소규모 장애인 시설(이하 '위성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새로운 제도를 통해 설치 가능해진 '케어홈'에서, 위성시설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입각한 지정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171호)' 및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입각한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172호)
	실시 시기	2006년 10월1일 시행(조치 완료)
입소정원을 3명 이상 7명 이하로 정한 지정 공동 생활	규제개혁 내용	주택 사정 상, 입주 정원이 4명 이상 7명 이하로 정해져 있는 현행 지정 공동 생활 원조 사업(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장애인의 지역 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판단하여,

원조 사업		입주 정원 3명 이상 7명 이하의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사업자 전체 차원에서 최저 정원(4명)을 채우면 되며, 1개 주거 당 이용자는 2명 이상이면 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입각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171호)
	실시 시기	2006년 10월1일 시행(조치 완료)

④ 자원의 공동활용과 운영의 합리화

2005년 5월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를 합동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6년 4월 시설 훈련 등의 지원비를 월단위로 산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조공할 수 있도록 일단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신지체자의 지역생활 원조 관련 재택생활 지원비를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표 IV-4〉 일본의 규제개혁: 자원의 공동활용과 운영의 합리화

규제의 명칭	구 분	내 용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의 합동 활동 사업	규제개혁 내용	공동이용지침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를 합동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공동 이용 지침에 따라 공동 이용하게 된 시설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의 합동 활동 및 보육실 공동 이용과 관련된 취급에 대하여'(2005년 5월13일자 17文科初 제262호/雇児発 제0513003호)
	실시 시기	2005년 5월13일 실시(조치 완료)

일당 단위를 적용한 시설 훈련 등의 지원 사업	규제개혁 내용	시설 훈련 등의 지원비는, 월 단위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일당 단위로 산정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새로운 제도에서는, 시설 훈련 등의 지원비를 일당 단위로 산정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신체장애자 복지법에 입각한 지정 시설 지원에 필요한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210호) '정신지체자 복지법에 입각한 지정 시설 지원에 필요한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211호)
	실시 시기	2006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일당 단위를 적용한 정신지체자 지역 생활 원조 사업	규제개혁 내용	정신지체자 지역 생활 원조 관련 재택 생활지원비는, 월 단위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일당 단위로 산정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새로운 제도에서는, 공동 생활 원조 관련 개호 급여/훈련 등 급여(2006년 3월31일까지 각각 정신지체자 지역 생활 원조, 재택 생활 지원비)를 일당 단위로 산정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입각한 지정장애 복지서비스 및 기준 해당 장애 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169호)
	실시 시기	2006년 4월1일 시행(조치 완료)

⑤ 고용, 건강 등 기타 규제 합리화

문부과학성 소관의 규제개혁으로서, 취학시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은 11월 30일까지였으나 특구 내 시정촌에서 특구 외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한 어린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2월 31일까지 적절한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고용관련 규제개혁으로, 2004년 4월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시정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도서지역을 '공공직업안정소까지의 교통이 불편하여 해

당 공공직업안정소에 직접 구인 또는 구직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직업안정법 제11조 제1항)으로 지정하여, 해당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시정촌장이 구인 및 구직 신청을 공공직업안정소에 중개하는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3월에는 공공직업안정소와 민간 직업소개기관이 공동창구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상태에서 구인 및 구직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비밀 준수 의무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2004년 4월, 지자체가 직업 경력 형성 촉진 보조금 신청 사무를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5년 3월 현립 농업대학교가 특구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표 IV-5〉 일본의 규제개혁: 고용, 건강 등 기타 규제 합리화

규제의 명칭	구 분	내 용
도서지역 시정촌의 공공직업안정 소에 대한 중개 사업	규제개혁 내용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특례 대상인 도서지역의 기준(구인/구직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도서지역이고, 또한 해당 도서지역 내 한 지역(시정촌) 내에 가장 인구가 많은 지구에서, 선박,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관할 공공직업안정소를 왕래할 경우, 왕복 시간이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일 것)에 적합한 도서지역 내 지역(시정촌)이 특구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시정촌장이 공공직업안정소의 구인/구직 중개 사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도서지역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 포함된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시정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생노동대신이, 해당 도서지역을 '공공직업안정소까지의 교통이 불편하여 해당 공공직업안정소에 직접 구인 또는 구직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직업안정법 제11조 제1항)으로 지정하여, 해당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시정촌장이 구인 및 구직 신청을 공공직업안정소에 중개하는 사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도서지역 시정촌 관련 직업안정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입각한 지정 취업에 대하여(2004년 3월 22일자 職發 제0322002호)
	실시 시기	2004년 4월1일 실시(조치 완료)
관민 공동창구 설치를 통한 직업 소개 사업	규제개혁 내용	공공직업안정소와 민간 직업소개기관이 공동창구를 설치할 경우에 구직정보 및 구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비밀 준수 의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공공직업안정소와 민간 직업소개기관이 공동창구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가운데, 구인/구직정보를 상호간에 연락/회부하는 것이 비밀준수의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지를 통해 분명히 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지자체가설치한관민공동창구에대하여(2005년3월 24일자職發제0324001호)
	실시 시기	2005년 3월31일 실시(조치 완료)
지자체에 의한 직업경력 형성 촉진 보조금 신청 사무 대행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자적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인정한 교육 훈련 관련 직업 경력 형성 촉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 내의 직업 능력 개발 계획에 입각한 연간 직업 능력 개발 계획을 작성하고, 지급 창구(고용/능력개발기구)를 통한 내용 조회에 대한 대응 등의 신청 사무를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지자체가 지역의 인재육성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당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적절하게 사업 내의 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업 경력 형성 촉진 보조금 신청 사무를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지자체의직업경력형성촉진보조금신청사무대행의 전국화에대하여(2004년4월1일자能發제0401010호/제0401011호)
	실시 시기	2004년 4월1일 실시(조치 완료)
농업인 연수교육시설 의 기관장의 무료 직업	규제개혁 내용	특구인정을 받은 지자체의 경우, 현립 농업대학교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
	전국에	현립 농업대학교가, 특구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소개사업	적용되는 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농업인연수교육시설의장이 실시하는 무료 직업소개 사업에 대하여(2005년 3월 31일 자 職發 제0331002호)
	실시 시기	2005년 3월 31일 실시(조치 완료)
시정촌에 의한 광견병 예방원 임명 사업	규제개혁 내용	광견병 예방원 임명, 포획인 지정, 개 억류 사무 등을 시정촌이 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광견병 예방법(1950년 법률 제247호)을 개정하여 대응 예정
	실시 시기	신속히 조치
취학 시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 연장	규제개혁 내용	현재 취학시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나, 특구 내 시정촌에서 다른 특구 외 시정촌으로 이사한 어린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12월 31일까지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취학 시에는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통학 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 취학 시의 건강진단을 12월 1일 이후에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아래 각 호의 모든 조건을 갖출 경우 12월 31일까지 적절한 시기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① 맹/농/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성명 및 맹/농/특수학교에 취학시킨다는 내용의 통지를 12월 31일까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② 12월 중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한 어린이에 대하여 학교 보건법 제4조에 규정된 건강진단 및 같은 법 제5조에 규정된 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할 것
	전국적용을 위한 법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정령(2004년 정령 제142호)
	실시 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나. 규제개혁 관련 특구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된 규제개혁은 그 이전에 특구 운영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들이다. 앞에서 제시된 규제개혁 사항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특구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호보험법에 의한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은 홋카이도 구로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를 운영한 결과이다. 구로시 이외에도 아키타시 지역밀착 공생형복지 특구, 토야마 현의 토야마형 복지서비스 추진 특구, 오오가키시의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특구, 이즈모시 복지 지역발전 추진 특구, 하가시 지역생활 소규모 다기능서비스 특구, 아이난쵸 지역 공생형복지서비스 특구, 오오무타시 안심 서로 돌보는 지역밀착형 지역발전 특구, 쿠루메시 지역밀착 공생형복지 특구, 타루미즈시 장애아(자) 생활지원 소규모 다기능서비스 특구 등이 운영되었다.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를 운영하였다. 몇 군데의 예를 들면, 홋카이도 사리군 기요사토쵸의 신토불이를 통한 풍요로운 급식 특구, 홋카이도 몬베츠군 유베츠쵸의 자기고향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특구,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기네마마치의 어린이집/학교에서 일관된 식사교육을 통한 가네아마인 만들기 특구, 야마가타현 모가미마치의 식사교육 기능 통합을 통한 차세대 육성 튼튼 특구, 야마가타현 히가시오키타마군 타키하타마치의 타카하타마치 사이좋은 급식 특구, 아바라기현 이나시키군 아미마치의 아미마치 활기찬 육아 급식 특구 등이다.

시정촌의 광견병 예방원의 임명과 관련하여서는 홋카이도 니캇쵸군 니캇쵸의 니캇쵸 광견병 예방 특구 운영에 따른 결과이다.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광견병 예방원 임명, 포획인 지정 및 개 억류 등을 시정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견병 예방원을 배치하고, 광견병 예방 접종 지도 등 지역에 토착 동물과 관련한 지도 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치원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 등의 합동 활동사업,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의 합동활동사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이용사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운난시 구역의 일부(구 시마네현 오오하라 군 가모마치)에서 실시한 운난시 육아 개구쟁이 특구가 추진되었다. 운난시에서는 2005년 4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 시설을 개원하였는데, 이 시설에서는 유치원 원아가 귀가하기 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교육/보육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활동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공동 이용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어린이집에 적을 둔 4세/5세 아동에 대해 공립 어린이집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를 통해 심신 발달에 맞는 일관된 양육 방침을 적용하고 미래를 짚어질 취학 전 아동들이 연령 및 가정환경 등으로 구분되는 일 없이 다른 연령 아동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표 IV-6〉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운영사례

특구 명칭	구 분	내 용
구시로시 아칸(阿寒)호 온천지구 공생형 복지 서비스 특구	추진 지자체	홋카이도 구시로(釧路)시
	구역범위	구시로시 구역 일부(아칸호 온천지구)
	특구 개요	구시로시의 복지 서비스 기반 정비는 주로 도시부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구시로시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아칸호 온천지구 에, 2009년 12월 이 지구 최초의 복지서비스 제공 거점인 공생형 다기능 시설이 개설되었 다. 그 중심이 된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아(자)도 수용함으로써, 지구 내에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아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지역의 normalization 의식을 고조시키는 계기로 삼아, 관광지로서의 hospitality를 향상시킨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자)를 받아 들이는 사업
신토불이를 통한 풍요로운 급식	추진 지자체	홋카이도 기요사토쵸(清里町)

특구	구역범위	홋카이도 사리(斜里)군 기요사토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여성의 사회참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육아 지원 및 보육의 질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의 보육 및 부모에 대한 지원의 장으로서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기 고장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식사 내용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집/초등학교/중학교의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급식 식자재 구입 일원화 및 급식 조리사의 적절한 배치 등을 통하여 급식 조리 업무와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효율화 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어린이집의급식을외부에서반입하는것을허용
자기 고장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홋카이도 유베츠쵸
	구역범위	홋카이도 몬베츠(紋別)군 유베츠쵸(湧別町) 지역 전체
	특구 개요	가미유베츠쵸(上湧別町)/유베츠쵸는 육아 지원과 식사 교육을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쵸(町)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 센터에서는 이 지역의 신선하고 풍부한 농산물과 어패류를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맛별이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위의 2개 쵸(町)내 어린이집에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원래 총 4곳의 어린이집에서 각각 조리를 하여 식사로 제공하였으나, 조리 및 식자재 구입이 상당히 비경제적인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여, 쵸(町)내 학교 급식 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측에 제공함으로써, 신도불이를 배려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식습관을 정착시키고자 한다. 또한 급식 식자재 구입 일원화를 통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해 진다.
	규제특례조치	공립어린이집의급식을외부에서반입하는방식을 허용하는사업
니캇뿌쵸 광견병 예방 특구	추진 지자체	홋카이도 니캇뿌쵸(新拓町)

	구역범위	홋카이도 니캇뿌군 니캇뿌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현재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광견병 예방원 임명, 포획인 지정 및 개 억류 등을 시정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을 망라하여 광견병 예방원을 배치하고, 들개 발생시 즉시 대응 및 미등록 견 해소, 광견병 예방 접종 지도 등, 지역에 뿌리내린 동물지도 활동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육동물의 적정한 사육을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시정촌에 광견병 예방원의 임명
아키타시 지역 밀착공생형복 지특구	추진 지자체	아키타(秋田)현 키타시
	구역범위	아키타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아키타시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활용하여, 기존 해당 시설에서 장애아(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시내 지역 전체적으로 장애 유무 및 연령 구분 없이 복지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본 계획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도 장애아(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장애아(자)의 지역에서의 자립을 촉진하고, 아키타시형 복지 서비스를 가일층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집/학교 에서의 일관된 식사 교육을 통한 가네아마치인 만들기 특구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추진 지자체	아마가타(山形)현 가네아마마치(金峯町)
	구역범위	아마가타현 모가미(最上)군 가네아마마치 지역 전체
	특구 개요	가네아마마치에서는 현재 공립 어린이집에서 독자적으로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립 초중학교의 급식은 공동 조리장에서 조리하여 학교로 운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급식은 지역의 방침인 '유아기로부터 일관된 교육'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어린이집 급식을 공동조리장에서 조리하여 반입함으로써, 동일 메뉴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영양과 건강, 식자재 생산 등에 대해 일관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원아·아동 학생의 보호자 등이 생산하는 자기 고장 생산품을 소비(신토불이)함으로써 기간 산업인 농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식사 교육 기능 통합을 통한 차세대 육성 튼튼 특구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추진 지자체	아마가타현 모가미마치(最上町)
	구역범위	아마가타현 모가미군 모가미마치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모가미마치는 유치원/초등학교 일환(一環) 교육이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지도 기준인 '모가미마치 신 유아 교육 과정'을 책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를 위하여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식사 교육' 신도불이 식사 교육을 기본 목표로 한 종합적인 식사 교육 기능을 모가미마치 학교 급식 센터에 부여함으로써, 모가미마치의 독자적이고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한다.
타카하타마치 사이 좋은 급식 특구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추진 지자체	아마가타현 타카하타마치(高畠町)
	구역범위	아마가타현 히가시오키타마(東置賜)군 타카하타마치 지역전체
	특구 개요	타카하타마치 공립 어린이집은 급식 식자재를, 소량 주문이 가능한 현지 업자에게서 조달하고 있는데, 공립 어린이집 3곳 중 정원 미달인 니이쥬쿠(二井宿) 어린이집의 경우, 현지 업자가 폐업하여, 급식 업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소량 주문이기 때문에 먼 곳의 업체에서 식자재를 조달하기는 어려우므로 근처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반입해 들여오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과제가 많아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설비 등의 여력이 있는 다른 공립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급식을 반입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사이타마현 서비스 관리 책임자 자격 요건 탄력화 특구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
	추진 지자체	사이타마현
	구역범위	사이타마현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사이타마현은 장애인 지원 계획에 입각하여,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조합한 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근거한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체 등의 수를 늘려 왔으나, 사업체 지정 기

브레멘 공생형 서비스 추진 특구		준 미달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특례를 활용하여, 서비스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체 등을 더욱 늘림으로써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기회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서비스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 탄력화 사업
	추진 지자체	치바현 이스미시
	구역범위	이스미시 지역 전체
브레멘 공생형 서비스 추진 특구	특구 개요	치바현은 민간과 행정이 합동으로 시책을 기획/전개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의 대상자 횡단적인 시책을 목표로 한 '건강복지치바방식'을 통해, '누구나 있는 그대로/사람답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브레멘형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자)를 수용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이 자기가 익숙한 지역에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횡단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치바현이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도야마형 복지 서비스 추진 특구	추진 지자체	도야마현 도야마시, 타카오카(高岡)시, 타테야마마치(立山町)
	구역범위	도야마시 및 타카오카시 및 나카니카와(中新川)군 타테야마마치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도야마현에서는 도야마형 주간 서비스 추진 특구 및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활용하여, 다수의 지정 통원 개호 사업체 및 기준 해당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장애 유무 및 연령 구분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도야마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본 계획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에 장애아(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아(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 촉진될 것이며, 도야마형 복지 서비스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운난시 육아 개구쟁이 특구	추진 지자체	시네마현 운난(雲南)시

	구역범위	운난시 구역의 일부(구 시마네현 오오하라(大原)군 가모마치(加茂町))
	특구 개요	2005년 4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 시설을 개원할 예정인데, 이 시설에서는 유치원 원아가 귀가하기 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합동 교육/보육활동을 실시한다. 이 합동 활동 실시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공동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합동 활동을 하는 어린이집에 적을 둔 4세/5세아에 대하여, '공립 어린이집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한다. 이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를 통해 심신 발달에 맞는 일관된 양육 방침에 따라, 미래를 짚어질 취학 전 아동들이 연령 및 가정 환경 등으로 구분되는 일 없이 다른 연령 아동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커나가는 환경과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유치원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 등의 합동 활동사업,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의 합동활동사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이용사업, 공립어린이집의 급식 외부 반입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일본의 규제개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특구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개인 등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추진한다.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는 도도부현일 수도 있으며, 시정촌 또는 그 이하의 지역단위로도 추진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규제개혁과제 발굴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구운영을 약 3년 정도 운영한 다음 그 성과를 평가하며, 어떤 경우는 특구운영을 연장하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은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evidence)에 입각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

련된 사항이 많으며, 보건의료분야는 규제개혁사항이 거의 없다. 어떤 국가이든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상 다양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들이 관련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보건의료체계의 기본틀이 구축되어 있어서 규제개혁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본의 경우도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큰 틀에서의 변화는 규제개혁 차원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제개혁의 초점이 진입장벽 해소나 지원대상 확대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외부 급식 반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로 운영된 결과로서 민간급식업체에 대한 문호개방의 의미를 가진다.⁹⁾ 이 특구를 운영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이용하여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부 위탁업체로서 대형급식 업체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특성을 살린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특별양호노인홈의 관리자로서 주식회사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조리담당자를 외부에서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외부에 대한 문호 개방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시설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의 설립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규제개혁 사항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은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와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가 많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도분야에서는 기존의 틀을 바꾸기 위한 개혁이나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특구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개혁 사항은 기존의 관련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특례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관련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특별법

9) 부록 참조

에 의해 특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단계에서는 기존의 관련법을 개정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사례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근거를 기반으로 한 규제개혁은 규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모든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시의성을 저해하고 단기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집단 간 의견이 상충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 전략

제5장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 전략

1. 규제개혁의 특성

가. 규제개혁 목표와 해당 정책영역의 고유목표 간의 조화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규제가 분류상으로 속한 정책영역 상의 고유 정책목표간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 존재하는 개혁 대상 규제가 ① 고유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② 일정부분 기여하더라도 국민의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경우, ③ 고유 정책목표에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고유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규제에 의한 부(-)순편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편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규제가 존재하는 원인은 규제가 탄생할 당시와 다르게 사회적, 제도적 여건이 변화하였거나, 해당영역의 정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현존 규제가 해당 정책영역의 목표 달성이 일정 부분 기여하더라도 그로 인한 편익이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경우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우선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여 비교하는데 따르는 기술적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편익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 대상집단에서 주로 발생할 경우 이 집단에서의 편익을 무시한 채 사회 전체적인 비용만 고

려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특정규제가 고유 정책목표에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존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타 사회적 이유로 해당규제를 완화거나 폐지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아, 해당 영역의 정책목표 달성을 희생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어느 경우이든 단순히 규제개혁으로 발생하는 편익만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규제개혁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 해당정책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해당정책영역의 정책목표를 고려한 규제개혁의 입체적 추진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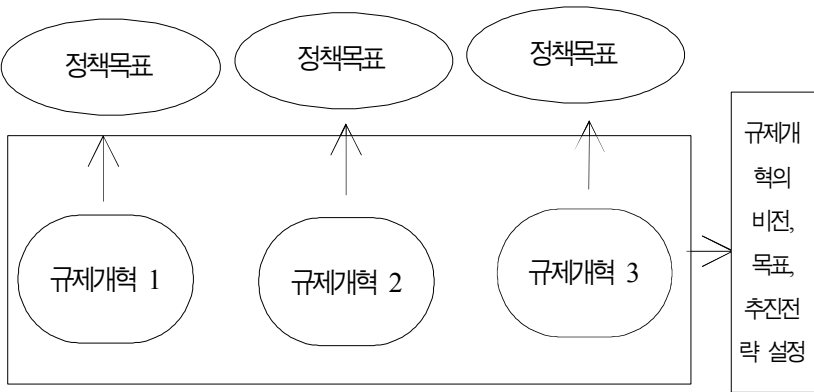
국민의 권익과 편의 증진이라는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목표만을 고려하여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수립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규제가 속한 해당 정책과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며, 규제개혁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기 쉽고 각종 규제개혁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제개혁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정책간 연계 차원에서 개혁대상 규제가 속한 정책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규제개혁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선정과 개혁방향, 추진방법 설정 등은 해당정책의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영역에 걸쳐 국민의 권익 증진이라는 평면적인 목표 측면에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규제개혁이 국정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전체적인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맞게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규제개혁 그 자체로서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역의 각각의 규제들이 그러한 정책 목표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각각의 규제개혁들을 총괄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도 설

정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정책목표 1, 2, 3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규제개혁 1, 2, 3을 추진할 경우 이러한 규제 개혁들의 전체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림 3] 정책목표와 규제개혁의 목표



이렇게 함으로써 산발적이고 ad-hoc 방식의 규제개혁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규제간 조화를 이루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위한 중점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한 다음, 이 정책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다. 규제개혁에 따른 편익의 분배를 고려한 규제개혁

일반적인 규제개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전은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규제란 국민이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그 규제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이 더 보장되기도 한다. 규제의 본연의 취지가 공

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폐지하는 것보다 국민의 권익이 더 많이 보호된다면 그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공의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규제를 폐지하는 것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더 많이 보호할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사회’란 여러 가지 측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로 규제개혁 이전에 국민에게 보장되던 권익이 규제개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규제개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관련하여, 국민전체에 대해 순편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정(+)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나머지 계층은 편익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정(+)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부(-)의 순편익이 발생할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일차적인 전제조건은 전체적으로 정(+)의 순편익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계층에는 정(+)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부(-)의 순편익이 발생할 경우, 양 계층의 편익을 어떻게 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규제개혁의 효과가 집단 간에 상호 다르게 작용할 때 누구에게 중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하여 공리주의적 입장(utilitarian), 평등주의적 입장(egalitarian), 존 롤즈(J. Rawls)적 입장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벤담(J. Bentham)이 주창한 공리주의는 모든 개인의 효용을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후생은 각 개인별 효용의 함수 $SW = f(U_a, U_b)$ 로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함수를 가정할 수 있다.

$$SW = U_a + U_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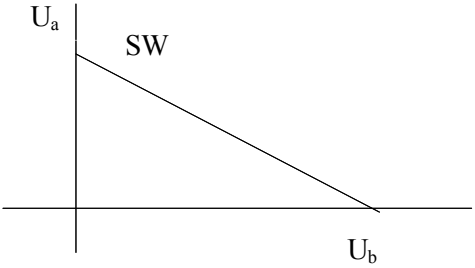
SW: 사회 후생

U_a : 개인 a의 효용

U_b : 개인 b의 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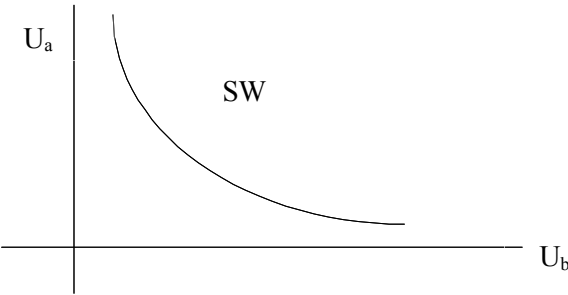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계층 간 구분 없이 최대 다수가 규제개혁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과 부의 순편익을 단순히 대상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합산하면 된다. 즉, 규제개혁을 통해 정의 순편익을 얻는 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그 규모가 크면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4] 공리주의적 입장의 사회 후생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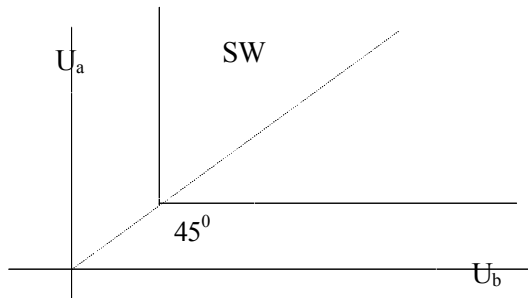
평등주의적(egalitarian) 입장은 효용 수준이 이미 높은 계층에게는 낮은 비중(weight)을 두고, 효용이 낮은 계층에 높은 비중을 두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소득재분배의 유력한 근거가 되는 논리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규제개혁으로 인해 정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계층이 저소득층일 경우 비록 그 규모는 부의 편익이 발생하는 고소득층에 비해 작더라도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림 5] 평등주의적 입장의 사회 후생함수



존 롤즈(J. Rawls)적 입장은 그 사회 내에 가장 효용이 낮은 계층이 사회 효용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text{Max SW} = \text{Max Min}(U_a, U_b)$ 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사회 후생의 증대는 가장 효용이 낮은 계층에서 효용 증대에 따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최하층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만이 의미를 가진다. 규제개혁으로 인해 최하층에 정의 순편익이 발생할 경우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그림 6] 존 롤즈의 사회 후생함수



따라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그 사회의 가치판단에 따르겠지만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사회가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저소득계층이나 낮은 사회계층의 편익증진을 위한 규제개혁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은 틀림없다.

지금까지 이러한 입장들은 규제개혁의 추진여부 및 우선순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규제개혁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든 1명이라도 있다면 그 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이 혜택을 볼 경우에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개혁의 필요성만 인정되면 그 대상집단의 규모나 특성에 상관없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규제 개혁으로 인

해 어떤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보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가지는 두 번째의 의의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 효과가 사회계층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규제 개혁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의 욕구에 맞추어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과 관련한 규제개혁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규제개혁은 고소득층이 규제개혁의 편익을 더 많이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고 대중교통이 아닌 승용차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이용이 많은 고소득계층이 더 많은 편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 의의로서는 규제개혁의 대상 주체를 국민, 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으로 구분해 볼 때 규제개혁으로 인해 삼 자간의 이해가 상충할 경우 국민의 편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특정시점에서의 정태적(static) 측면 뿐 아니라 동적인(dynamic) 측면에서의 고려도 필요하다. 즉, 소비자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 여건이 지나치게 악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구득 기회가 줄어들거나 서비스 가격이 증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는 공급자들이 규제개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보전하려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되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편익이 단기와 중장기 모두에 걸쳐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2. 규제개혁의 비전과 주요 국정목표

규제개혁의 방향성과 국민권익 보장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만을 고려한 평면적인 접근보다는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국정운영 목표와 연계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규제개혁의 비전과 원칙, 내용 등을 설정한 다음 주요 국정목표와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이 양자를 통합하여 주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로 한다.

가. 규제개혁의 비전과 원칙

규제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의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의 효율성 증대, 규제개혁간 연계성 증대, 규제개혁의 순응도 제고 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우선, 규제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는 규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아니다. 필요한 만큼의 규제만 존재하며, 그 규제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오히려 보장되거나 하위집단 간에 권익이 골고루 배분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목적과 방향성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과 일치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규제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의 강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다거나 또는 주된 규제에 불필요한 세부 규제가 덧붙여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규제개혁간 연계성 증대와 관련하여서는 각 규제들에 대한 개혁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규제간의 중복이나 규제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규제개혁의 순응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대상자들의 순응도가 현저히 낮아 집단적인 반발이 존재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면 보완책을 강구하거나 규제개혁의 추진여부 자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 개방,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대상집단 및 영역별 형평성 제고,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 기준의 체계화 및 일원화 등을 규제개혁의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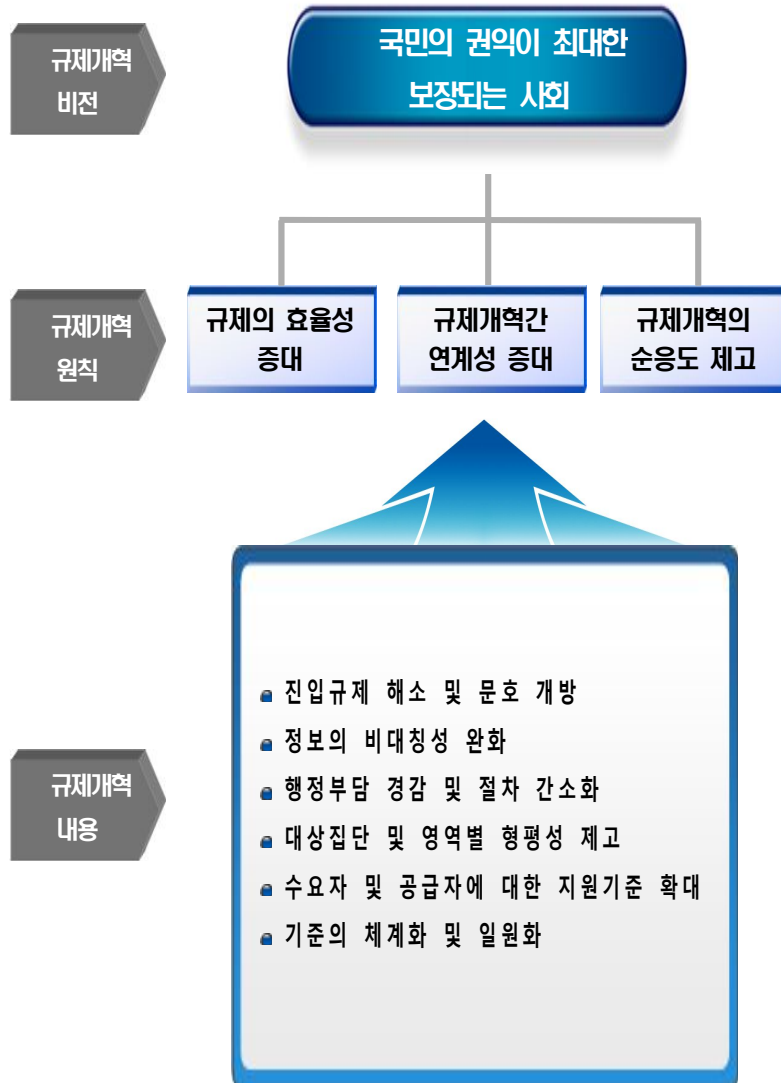
우선,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 개방은 특정집단에 보장되는 권리를 타 집단에게도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권익을 누리는 집단의 확대를 통해 전체적으로 국민이 누리는 권익의 절대규모를 증대시키게 된다. 아울러 진입장벽 해소와 문호개방을 통해 경쟁이 촉진되고 경쟁의 성과로 나타나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를 국민에게 돌려 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규제의 효율성과 규제개혁간 연계성, 순응도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문호개방의 경우 흔히 규제로 인해 보호받고 있던 기득권집단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 전체에게 발생하는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는 서비스 공급자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나 행정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확산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권리의식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익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행정부담 및 절차 간소화는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지불하고 있던 경제적 직접비용이나 시간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권익 확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반드시 행정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행정적 부담만을 대상자에 요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효율성 원칙에 가장 충실한 규제개혁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대상집단 및 영역별 형평성 제고와 관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을 갖춘 하위집단 간 또는 하위집단과 상관없이 국민의 권리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던 집단의 권익을 증대시켜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의 권익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림 7] 규제개혁의 비전 및 원칙



다섯 번째로,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정부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설정되어 있던 소득계층별 지원 기준을 확대하

는 등의 조치가 규제개혁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등 국가로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고려할 때, 재원부족 등의 여건으로 인해 일정한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지원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준의 일원화 및 체계화는 기준 간 중복 및 누락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고, 대상집단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준의 상치 또는 중복 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을 전체적으로 증대시켜 주며, 규제의 효율성 원칙을 가장 잘 보장해주는 형태의 규제개혁이다.

나. 주요 국정 목표

1) 비전과 목표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목표는 한 마디로 “친서민 공정사회 구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7년과 2008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이 위축되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거시경제 회복의 성과가 서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뚜렷한 현실에서 서민의 소득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과 원칙을 일탈하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에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 관행이 아직도 사회 일각에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운영 목표로 현 정부는 친서민 공정사회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는 향후의 사회적 여건을 전망해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중요한 국정 목

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국정운영 목표로서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책 마련,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국민의료비 및 약제비 증가 억제, 사회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정책 목표가 고려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서민 공정사회 구현”을 설정한 것은, 사회문제의 극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강조되는 정책적 관심사와 국민이 누려야 할 권익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리는 것이 일차적인 기능인 규제개혁 차원의 관심영역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 국정목표가 규제개혁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목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로서 ① 공정사회 구현, ② 서민생활 안정, ③ 일자리 창출, ④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설정하였다. 우선 공정사회 구현은 정치적인 철학의 문제를 떠나 보건복지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비스의 공급자나 소비자의 행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순응하도록 유도하고 법과 원칙에 순응하는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대적 복지와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로서 서민생활 안정은 취약계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이 생업 여건 개선을 통해 서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친서민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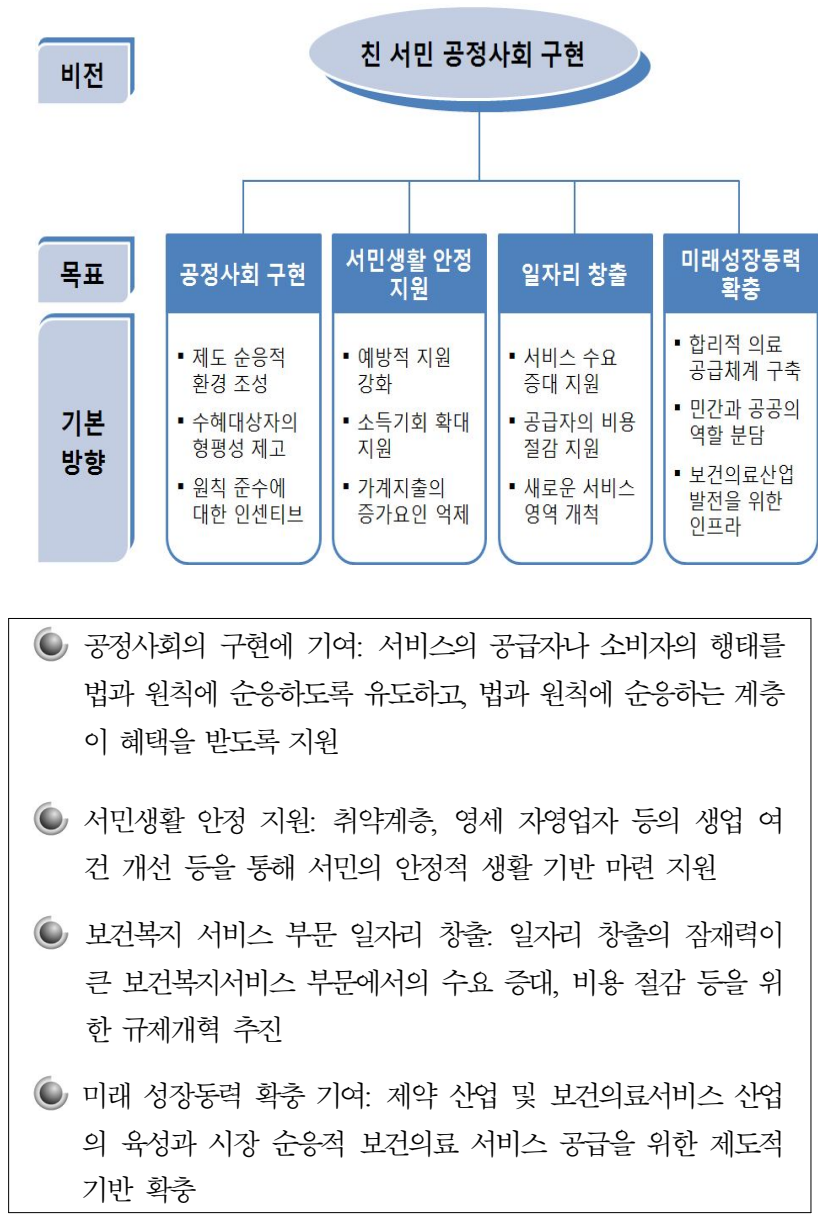
세 번째 목표로서 일자리 창출은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일반적인 논리는 차치하고라도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질 좋은(decent) 일자리의 창출이 가장 중요한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은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구매력을 갖춘 수요의 증대와 이를 위한 비용지원, 그리고 공급자의 직·간접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번째 목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서,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시장 순응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이 중요하다.

[그림 8]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국정목표



2)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공정사회 구현, 서민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우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① 제도 순응적 환경 조성, ② 수혜대상자 또는 비용부담자의 형평성 제고, ③ 원칙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제도 순응적 환경조성은 서비스 공급자 또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공정한 원칙의 준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두 번째로 수혜대상자 또는 비용부담자의 형평성 제고는 관련 법규에 따른 수혜대상자나 처벌대상자에 대한 상벌과 관련하여 집단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거나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원칙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별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기보다 원칙을 준수할 경우 더 큰 편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제도 순응적 환경 조성: 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 조성
- 수혜대상자의 형평성 제고: 관련 법규에 따른 수혜대상자나 처벌대상자에 대한 상벌과 관련하여 계층 및 집단 간 형평성 제고
- 원칙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계층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① 예방적 지원 강화, ② 소득기회 확대 지원, ③ 가계지출의 증가요인 억제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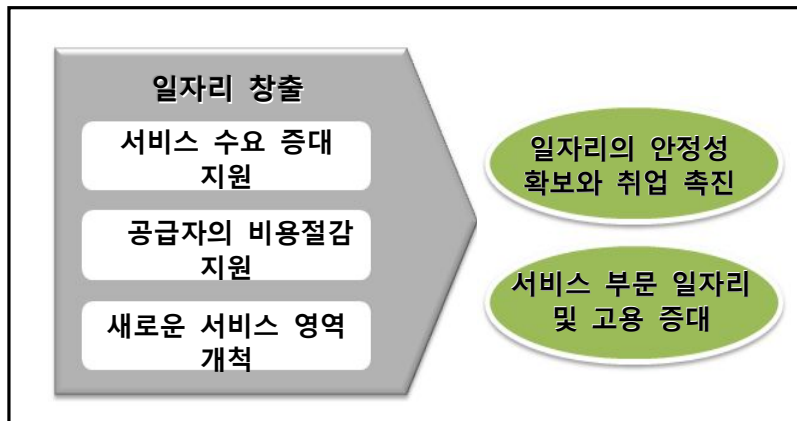
예방적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국가적 재정부담은 물론 사회적 위험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소득기회 확대와 관련

하여서는 취약계층이나 영세자영업자 생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의 구직 활동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지출의 증가요인 억제를 위해서는 서민가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수수료 등 서민의 행정관련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

- 예방적 지원 강화: 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국가적 재정부담 측면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지원 강화
- 소득기회 확대: 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 생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개인의 구직, 직업능력 개발 지원
- 가계지출의 증가요인 억제: 서민가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철폐함과 아울러, 수수료 등 서민의 행정관련 비용 지원

한편, 일자리 창출을 규제 개혁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② 공급자의 비용절감 지원, ③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척 등의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은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지원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증대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증대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또한, 공급자의 비용절감 지원은 공급자에 대해 서비스공급의 직·간접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일자의 안정성과 decency를 증대하고 그 결과 취업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개척은 국민의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민간 시장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확대를 통해 수요를 증대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증대 도모
- 공급자의 비용절감 지원: 서비스공급의 직·간접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일자리의 안정성 증대, 취업 촉진
-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척: 국민의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민간 시장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관련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보건의료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②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③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등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즉, 보건복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와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 보건의료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해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제도 도입 시의 가상 편익을 우회적으로 실현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일부를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하에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보건의료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보건복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와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주요 현안에 대해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제도도입 시의 가상 편익을 실현
-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일부를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하에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다. 규제개혁 목표와 국정목표를 통합한 규제개혁 방향 설정과 과제 도출

지금까지 규제개혁의 비전과 원칙, 내용, 그리고 국정운영 비전과 추진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규제개혁과 국정목표 양자를 통합하여 규제개혁의 목표와 국정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공정사회 구현(A),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일자리 창출(C), 미래성장동력 확충(D) 등 국정목표와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개방(I),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II),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간소화(III), 대상집단·영역별 형평성 제고(IV),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 확대(V), 기준의 체계화·일원화(VI) 등 규제개혁의 방향 및 내용을 매트릭스로 구성하여 해당 영역별로(I-A~D, II-A~D, III-A~D, IV-A~D, V-A~D, VI-A~D) 규제개혁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1-1)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개방 - 공정사회 구현(I-A)

공정사회 구현의 주된 정책방향은 제도순응적 환경 조성, 수혜대상자의 형평성 제고, 원칙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서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개방이라는 규제개혁을 통해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는 크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진입장벽 해소 및 문호개방은 주로 공급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건의료업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도록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제도순응적 환경 조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규제개혁의 여지가 없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규제 개혁의 여지도 없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문호개방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문호 개방, 서비스 제공 직역간 문호 개방 등이 주된 규제개혁의 잠재적 영역이 될 것이다. 이중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수혜대상자의 형평성 제고 측면의 규제개혁 과제로는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검토, 공공영역에서의 한방기능 강화 등이 있을 것이다.

1-2)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개방 - 서민생활 안정지원(I-B)

진입규제와 문호개방을 통한 예방적 지원 강화와 소득기회 확대, 가계부담 경감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간 연계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민생활과 진입규제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서민들이 소득기회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보육사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에 진입함에 있어서 의료인이나 전문인으로서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진입규제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보건복지 시설·기관이 서비스 공급 대상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종전까지 이용에 제한을 받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규제개혁이 주된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사회복지생활 시설에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시설장의 판단 하에 생활시설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단기에 걸쳐 침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개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3)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개방 - 일자리 창출(I-C)

진입규제 해소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로 인해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하는 규제개혁으로,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양자 간의 연계성이 가장 높고 규제개혁의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공급자 집단에 진입이 가능하거나 또는 이외의 영역에서는 이미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특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규제개혁이 여지와 이로 인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크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 하에 제안된 규제개혁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자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초기의 시장 형성을 위한 유효수요의 창출과 이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하다.

1-4)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개방 - 미래 성장동력 확충(I-D)

진입규제 해소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I-C)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건의료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진입 규제 해소와 문호 개방 등의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규제개혁의 여지가 크지 않다. 제약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헬스케어(global health care) 등이 주요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나 제약시장이나 헬스케어 시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적 진입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입규제 완화의 여지가 거의 없다.

1-5)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개방과 관련 주요 규제개혁과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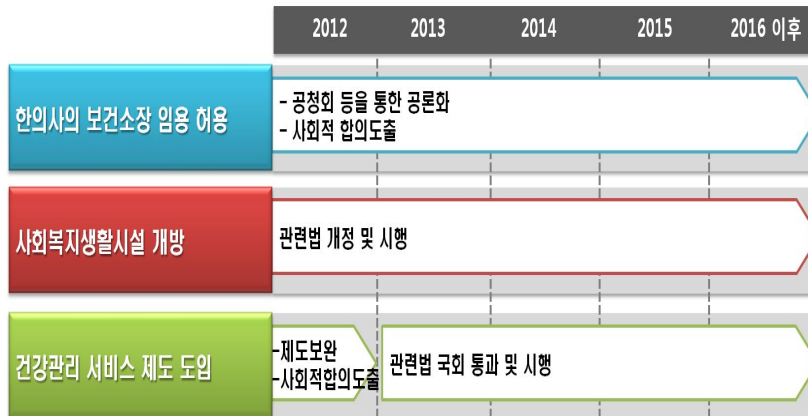
구 분		공정사회 구현(A)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일자리 창출(C)	미래 성장동력 확충(D)
		• 제도순응적 환경조성 • 수혜자대상의 형평성 제고 • 원칙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 예방적 지원 강화 • 소득기회 확대 • 가계지출 증가요인 억제	•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 공급자의 비용절감 •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발	• 보건의료산업 발전 인프라 • 합리적 의료공급 체계 •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진입 규제 해소 및 문호 개방 (I)	규제 개혁 방향	I-A •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되 자격요건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규제개혁 여부 결정 필요	I-B • 기존의 보건복지 시설·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도 제고	I-C • 새로운 서비스 제공 채널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허용 • 욕구(need)를 구매력을 갖춘 수요로 전환	I-D • 민간부문의 공공사업 참여 허용
	규제 개혁 과제	•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 사회복지생활시설 개방	•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 도입	
	우선 순위	저	저	고	중

1-6) 주요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개방 조치 관련 로드맵

보건소장의 한의사 임용 문제는 직역단체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의 차이가 심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생활시설 개방은 단기적으로도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한 규제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제도도입 방안 등이 일정부분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사회적 합의도출과 관련법 제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림 9]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개방 관련 주요 과제 로드맵



2-1)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 공정사회 구현(II-A)

정보의 공개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특정한 규제에 의해 관련정보가 전적으로 공개되지 않거나 또는 일부계층에만 공개됨으로 인해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을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규제개혁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보공개가 더 확대되어야 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 특정한 규제에 의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관련하여 개인별 이력관리, 중복수급 관리, 사례관리, 누락 및 추가 서비스 안내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하는 등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규제개혁의 여지는 크지 않다.

2-2)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 서민생활안정 지원(II-B)

특정 규제에 의해 구직정보나 창업정보, 사회복지 급여 정보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는 정보공개 확대 조치가 서민생

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으며, 지금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다만, 규제개혁과 관련하여서는 건강위해 물질이나 서비스의 위해도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개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의 완화보다는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 예로서, 담배 건강경고 그림 도입, 온라인 게임광고 및 선전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2-3)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 일자리 창출(II-C)

정보의 비대칭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구직 및 구인 정보 접근도 제고와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소비자 및 공급자 정보 공개 등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규상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규제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개혁이 여지는 크지 않다.

2-4)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 미래 성장동력 확충(II-D)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를 주고받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서 어느 한쪽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를 말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양자가 동등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정보관리의 기본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교환이 발생시키는 편익보다 비용이 매우 커서 정보 제공자의 부담도 클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소에서接客업소로 납품되는 제품을 일일이 포장 인쇄할 경우 포장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스티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5)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조치관련 주요 규제개혁과제 요약

구 분		공정사회 구현(A)	서민생활 안정 자원(B)	일자리 창출(C)	미래 성장동력 확충(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순응적 환경 조성 •수혜자대상의 형평성 제고 •원칙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적 지원 강화 •소득기회 확대 •가계지출 증가요인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공급자의 비용절감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산업 발전 인프라 •합리적 의료공급 체계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II)	규제 개혁 방향	I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보다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중요 	I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위해물질의 위해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 등에 중점 	I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인·구직정보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개 활성화 	I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자 및 소비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합리적 정보 관리
	규제 개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 건강경고그림 도입 •온라인 게임 광고 및 선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접객업소 판매 식품의 스티커 표시 사용
	우선 순위	저	중	저	중

135

2-6)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조치관련 로드맵

담배경고 그림 도입은 흡연율의 감소를 위해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아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서 2012년 이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 게임광고 및 선전 제한 조치는 선전 제한 대상 광고매체와 제한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한 다음, 2013년경 법 개정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접객업소 판매 식품에 대한 스티커 표시 허용은 식품접객업소의 의견수렴을 거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2013년경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0]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관련 주요 과제 로드맵



3-1)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공정사회 구현(III-A)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간소화는 제도순응적 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높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혁 조치는 제도순응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예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신고가 있을 경우 생산자는 증거물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나, 이물발생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는 이를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가 더 이상 이물 보관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서민생활안정 지원(III-B)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의 간소화는 예방적 지원이나 소득기회의 확대와는 직접적인 연계성을 찾기 어렵지만 영세사업자나 일반가계의 직·간접적

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의미에서 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의 간소화는 결국 대상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종을 방문판매업, 온라인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판매업 중에서 300㎡미만의 일반소매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와 별도의 시설 기준 및 입출고 기록보관 의무 없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획일적으로 점자 블럭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일자리 창출(III-C)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불분명하다. 자영업 등이 행정부담 경감 등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고용 확대에 투입하거나 또는 간소화된 절차 등에 따라 창업이 용이해지는 등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는 않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절감된 행정부담 경감과 간소화된 절차 등으로 인해 새로운 업종의 개발이 유리해질 수도 있으나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상 새로운 업태가 등장할 경우 이를 관리·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만약 이 영역에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면, 기존 사업장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보다는 창업에 중점을 두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4)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미래 성장동력 확충(III-D)

행정부담의 경감과 절차 간소화는 보건의료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이에 따라 생산자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 소포장 생산의 의무화를 완화하고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3-5)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간소화 조치관련 주요 규제개혁과제 요약

구 분		공정사회 구현(A)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일자리 창출(C)	미래 성장동력 확충(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순응적 환경조성 •수혜자대상의 형평성 제고 •원칙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적 지원 강화 •소득기회 확대 •가계지출 증가 요인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공급자의 비용 절감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산업 발전 인프라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III)	규제 개혁 방향	III-A	III-B	III-C	III-D
	규제 개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자 및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간접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제 폐지 •점자블럭의 탄력적 설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영역의 일자리보다,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에 중점을 두어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물가 절감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 •의약품소포장 생산의무제도 개선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합리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 개선
	우선 순위	고	고	저	중

3-6)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간소화 조치관련 로드맵

소비자가 식품이물 발견을 신고할 경우 이물 발견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 이물을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특별한 준비 사항 없이 2012년 경부터 바로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제도 폐지는 판매업종을 4종으로 구분하고 소규모 일반 판매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기준 및 입출고 기록보관 의무 없이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이므로 제도 실시 이전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2~2014년에 걸쳐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시장에서의 판매행태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후 사회적 합의 도출과 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시설 점자블럭의 탄력적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대중 교통시설 등에 점자블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중이 밀집하지 않는 소규모 장애인시설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부여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율적인 점자 블럭 설치를 허용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 사용인원 등에 대한 실행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이후 약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 완화는 시범사업이 필요한 조치이다. 제약업체의 입장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포장 의무 생산 비율을 낮추는 것을 선호하지만 의무생산비율을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할 것인가 등은 약 3년간의 의약품 판매 상황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이후 합리적인 의무생산 비율을 결정하여 2016년경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합리화는 2012~2013년에 걸쳐 점차 조정방안을 구체화한 이후 2014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1]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관련 주요 과제 로드맵



4-1) 대상집단·영역별 형평성 제고 - 공정사회 구현(IV-A)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상집단 및 영역별 사회복지 급여 혹은 보험료 부담 등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 조정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가장 큰 과제의 하나이다.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이나 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정은 현재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정책적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공정사회 구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보험 제도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와 함께 수급자가 확대되는 등 제도가 고착화되면 될수록 이후의 개선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형평성 제고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고액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차등 확대, 소득계층별 입원본인부담 차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방식 개선, 부랑인시설 생활자 유류금품 처리의 합리성 제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2) 대상집단·영역별 형평성 제고 - 서민생활 안정(IV-B)

대상집단별·영역별 형평성의 제고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논리적 연계성은, 사회복지 급여 수급이나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를 발굴하여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로서,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연기연금 제도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건강보험환자와 같이 2단계로 조정하는 방안과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 대상집단·영역별 형평성 제고 - 일자리 창출(IV-C)

대상집단별·영역별 형평성 제고 조치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보건복지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요증대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증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연계효과가 크지 않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이에 따른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자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보건소의 건강상담사를 지정·배치하도록 보건소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4) 대상집단·영역별 형평성 제고 - 미래 성장동력 확충(IV-D)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발전 방안의 하나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보건의료산업 지원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로서 학교법인과 의

료법인 조세정책 및 기부금 손비인정 차별 규제 개선, 위탁급식영업 허위과대광고 처벌대상 제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5) 대상집단·영역별 형평성 제고 조치관련 주요 규제개혁과제 요약

구 분		공정사회 구현(A)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일자리 창출(C)	미래 성장동력 확충(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순응적 환경조성 •수혜자대상의형평성 제고 •원칙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적 지원 강화 •소득기회 확대 •가계지출 증가요인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공급자의 비용절감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산업 발전 인프라 •합리적 의료공급 체계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대상 집단·영역별 형평성 제고 (IV)	규제 개혁 방향	IV-A	IV-B	IV-C	IV-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급여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층일수록 불리한 제도 발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문이 서비스 확충과 이에 따른 일자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부문에 비해 불리한 보건의료사업체 및 조직 지원 제도 개선
	규제 개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고액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차등 확대 •소득계층별 입원본인부담 차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사용실적 기준 수가차등화 •입원료(병실료) 삭감제도 개선 •건강검진 당일 일반 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개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부랑인 시설 입소자의 유류급품 처리의 합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변경 •연기연금제도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판정 개선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건강상담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조세정책 및 기부금 손비인정 차별 규제 개선 •위탁급식영업 허위과대광고 처벌대상 제외
우선 순위		고	고	저	고

4-6) 대상집단·영역별 형평성 제고 조치관련 로드맵

동거하지 않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은 2013년경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고액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2013년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전 2012년에는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이중과세에 대한 논의, 비동거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제외와 관련한 지역 및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차등 확대는 상급병원에 대한 환자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원급 본인부담금 30%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급종합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60%에서 8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중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정책효과,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증질환의 범위 설정, 주상병 및 부상병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경우의 적용기준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계층별 입원 본인부담금 차등화와 관련하여서는 상위 50%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현재의 본인부담률 수준 약 30%를 유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우선 필요하다. 따라서 2012년까지 이러한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소득계층별 본인부담률을 결정하고 2014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그때그때마다 본인부담률을 산정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2013년까지 건강보험공단과의 정보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환자의 보험료 및 소득수준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고가의료장비의 사용실적 및 노후화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화는 현재 병

원금 의료기관들이 고가장비를 통한 수입이 상당부분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용실적 및 차등 기준 설정 등과 아울러 각계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방식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모금자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 등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각 복지 영역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금지원 영역별로 쿼터를 설정함으로써 특정 복지 영역이 수혜대상에서 항상 제외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법개정안을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랑인 시설 입소자의 유류금품 처리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2012년 중 노인시설 등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공탁 또는 시설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변경 및 연기연금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도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재정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12~2013년에 걸쳐 이러한 재정분석과 급여수급 요건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판정 기준 완화는 이로 인한 2012~2013년에 걸쳐 해당자의 규모 변화 추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도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1→2차로 단계를 축소할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시범사업과 함께 수행한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율, 기부금의 손금산입 비율을 학교법인 등과 같이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2~2013년에 걸쳐 조세의 형평성 등에 대한 합의도출 과정이 필요하다.

위탁급식업체를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와 같이 허위광고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판매증진을 위한 허위광고의 위반확률이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모든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방안을 2012~2013년에 걸쳐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한외국인기본법』에서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를 국적 취득과 관계없이 재한 외국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2013년경 『재한외국인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의 상담인력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의 인력 고용이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2] 대상집단·영역별 형평성 제고 관련 주요 과제 로드맵



[그림 12] 계 속



5-1)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 확대 - 공정사회 구현(V-A)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정성에도 기여하는 규제개혁의 예로 사회복지 시설 설립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남비 현상에 따라 입지선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더욱이 초등학교, 청소년 수련원 등은 농림지역에 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혁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위한 지원이기도 하면서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보육료 규제개선도 원칙을 준수하면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5-2)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 확대 - 서민생활안정(V-B)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는 서민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 한다. 다만, 복지지원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지원기준이 제한된 것은 주로 정부의 재정여건 때문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확대하더라도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고지원, 아동대상 사례관리를 위

한 이동복지지도원 배치 기준 조정, 장애인 바우처 카드 점자화, 부랑인에 대한 행복e-음의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 한부모가정에 대한 수급권 유예, 예비창업자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기준 확대,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격 완화,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 강제방안 도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재심제도 도입), 보육시설 위탁에 따른 종사자 신분 보장 및 경력 인정 등 다양한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다.

5-3)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 확대 - 일자리 창출(V-C)

일자리의 창출은 공급자에 대한 지원보다 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수요 증대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효과를 이끌어 낼만큼의 수요증대와 이를 위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제도적 틀 하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자에 대한 지원으로 공중위생기금에서 인건비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4)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 확대 - 미래성장동력 확충(V-D)

공급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의료기관의 수입구조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기준 병실 및 상급병실 확보율 기준의 탄력적 운영, 의료급여 환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개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5-5)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조치 관련 주요 규제개혁과제 요약

구 분		공정사회 구현(A)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일자리 창출(C)	미래 성장동력 확충(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순응적 환경 조성 • 수혜자대상의 형평성 제고 • 원칙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적 지원 강화 • 소득기회 확대 • 가계지출 증가요인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 공급자의 비용절감 • 새로운 서비스영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산업 발전 인프라 •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 확대 (V)	규제 개혁 방향	V-A	V-B	V-C	V-D
	규제 개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적용 기준 확대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의 수입구조 및 경영지원
	우선 순위	고	중	중	중

5-6)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조치 관련 로드맵

사회복지시설의 입지조건 완화는 학교, 청소년 수련원과 같이 농림지역에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관련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12~2013년 기간 중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2014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보육료 규제 완화는 완화된 보육료 수준의 결정과 지역별로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적정 보육료 수준 산정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2년부터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보험의료기관 당연지정제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당연지정제를 계약제 등으로 전환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 부여나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2년부터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2013년까지 제도전환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국고가 지원되던 것이 2011년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의료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산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서 2012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아동상담소에 각각 1인 이상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2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규모에 따라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확충에 따른 예산이 2012년에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인 바우처 카드 점자화는 2012년부터 시행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랑인에 대한 행복e-음 수급자 관리에 의료급여 번호를 ID로 활용하는 방안도 2012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되도록 있으나 2년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조정하되 2012~2013년 중 타 복지급여 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은 기존 식품 사업자의 시설 자금 등으로 지원되나 식품분야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한 기존 업자들의 이해가 얹혀 있으므로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따라서 2012년경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지원을 받은 후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연금 지원기준 확대는 현재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60%로 되어 있는 지원 기준을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2012~2013년 타당성 검토와 예산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무연고자로 되어 있으나 입소 기준을 개정하여 소득기준은 폐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하고 대신 장애요건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12~2013년에 걸쳐 본인부담 수준 및 장애요건 재설정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2012년 중 『남여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을 위해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에 대해 조치 미이행시 벌칙조항을 『남여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 등의 소관이지만 저출산 대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연속성 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재위탁을 받는 경우의 재심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위탁 갱신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위탁 절차 및 기준, 자동갱신 요건 등의 실행방안을 2013~2014년에 걸쳐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은 2~3년마다 시행되어 시설장의 잦은 교체와 종사자 고용승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육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치명적 결함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실행방안을 2013~2014년에 걸쳐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기준을 4등급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재정전방 등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위생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2012~2014년에 걸쳐 기금 조성의 타당성 검토와 기금에서의 인건비 용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한 이후 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확실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기준병실 및 상급병실 확보 기준을 지리적 위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2012~2014년 중 의료기관 특성별 병실 확보 기준 개발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급여 환자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와 관련하여, 6개월 120만원을 초과하는 2종 의료급여 환자의 응급의료 대불금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관련 기관간 제도도입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일돌봄교실은 교과부의 소관이나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종일돌봄교실의 가정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교과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교과부에서 이를 주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3]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 관련 주요 과제 로드맵



[그림 13] 계 속



6-1)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 공정사회 구현(VI-A)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동등하거나 유사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차별화하는 제도적 요소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예로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상의 형평성과 사회복지관장의 자격 요건 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기관 종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6-2)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 서민생활 안정(VI-B)

서민생활안정은 경제적인 생활 여건의 개선 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환경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제개혁과제로는 장애판정 기준의 일원화, 기능성 표시제 관련 규제 일원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선정 세분화, 건강검진 결과 공개금지

예외조항 신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6-3)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 일자리 창출(VI-C)

보건복지 관련 기준의 체계화·일원화와 일자리 창출 간의 직접적인 연계는 찾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의 주된 전략이 서비스 수요 증대 지원, 공급자의 비용절감 지원,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발 등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기준의 체계화·일원화가 이러한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영역에 있어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과정에서 노출되는 틈새시장 발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4)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 미래성장동력 확충(VI-D)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간의 기준의 불일치 등은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틀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규제개혁과제로는 식품유통기한제도 개선, 방사선조사 명칭 변경, 식품유통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식품공전상 인공감미료 성분명에 대한 명시 및 성분별 시험법 추가,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중 예외규정 신설, 중소병원 기준 적용범위 확대 및 의료법인 포함,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제 체계화, 의료인력 정원 기준 조정,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6-5)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조치 관련 주요 규제개혁과제 요약

구 분		공정사회 구현(A)	서민생활 안정 지원(B)	일자리 창출(C)	미래 성장동력 확충(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순응적 환경 조성 • 수혜자대상의 형평성 제고 • 원칙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적 지원 강화 • 소득기회 확대 • 가계지출 증가요인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 공급자의 비용 절감 •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산업 발전 인프라 •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VI)	규제 개혁 방향	VI-A	VI-B	VI-C	VI-D
	규제 개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하거나 유사한 조건 갖춘 경우의 차별화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환경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틈새시장의 발굴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제고 차원의 기준간 조화
	우선 순위	고	중	저	고

• 사회 복지 자격제도 개선
• 사회복지관장 자격요건 개선
• 전문종합병원 간 호 관 리 료 기준 개선

• 장애판정 기준의 일원화
• 기능성 표시제 관련 규제 일원화
•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선정 세분화
• 건강검진 결과 공개금지 예외조항 신설

• 유통기한제도 개선
• 방사선조사 명칭 변경
• 식품유통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 영양성분의 색상 및 모양(신호등) 표시제 합리화
• 식품공전상 인공 감미료 성분명에 대한 명시 및 성분별 시험법 추가
•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중 예외규정 신설
• 중소병원 기준 적용범위 확대 및 의료법인 포함
•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제 체계화
• 의료인력 정원 기준 조정
•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6-6)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조치 관련 로드맵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음에 따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 또는 박사에게 비해 응시자격이 빨리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경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자로부터의 반대의견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2~2013년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관장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상 자격 및 전문성 유무와 상관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이면 관장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치도 2012~2013년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간호관리료와 관련하여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1등급, 2등급 간호관리료가 종합병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2012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애판정 기준이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데 기준 일원화는 중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관련 규제가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건강기능식품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12년 법 조항을 통일조정하는 작업을 거쳐 2013년 해당 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토대로 취약지를 선정함에 있어 진료과목별로 의료취약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조치는 2012~2013년 중 실행기준을 마련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상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하여 본인이 허용하고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하되, 공개한 자료 역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예외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통기한제도를 개선하여 식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2012~2014년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사선 조사 식품의 명칭과 관련하여 방사선이라는 용어로 인해 소비자의 거부감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조사식품”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식품 OEM 제품에서 기준 및 규격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기업과 OEM 업체간 처벌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2012~2013년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양성분의 색상 및 모양(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색상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품 유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표시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2014년에 걸쳐 소비자 조사, 새로운 표시제도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공감미료의 여러 성분명을 식품공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성분별 시험법을 추가하는 과제는 2012부터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취해소, 보양 등의 기능성 식품이 음료류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상 제품의 특성 및 섭취 목적상 소비대상이 성인인 식품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2012년 중에 추진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대상이 되는 병원의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소병원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0억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2~2013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병상기준으로 되어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외래환자 청구건수 등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2012~2014년에 걸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법정 의료인 정원 기준 조정과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 기준 조정은 시대적 여건 변화와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인 검토와 치밀한 시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14]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관련 주요 과제 로드맵



[그림 14] 계 속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후
식품유통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의견수렴		처벌 기준 조정		
영양성분의 색상 및 모양(신호등) 표시제 합리화	- 소비자 의견조사 - 새로운 표시제도 고안			표시제 개선	
식품공전상 인공감미료 성분명에 대한 명시 및 성분별 시험법 추가	식품공전 개정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중 예외규정 신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				
중소병원 기준 적용범위 확대 및 의료법인 포함	관련부처 협의		중소기업기본법 등 개정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제 체계화	외래환자수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			관련법 개정	
의료인력 정원 기준 조정	타당성에 대한 장기적 검토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타당성에 대한 장기적 검토				

라. 주요 규제개혁과제

본 절에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과제들을 규제개혁의 목표별, 그리고 규제개혁의 수단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보고자 한다.

규제 개혁이 필요한 총68개 과제 중 규제개혁 목표별로는 공정사회 구현 18개 과제, 서민생활 안정 지원 27개 과제, 성장동력 확충 18개 과제, 일자리 창출 5과제로 분류가능 하다. 또한 규제개혁의 수단 및 형태별로는 진입규제 해소 및 문호 개방 3개 과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3개 과제, 행정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6개 과제, 대상집단 영역별 형평성 제고 18개 과제,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지원기준확대 21개 과제, 그리고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17개 과제로 나눌 수 있다.

총 68개 규제를 규제개혁 목표별로 나누어 설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사회 구현

1-1) 한방분야 공공의료 활성화(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 공급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은 양방의료였다고 할 수 있으나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를 공공의료 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의료원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 한방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한방진료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공립병원 및 연구기관에 한방진료과와 연구기관이 부족하여 국가적 차원의 한방의료 육성 과 연구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장으로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하고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규정에 대하여 ‘의사면허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한 규정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2006.8.29)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한방분야에서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첫째,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한방진료과를 신설하거나 관련 연구기관을 확충하는 방안, 둘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건소장 임용가능자에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방진료과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문제는 예산 현황과 지역별 한방 수요와 서비스 공급 현황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며,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역시 지역이 보유한 보건의료 자원과 전문직종 간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1-2) 이물 등의 증거품 보관 기준 완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는 소비자로 부터 이물 검출 등 신고를 받은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자 입장에서는 증거품의 보관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한편, 곰팡이 이물 등 보관기간에 따라 이물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영상의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고충이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이물 발생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 6개월의 보관기간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폐기가 가능하도록 보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영상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내 이물의 보관은 소비자의 건강 침해 요인과 책임소재의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로 보이나, 이물 발생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도 6개월간의 보관을 규정한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식품 내 이물의 원인이 규명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증거품의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폐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동거를 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약 75만 명의 형제 및 자매가 피부양자 형태로 건강보험에 기여없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노동력이 있어서 직장가입자에 의한 생계유지자로 판단하기 어

려운 20세 이상 49세 이하가 전체의 약 86.4%를 차지하고 있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은 물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 비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직장가입자와 비동거상태인 형제 및 자매를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되 생계능력이 없어서 직장가입자의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계층은 지역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우선 동거 위주로 부양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과 부합하며,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부과체계의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하며, 나이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은 2012년까지 관련된 법령을 정비·개정하고, 2013년부터 추진하는 로드맵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1-4)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고액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료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는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64조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는 충분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연금소득 수준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의 20%를 평가하여 소득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간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액재산 및 연금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해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료의 공정한 분배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

자의 고액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2012년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추진,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로 과거 주무부처에서의 검토 과정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제도 도입에 의견수렴이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1-5)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차등 확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는 경증질환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진료시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외래진료시에는 30%에서 20%로 하향하여 본인부담율 차등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정책관계자들은 본 사안에 대해 의료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증질환의 본인부담금 차등 확대 또는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일수 제한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되지만 본인부담율 차등폭을 지나치게 크게 하는 것은 또다른 불형평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원급은 현행 유지, 종합병원급은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로 접근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순수한 경증질환만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보다 대부분 주·부상병이 혼재된 상황에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증질환’의 정의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1-6) 소득계층별 입원 본인부담 차등

부양의무자 조건,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기

준이 엄격하여 의료급여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또는 차상위 계층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를 제외한 비급여 포함 진료비 등에 대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하위 10%까지는 본인부담율을 10%로, 하위 10% 이상에서 30% 이하까지는 본인부담율을 15%로, 하위 30% 이상에서 50% 이하까지는 본인부담율을 20%로, 상위 50% 이상부터는 현재와 같이 약 30%의 본인부담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차등화하는 제도개선 정책이 제안된 바 있었다.

입원 본인부담의 차등화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율 결정에 따른 재정추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환자의 보험료와 소득 정보가 네트워킹되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선결조건들에 성과가 있을 경우 2015년 이후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로 정부의 정책관계자 입장 역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재정문제와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며, 각각의 입원 건마다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따르는 행정적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계에서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감면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므로 지출 측면에서도 소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방식 변경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비해 복지자원의 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의 경우 정관에 따른 특정목적사업(예: 아동복지사업)에 국한되어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업 영역별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모금 및 기업기부금 등을 통해 자원을 조성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 지원이 복지사업 영역 재원확보의 중재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여부 심사가 사업제안서 심사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기관의 사업제안서 작성 수준에 따라 지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선 복지단체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 배분방식이 현재와 같이 서비스 영역의 구분없는 일괄적인 사업제안서 심사 방식이 아니라 영역별 쿼터를 두고 배분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지원 과정에 명문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부랑인 복지사업, 보육사업 등의 영역을 구분한 후, 각 영역에 최소한의 지원 예산을 배분한 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지도 감독권은 있으나, 사업제안서의 심사와 배분은 모금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에 속한다. 그렇지만 공동모금의 재원은 국민의 모금과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영역의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역별 최소한의 지원예산을 배당하는 쿼터제 도입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원에서 정확한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일선 복지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방식에 대한 공문화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효과적인 심사 및 배분 방식을 정하도록 한다.

1-8) 부랑인시설 입소자 유류금품 처리의 합리성 제고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유류금품은 민법에 따라 국고환수로 처리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 등은 시설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탁을 통한 운영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설간 유류금품 처리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유류금품의 처리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적 비용과 노력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시설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다른 시설

에 비해 단기간의 이용행태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매번 국고환수 처리하기보다 다른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사용실적 기준 수가 차등화

현재 CT, MRI 등 영상장비 활용에 대한 수가는 장비의 사용기간에 따른 차등화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영상자료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장비에 적용되는 수가를 사용기간 또는 사용량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영상장비의 사용실적에 따른 차등기준을 설정하여 병원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15년 이후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10) 입원료(병실료) 삭감제도 개선

의료기관의 퇴원 지시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는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재정 소모와 의료기관과 환자간 소모적인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보험자는 의료기관이 퇴원을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정기환자 입원료(병실료)를 삭감시키고 있지만, 그 삭감분에 대해 의료기관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장기입원에 따른 퇴원 불응은 불필요한 병상 점유에 따른 응급환자 등 필수 의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환자의 이용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정당한 퇴원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 여부 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인부담 금액을 대폭 높이거나 외래본인부담율에 의한 진료비로 청구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11)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 수가 인정

현행 제도에 의하면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요양급여에 대한 진료를 할 경우 건강검진시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상의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 서비스와 일반질병에 대한 진료행위는 ‘당일’이라는 동일한 시기 이외에는 별도 진료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도 수가로 인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1-12)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개선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에 대한 급여결정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의한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청구소멸시효 3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급여결정이 청구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자와 의료기관은 급여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의 시점으로 급여결정 시기 외에 ‘통보시점’을 추가하여 급여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따른 급여결정분은 진료비청구 소멸시효 3년이 만료된 상태에서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1-13) 사회복지시설 입지개발 규제 완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면서도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의 남비현상에 따른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지되고 있어서 입지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시설의 경우 토지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법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제20호에 따르면 현행 농림지역에 초등학교,

청소년 수련원 등은 설치가 가능하나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지법 및 건축법시행령에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할 경우 1,0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서 사실상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계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0호 관련 별표21을 개정하여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농림지역 내의 건축 가능물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고, 농지 전용 사회복지시설의 부지 1,000㎡ 제한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계의 요구는 부족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관련된 규제개선도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1-14)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보육료 규제 완화

현재 만4세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월 17만 7천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단가로 책정되어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매년 시·도에서 고지하는 금액(23만 9천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반면 실제 표준보육비용 산출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보육비용이 월 28만원 선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단가와 실제 보육료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선 보육시설에서는 이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계 일각에서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보육료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가 지정하는 보육료 단가 제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육시설이 자

율적으로 보육료를 책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서 자율화 적용 대상 보육시설의 기준은 평가인증을 통해 우수하다고 평가된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는 국공립, 민간 모두 신청주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2009년 제1차 평가인증에서 전체 어린이집 35,550개소 중 20,402개소가 인증을 통과(57.4%)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 결과를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보육료 상한선을 자율화하도록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제시하는 보육료 자율화 적용 대상 보육시설 조건은 첫째, 평가인증에서 최우수 시설 인증 획득, 둘째, 보육시설의 12시간 종일제 운영, 셋째, 어린이집 건물 소유형태가 자가이며, 자가인 경우에도 월 상환액이 시설 운영비의 5% 이내인 시설, 넷째, 보육시설 면적이 영유아보육법 상 기준 이상 확보 및 실외놀이터 확보 시설이 있다.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평가인증을 통해 우수한 보육시설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부모들의 선택권 제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보육료를 차등하여 책정할 경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형평적이지 못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육료의 자율적 책정은 정부재정 부담 규모의 고려와 표준보육료의 정확한 산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도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1-15)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들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되어 있으나, 이들 의료기관은 대부분 중증도가 높거나 복잡질환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어서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보다 3~4배 긴 산

재환자들의 입원은 병상부족 및 중증질환자 진료 차질, 교육과 연구 투자 소홀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병원들은 상급종합 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하기 보다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쌍방간 자율 계약을 통해 산재 환자를 치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재환자들의 긴 재원기간을 고려한다면, 근로복지공단과 진료기관으로 계약을 맺는 의료기관에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와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한 과제이다.

1-16)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관장 자격요건 개선

현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사이버 대학교 등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도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를 취득한 자와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비하여 응시자격이 빨리 주어지는 한편, 자격증에 대한 회소성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중 실무경험 기간을 늘려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최고관리자인 관장은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바이나,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상으로는 자격 및 전문성 유무와 상관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이면 관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강화하여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계가 주장하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관장 자격요건 개선은 전

문적 식견과 소양을 갖춘 인력에 의한 질높은 서비스 제공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1-17)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기준 개선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1등급, 2등급 간호관리료가 종합병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1등급: 종합전문 48,220원/종합병원 49,810원, 2등급: 종합전문 45,010원/종합병원 45,280원), 기준의 체계화·일원화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원계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본 과제에 대하여 중소병원 및 대형병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산출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V-1〉 공정사회 구현 관련 규제 개혁 과제 요약

규제개혁 명칭	현재 규제 내용	규제개선 사항	관련법규
보건소장 임용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장으로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하고 총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장 임용가능자에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 포함 검토 •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한방진료과 확충 검토 	<p>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p> <p>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p>
이물 등의 증거품 보관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신고한 식품 이물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규정 • 보관장소 및 보관 중 이물의 변화 등에 따른 보관상의 어려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이물의 원인이 규명된 경우에는 폐기가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동거를 하지 않는 형제자매까지 포함되어 현재 약 75만 명의 형제 및 자매가 피부양자 형태로 건강보험에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거 형제 및 자매를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계층은 지역가입자 또는 의료 	<p>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항 4호 ‘가입자의 형제·자매’ 수정</p>

	<p>혀 기여 없이 무임 승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20세 이상 49세 이하가 전체의 약 86.4%를 차지 즉, 가입자에 의한 생계 유지로 보기 어려움. 	<p>급여 수급권자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거 위주로 부양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과 부합 능력에 맞게 부담한다는 부과체계의 원칙에 충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고액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자는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음.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의 20%를 평가하여 소득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직역간 형평성에도 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액재산 및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해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6항 신설 ‘재산 및 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금 차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의료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 약화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진료시(현행 60%→80%), 의원급 외래진료시(30%→20%) 본인부담을 차등폭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 제1항
소득계층 별 입원본인 부담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 조건,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기준이 엄격하여 의료급여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마ҳух합에 따라 의료이용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를 제외한 비급여 포함 진료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10% 본인부담(하위 10%), 15% 본인부담(하위 10% 이상 30% 이하), 20% 본인부담(하위 30% 이상 50% 이하), 현행 유지(현재 본인부담 약 30%→상위 50%) 	국민건강보험법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 ‘소득계층별 입원 본인부담차등’ 신설
고가의료 장비에 대한 사용실적 기준 수가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장비에 적용되는 수가가 사용기간 또는 사용량에 따라 차등적용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기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반영하여 수가를 차등화 적용 	

입원료 (병실료) 삭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의 퇴원 지시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는 장기 입원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입원료(병실료) 삭감제도에 는 의료기관의 비용보전 방법이 부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인의 정당한 퇴원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금액을 높이거나 외래본인부담율에 의한 진료비 청구 등의 대안 마련 필요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요양급여 진료를 할 경우 건강검진 진찰행위와 연계되어 요양급여 진찰료 별도 산정이 불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검진 진찰행위와 일반질병 진료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당일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별도의 수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 	
보험급여 비용 소멸시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에 따른 급여결정분의 소멸시효가 ‘급여 청구 이후 3년’으로만 규정되어, 이 소멸시효를 초과하여 급여결정이 내려질 경우 급여수령이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멸시효 시점에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를 추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사회공헌 목적사업(정관사업)이 특정사업(예: 아동복지 등)으로만 국한 •이에 따라 영역에 따라 기업 등으로 부터의 예산지원을 확보하는데 한계(자원배분의 불균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지원이 이러한 재원확보상의 중재적 역할 필요 •그러나 사회복지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재정 지원 •이에 따라 사업제안서 작성 수준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복지 영역별 예산 할당제도 도입 	
유류금품 처리의 합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랑인 시설의 경우 유류금품은 민법에 따라 국고환수 •그러나 노인시설 등은 시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탁 또는 운영비로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간 유류금품 처리를 일원화 	
사회복지 시설 입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지되어 입지선정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지역내 건축가능시설에 사회복지시설 포함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를 마련한다 하여도 농림지역에는 초등학교, 청소년 수련원만 기능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배제 • 농지를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면적제한으로 사실상 전용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 사회복지시설의 부지제한 해제 	농지법 시행령
보육시설 평가인증 에 따른 보육료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특성 또는 서비스 우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괄적인 보육료가 산정되어 있어서 ‘특별활동’ 등을 통해 정부지원단가와 실제 보육료의 차이를 보전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보육료 자율화가 필요하며, 그 기준은 평가인증을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종합전문 요양기관 산재보험 당연지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종합병원들이 산재보험 당연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재원일수가 긴 산재환자들의 입원은 병상 부족 및 중증환자 진료와 교육연구 기능 활성화에 제약조건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 쌍방간 자율계약으로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사회 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자가 1년 동안의 실무경험으로 1급 국가자격증 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대학원에서의 전공자들에 비하여 빠른 응시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험 기간 증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 복지관장 자격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하나, 현행 법률상으로는 자격 및 전문성 유무와 상관없이 운영위원회 인정으로 임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장 자격기준에 2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 추가 	
병원 일반병동 간호관리 료 산정 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1등급, 2등급 간호관리료가 종합병원보다 낮게 책정(1등급: 종합전문 48,220원/종합병원 49,810원, 2등급: 종합전문 45,010원/종합병원 45,28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 	

2) 서민생활 안정 지원

2-1) 사회복지 생활시설 개방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별 기능이 설정됨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 프로그램을 시설 입소자가 아닌 외부인이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때문에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을 지역 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개방이 법령상으로 저촉되지 않고,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이미 실비 개념으로 지역주민까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 자원으로는 시설의 우선순위 이용자(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취약계층 등)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까지 확대할 여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부 지역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기피하고, 시설수용자들 또한 노출을 기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은 지향하되 시설전체에 대한 개방보다는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방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2-2) 담배 건강경고 그림 도입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에 따라 경고문구 전달 형식에 담배 건강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경고문구가 차지하는 표시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담배 건강경고 그림을 도입하지 못하고, 담배경고문구의 표시면적이 또한 담배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 30%에 불과하다.

최근 청소년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인 담배가격 인상은 물론 담배 건강

경고 그림 도입이 늦춰지고 있어 금연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2-3) 온라인 게임 광고 및 선전 제한

최근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건 등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는 이미 사회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와 관련된 규제는 사실상 미약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 온라인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광고 제한을 위한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일정시간 이상 혹은 심야시간에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제한 대상 광고매체 선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제한 내용에 대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4) 점자 블럭 탄력적 설치 기준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무조건 점자 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편의시설의 종류) 및 별표 1(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따르면 점자블럭은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공원, 기차역, 터미널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그리고 통신시설 등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중시설이 아닌 소규모 장애인 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율적 시설 설치가 적용될 수 있는 규모 등 방안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개정 2009.12.3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I. 공통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와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물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제3호나목만 적용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그 분포의 적정성과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상시 10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 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제 폐지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 면적에 상관없이 사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범위가 방문판매 등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소형 슈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표 V-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p>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영업의 종류)</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다른 한편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일반 식품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일반 식품에 비해 좀 더 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이며, 신고제를 폐지할 경우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관련 통계 파악 등 통제가 어렵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등 역효과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기타 식품판매업’의 면적 300㎡이상 신고된 매장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법제처 심사의뢰 준비중)에 있는데, 이들 ‘기타 식품판매업’은 식품위생법 상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안전 등에 대

한 담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건강식품군에 대한 신고제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보다는 대상이 되는 건강기능식품군의 단계적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제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폐지 후 시장에서의 판매 행태 등의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때문에 제도 폐지 이전에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6)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범위 확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를 국적취득과 관련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결혼이민자를 일시적인 체류자와 동일한 재한외국인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한 조항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일부 중복하여 규정하는 측면이 있다.

〈표 V-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②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따라서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결혼이민자의 범위를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수정하고, 결혼이민자 등의 처우에 관한 조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비교·정리하여 다문화의 평등성과 가치에 기반한 다문화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7) 조기노령연금제도 수급요건 개선

조기노령연금제도는 정규퇴직연령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된 연금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노령연금 수급 이전에도 연금급여를 수급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퇴직한 고령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천 과정에서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요건은 최소가입기간 단축, 소득기준 상향 조정 등 완화되어 온 반면 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벌칙의 성격인 감액률은 강화된 바 있다. 이러한 조건완화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노후생활의 불안정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제도의 관대한 수급조건은 가입자들에게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에서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감액률은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장하고자 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급여에 만족해야 하는 수급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의 조정에서 급여 감액률을 현 수준보다 상향하여 근로유인의 강화를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려 가능한 방법으로는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접근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제한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8) 연기연금제도 개선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고도 수급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관대한 수급조건과 높은

급여 감액을 특징으로 하는 조기노령연금제도와 달리, 연기연금제도는 엄격한 급여조건과 낮은 급여보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기연금의 제도적 특징은 수급자의 추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제도 도입 이후 급여 연기를 신청한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

연기연금제도는 활동적 노년의 여러 목표들, 특히 근로활동 촉진과 노후 보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현행 연기연금제도는 신청 자격이 매우 엄격하고 급여 증액 유인은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연기연금 제도는 적극적으로 수급자의 활동적 노년을 촉진하려는 목표보다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급여 감액을 회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한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 하에서 연기연금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에 한해서만 연금수급의 연기가 허용되어 있으나, 노령연금수급자 전체에게 연금연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유인 제고 및 수급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적용방식의 조정 이외에 현재 6%인 급여 증액률을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판정 기준 완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경우 거동상태는 문제가 없으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고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24시간 보호가 필요하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는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등급을 받더라도 중증의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입소할 시설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데에는 1명의 요양보호사가 전담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반요양시설 인력 기준으로는 중증의 알츠하이머환자가 입소하게 되면 다른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 입소할 시설을 찾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정시 치매 전문가를 투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알츠하이머 치매환자 입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10) 의료급여전달체계 개선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2단계 진료절차인데 비해(병의원→종합전문요양기관), 의료급여는 3단계 진료절차(의원·보건소→병원→지정병원)로 되어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원이나 보건소를 거치지 않으면 병원 및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의료이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의료기관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제한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한 1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신설과 자격관리시스템 도입, 병의원간 상이한 본인부담에 따른 경제적 장벽 등이 수급권자의 과도한 병원 이용 증가를 방지해 주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급여 환자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단계 의료전달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다만, 이 경우 의료급여환자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 의료급여환자 대형병원 집중화 등이 예상되므로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11)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고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92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현행법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보험급여

내용을 노인의료비의 50%를 국고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등 예산부처와의 협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V-5〉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부지원 조항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 ②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보험급여

2-12) 아동대상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복지지도원 확충

현행법상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아동상담소에 각각 1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으나, 적은 인원으로 인해 실제 보호를 요하는 아동이 많을 경우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복지지도원에 의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별로 취약계층 아동 수를 근거로 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예산마련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안으로서 지역 내 민간 사례관리자에게 적정 자격을 부여하여 일시적으로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활용할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복지지도원 확충에 따른 기대효과는 ① 아동의 복지서비스 진입장벽 축소(아동특성 상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탐색,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를 대신할 인력 확보), ② 취약계층 아동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로 예방적 서비스 제공 기능, ③ 아동의 가족에 대한 개별 연계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 가족기능강화에 기여, ④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 예상될 수 있다.

〈표 V-6〉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지도원 관련 조항

아동복지법 제7조 (아동복지지도원)	
<p>①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3.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4.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5.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6.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7.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8.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p>②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 등)	
<p>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직렬) 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4.7.30]</p> <p>②별정직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p> <p>③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한한다)에 각각 1인 이상 둔다.</p>	

〈표 V-7〉 아동복지지도원 확충 연차별 계획(안)

구분	연차별 개선계획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별 취약계층 아동 범위규정 및 규모 조사, 통계확보 방안 마련 ●현행 취약계층 아동 대비 아동복지지도원 비율 파악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
2년	●취약계층 아동 대비 아동복지지도원 비율을 1차년도 대비 2배로 확충
3년	●비율 1:100 으로 조정
5년	●비율 1:50 으로 조정

2-13) 장애인바우처카드 점자화

현재 장애인 바우처 카드는 점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시각 장애인이 사용시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경우 시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14) 행복 e-음의 수급자 관리 체계 개선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수급자 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랑인의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수기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왔으나, 수기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은 점차 지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랑인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번호 등 타 ID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15) 한부모가정에 대한 수급권 유예

현행 규정상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 경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만큼 경제력이 회복되기는 어려우므로 2년간 수급권 유지하여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책집행과정에서 한부모 가정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타복지급여 수급자를 고려할 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6) 예비창업자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진흥 기금은 시설 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조항을 활용하여 예비 창업자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이나 중소기업지원법 등 지원을 목표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고, 식품위생법은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규제’적 성격이 강한 법률이므로 창업지원 등에 기금을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기본적으로 기존 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물론 기금을 지원받은 후 창업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표 V-8〉 식품진흥기금 활용 관련 법률

<p>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p> <p>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p>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p>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2조 (기금의 운용)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2-17) 장애인연금 지원 기준 확대

현재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향후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 상승률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향후의 장애출현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예산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표 V-9〉 장애인연금법 수급권자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4조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4조 (수급권자 선정기준)

- ① 법 제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선정기준액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18)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자격 완화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한정해져 있다.

때문에 장애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소자격 제한으로 인해 시설입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하고, 장애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2-19)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

현재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20)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 강제방안 도입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상시근로자 500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의무 미이행시 벌칙조항 부재로 인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법조항이 보다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이행 기업 명단 공표, 과태료 또는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또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도 동시에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보육시설 확대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를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통해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 즉,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당위성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인데, 예를 들어 과연 직장의 보육시설까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것인가, 오히려 집 주위의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더 크지 않은가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 V-10〉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으로 확대적용(2008. 7. 1.)되었으나, 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은 근로시간과 수당체계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별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22)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재심제도 도입)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상에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위탁 기간이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서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기 위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고용 불안문제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신규위탁과 재위탁(위탁의 갱신)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때문에 재위탁을 위한 ‘재심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간 보장 및 자동 위탁 갱신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선정심위위원회 구성시 사회복지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고용승계 보장 장치 마련이 건의될 필요가 있다.

2-23) 보육시설 위탁에 따른 종사자 신분 보장 및 경력 인정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은 2~3년마다 시행되어 시설장의 잦은 교체와 종사자 고용승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점차적으로 보육전문가들이 보육사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보육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치명적 결함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위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인이 국공립시설을 장기간 위탁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2-24) 장애판정 기준 일원화

장애인복지법(6급 체계, 의사판정)과 국민연금법(4급 체계, 공단 판정)상의 장애판정기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체계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체계가 상이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에 의한 장애판정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공무원연금 등에서의 장애판정기준도 모두 상이하므로 개별 사안별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장애등급체계는 다르나 장애판정의 하한선이 유사하므로 국민들에게도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표 V-11〉 우리나라 장애판정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⑤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애등급 등) ①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③ 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 심사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25) 기능성 표시제 관련 규제 일원화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법과 함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여러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동일한 제품의 동일한 내

용에 대한 표시를 여러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다 보니 영업자가 원하는 법률을 선택하고 있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의 기능성 표시 관련 규정을 당초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식품 기능성 표시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할 경우 법적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처분’은 불가능해져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일반적 금지조항을 두고 식품위생법에도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정 법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개별법에서 삭제할 경우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사항으로 식품위생법 소관 영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원화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법을 명시할 경우에는 문제소지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2-26)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선정 세분화

국회계류중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의료취약지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를 보다 세분화하여 산부인과 취약지, 응급의료 취약지, 야간의료 취약지 등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며, 이 경우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의 효율화가 예상된다.

2-27) 건강검진결과 공개금지 예외조항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와 공개금지)에는 건강검진결과에 대

해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진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도 복지부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실시를 위해서는 검진자료를 보건소 등 서비스제공 기관과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검진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건강검진자료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하여 본인이 허용하고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하되, 공개한 자료 역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진자료를 연계받은 기관에 대해 검진자료의 보관, 처리 및 폐기에 관한 관련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2〉 서민생활 안정 지원 관련 규제 개혁 과제 요약

규제개혁 명칭	현재 규제 내용	규제개선 사항	관련법규
사회복지 생활시설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 별 기능이 설정 이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 프로그램을 외부인 이용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을 지역 사회에 개방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 	장애인복지법
담배 건강경고 그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담배 건강경고 그림을 도입하지 못하고 담배경고문구의 표시면적이 담배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 30%에 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담배규제기본협약(11조)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문구 전달 형식에 담배 건강경고 그림 도입 - 경고문구가 차지하는 표시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2항 및 별표1(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 담배사업법시행 규칙 15조(흡연경고 문구의 표시기준 등) 2항 및 별표4(흡연경고 문구의표시기준)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인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온라인 게임중독 예 	게임산업진흥에

게임 광고 및 선전 제한	청소년 문제는 이미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 해결해야 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그러나 이와 관련된 규제는 사실상 없음.	방을 위해 - 관련 광고의 제한 관련 규 제 장치 마련 - 일정시간 이상 혹은 심야 시간에 게임 접속을 차단 하는 규제 장치 마련	관련 법률
점자블럭 탄력적 설치 기준	●장애인시설 등에 무조건 점 자 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제 폐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 면적에 상관없 이 사전에 식품위생법에 따 라 영업신고를 해야 함.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별도 의 신고 없이 소형 슈퍼 등 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 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신고제 폐지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재한외국 인 처우기본 법의 범위 확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는 결혼이민자를 국적취득 과 관련 없이 대한민국 국 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 인으로 정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인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결혼이민자를 일시적인 체 류자와 동일한 재한외국인 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 결혼이민자의 범위를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는 규 정 수정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처 우에 관한 조항은 다문화가 족지원법과 중복되므로 재한 외국인 기본법에서 삭제	재한외국인처우 기본 제2조 정의,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등
조기노령 연금 수급요건 개선	●조기노령연금제도의 관대 한 수급조건은 가입자들 에게 조기노령연금의 수 급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 민연금에서 조기노령연금 에 대한 감액률은 높아짐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조기 노령연금의 접근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제한하여 만드 시 필요한 사람들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시점 에 따라 급여감액률을 다 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생 각해 볼 수 있음.	
연기연금 제도	●연기연금제도는 신청자격 이 매우 엄격하고 급여 증액 유인은 크지 않음. 결과적으로, 연기연금제 도는 적극적으로 수급자 의 활동적 노년을 촉진하 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함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에 한해서만 연금수급의 연기 가 허용되어 있으나, 노령 연금수급자 전체에게 연금 연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유인 제고 및 수 급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 해 타당	
노인장기 요양보험 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경우 정신상태가 정상적 이지 않고 인지기능이 떨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 정시 치매 전문가를 투입 하여 정확한 진단과 판정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판정 기준 완화	어지기 때문에 24시간 보호가 필요하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는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알츠하이머 치매환자 입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2단계 진료절차인데 비해, 의료급여는 3단계 진료절차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됨.	●의료급여 환자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단계 의료전달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고지원	●건강보험 제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노인의료비의 50%를 국고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4항 제1호, 제2호 삭제, 제3호 수정(당해 연도 노인의료비의 50%지원)
아동대상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복지지도원 확충	●아동복지지도원의 규모 :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아동상담소에 각각 1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음.	●아동복지지도원의 규모 확충 - 지역사회 별로 취약계층 아동 수를 근거로 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인력을 배치 - 아동복지지도원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아동복지법」 제 7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조 3항
장애인 바우처 카드 점자화	●현재 장애인 바우처 카드는 점자화가 시각 장애인의 사용 시 불편 초래	●바우처 카드의 점자화	
행복 e-음의 수급자 관리 체계 개선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랑인의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수기로 지원금 신청 ●그러나 수기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은 점차 억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랑인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번호 등 타 ID 사용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수급권 유예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	●한부모 가정의 경우 2년간 수급권 유지	
예비창업자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진흥 기금은 시설 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	●예비 창업자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 지원	식품위생 89조, 동법 시행령 62조

유자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소득인정액 및 선정기준액을 재정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자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시설 입소 대상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무연고자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하고 장애 요건을 강화 	장애인복지법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중단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로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보육 시설 의무 미이행 강제방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500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그러나 현재 의무 미이행시 벌칙조항 부재 다만 2011년부터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제 도입 추진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도입 예정인 명단공표제 도입은 강제방안으로 효과적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나, 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은 근로시간과 수당체계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 현실화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 필요 	
사회복지 시설 위탁제도 개선(재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서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위탁을 위한 '재심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간 보장 및 자동 위탁 갱신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보육시설 위탁에 따른 종사자 신분 보장 및 경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은 2~3년마다 시행되어 시설장의 잦은 교체와 종사자 고용승계 등이 문제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점차적으로 보육전문가들이 보육사업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지자체 지역 설정 및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 수탁자의 재위탁 여부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 	영유아보육법

	기피하는 현상까지 초래		
장애판정 기준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체계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체계가 상이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6급 체계, 의사판정)과 국민연금법(4급 체계, 공단 판정) 상의 장애판정기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 	
기능성 표시제 관련 규제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는 여러법에 의해 규정, 동일한 제품의 동일한 내용에 대한 표시를 여러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다 보니 영업자가 원하는 법률을 선택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의 기능성 표시 관련 규정을 당초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일원화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 선정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취약지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를 보다 세분화하여 산부인과 취약지, 응급의료 취약지, 야간의료취약지 등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 	
건강검진 결과 공개금지 예외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와 공개금지)에는 건강검진결과에 대해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진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실시를 위해서는 검진자료를 보건소 등 서비스제공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검진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단, 검진자료의 공개는 본인이 허용한 제한된 범위로 한정하며, 검진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에 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제한규정 마련 	

3) 일자리 창출

3-1)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미 발병한 질병에 대한 치료서비스와 달리 소비자에게 사전에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생활습관 등을 유도하여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 회사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제도가 도입될 경우 만성질환 예방에 따른 국민적 편익 증대와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화와 함께 건강관리 서비스 연관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검증되지 않고 제공되어 온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검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과 아울러 도입될 경우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수요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등의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민간 회사에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점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민간서비스를 통해 공급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민간 보험회사가 참여할 경우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과 역선택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의 비용지원 문제, 의료인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의 반대 의견 등도 제도 실현을 위한 해결과제로 평가된다.

3-2) 보건소 건강상담사 운영

건강상담사는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보건소에 의사 또는 방문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건강상담사를 통해 지역내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 확충이라는 효과와 더불어 은퇴의사 및 유휴 간호인력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가지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보건소별로 은퇴의사 등을 위촉하여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이외계층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출산, 유전질환 및 특수질환 등 노인 및 건강에 대한 지식 및 의료 상담(전화, 사이버 등) 등을 수행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물론 일선 보건소가 이와 같은 인력을 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 배치기준을 비롯한 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3) 공중위생기금 조성 및 인건비 지원

공중위생 분야의 안전관리와 관련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한 (가칭)공중위생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신규 기금의 창설을 위한 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법적 기반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업장(자) 위반행위에 대해 징수되는 과징금, 공중위생영업자 단체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공중위생 업종에 대한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등을 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련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식품진흥기금’의 사례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을 통해 창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제품개발 및 기술향상, 위생설비 지원 등이 개선될 경우 관련 산업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3-4) 종일돌봄교실에서의 학부모 보조인력 활용

종일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유·초연계 시설 등 총 1,000여 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종일돌봄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육과 식사서비스가 제공되며, 생활습관 지도 및 각종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

종일돌봄교실은 일·가정으로 인한 보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의 보육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직접적 효과 외에도 종일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담할 인력을 신규로 채용 또는 육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할 것은 물론, 가정돌봄의 영역에서는 학부모를 보조교사로 활용함으로써 유희인력으로 사장되어 왔던 인력의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3-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대상자를 등급판정하여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기타 특별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획기적인 제도적 개선으로 평가되지만, 1~3등급에 이르는 등급판정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등급외로 구분되어진 대상자들도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시설인프라와 재정상황을 고려하되, 중장기적으로 급여대상자를 1~3등급 외의 대상자까지 수혜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서비스 확대에 따른 관련 일자리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늘어난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상태에 따라 등급외자 노인돌봄비, 가사간병 도우미,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인력 등의 확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관련 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전망과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표 V-13〉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 개혁 과제 요약

규제개혁 명칭	현재 규제 내용	규제개선 사항	관련법규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의료기관이 아니고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었음. •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비용을 보상받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회사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건강관리 서비스법(안) ※관련법안 국회 계류중
보건소 건강상담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간호사업에 대해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별로 은퇴의사 등을 위촉하여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이외계층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 • 출산, 유전질환 및 특수병 등 노인 및 건강에 대한 지식 및 의료 상담(전화, 사이버 등) 	지역보건법
공중위생기금에서 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기금 조성 등의 필요성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 업종에 대한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등을 하기 위한 기금조성 • 영업장(자) 위반행위에 대해 징수되는 과징금, 공중위생영업자 단체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마련 	기금관리 기본법 등
종일돌봄교실에 보조인력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일돌봄 교실의 서비스는 정문 보육강사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일돌봄 서비스의 내용중 가정돌봄에 해당하는 영역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보조교사로 활용 	교과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3등에서 확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를 4등급으로 확대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요 및 일자리 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4) 성장동력 확충

4-1) 식품접객업소 판매 식품의 스티커 표시 사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소에서 일반식당이나 레스토랑 등

의 접객업소로 납품되는 제품의 경우 맛, 특성, 소비자 요구가 매우 가변적임에 따라 모든 제품의 포장을 인쇄하여 생산할 경우 불필요한 포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직접판매되지 않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식품 접객업소 등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스티커 사용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 등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

4-2) 의약품 소포장생산 의무제도 개선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상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제조할 때 의무적으로 소포장 의약품을 10%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소포장생산의무제도는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6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당초 도입 취지는 지역의 <처방의약품 목록>의 변경에 따른 일선 약국의 재고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포장의약품은 실제 약국에서 판매가 부진하여 오히려 재고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제약사에서도 가능하면 낱알 반품까지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소포장생산의무는 과도한 규제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약사법에는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조항(벌금)까지 두고 있어서 의약품 생산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포장의약품 생산에 따른 원가 비용 역시 저가의약품에서는 30~40%까지 증가하는 등 경영상의 압박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의약품소포장생산의무제도의 비율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비율을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표 V-14〉 의약품 소포장 관련 법률

약사법 제38조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자가(自家)시험을 포함한다], 그 밖의 생산 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8.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포장단위의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할 것. 이 경우 일반의약품은 그 특성상 소량포장단위 이하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량포장단위를 10정(또는 캡슐 등)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37조제1항, 제37조의2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4-3)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합리화

식품위생법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에는 식약청 및 해당 시군구청에서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결과를 통보하고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검사방법이 2 이상인 경우, 다른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한정짓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희박하다.

재검사가 필요할 시 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표를 포함하여 요청할 경우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삭제하여 분석 오차/편차에 의한 비의도적인 행정처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모든 검사결과에 대해 재

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재검사 절차에 대한 개선 기준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15〉 식품위생법에 따른 재검사 기준

<p>제23조 (식품등의 재검사)</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식품등을 재검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재검사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p>
--

4-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 개선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지자체장(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통보서(장비 현황)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중적인 행정절차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와 심사평가원간 의료자원 정보 연계 및 신고·등록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번거로운 행정절차 개선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4-5)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조세정책 및 기부금 손비인정 차별 규제 개선

현재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세목은 국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이

있어서 병원의 수익사업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영리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면서도 의료법인은 학교법인 등에 비해서, 또한 법인 등록시의 소관부처와 근거법령에 따라서도 조세혜택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의료법인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에 대해 5년 동안 수익사업소득의 50% 범위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되나,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는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부금의 손금산입 허용 범위 역시 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교육법인) 50%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의료법인 등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만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설립 근거 및 소관부처에 따라 상이한 납세의무와 세제상의 혜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조세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이뤄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6) 위탁급식영업 허위과대광고 처벌대상 제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에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의 경우 허위과대광고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위탁급식영업은 이러한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의 소지가 있으며, 위탁급식영업소는 특성상 판매증진을 위한 허위과대광고의 위반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활동이 일반적이므로 허위과대광고 예외조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때문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제2항의 예외조항에 위탁급식영업소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외조항에 포함시킬 위탁급식영업소에 대한 규모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아울러 여러 가지 관련 정책 방안에 대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V-16〉 식품위생법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제8조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p>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6. 각종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은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제외한다.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p>②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

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영 제25조제2항제6호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 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에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 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4. 그 밖에 별표 3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③ 법 제13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각급 학교 등 위탁급식과 관련된 문제가 빈 발하고, 이러한 급식사고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신 중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7) 기준병실 및 상급병실 확보율 기준의 탄력적 운영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령은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의료법 시행규칙’으로서 전자는 일반병상 확보율을, 후자는 외국인 환자 병상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상급병실 차액을 징 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반병상 확보율을 50%로 규정하고 있으며(종합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70%),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병상을 병상수의 100분의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급병실이 부족한 경우가 있

으며, 의료관광 육성에 따라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적·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병상 확보율 제한과 외국인 환자 병상을 제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할 기준병실 및 상급병실의 확보율 기준을 지역적 위치, 전문 분야, 과거 병실 형태별 가동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그 비율의 완화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표 V-17〉 병상관련 법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가.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입원료(이하 "기본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또는 요양기관변경통보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50퍼센트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다): 70퍼센트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 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4-8) 의료급여환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개선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금액 환급은 요양기관에 수급권자가 금액을 선납부하고 보장기관에 지급신청하여 환급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응급대불제도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진료에 대하여 환자를 대신하여 응급의료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대불청구하는 금액 중 환자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6개월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상받을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의료급여 2종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가운에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여부와 절차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에 의한 보상제도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을 제도개선의 목표로 검토한다. 즉, 의료급여 환자의 응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상한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중증질환자 등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응급의료에서 본인부담상한 적용은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간 제도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9) 식품공정상 인공감미료 성분명에 대한 명시 및 성분별 시험법 추가

식품공전규격에 인공감미료 불검출인 식품군이 많은데, 인공감미료 성분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시험방법에는 삭카린나트륨의 실험법만 있어서 삭카린나트륨만 인공감미료에 해당되는 것인지 혼동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는 합성감미료를 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파칼륨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로 이들 종류별 분석법이 추가되어야 한다.

식품공전규격에 인공감미료 해당 성분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해당 개별 성분별 시험법의 추가가 필요하다.

4-10) 유통기한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판매허용기간’으로 정의되어 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 이와 같은 유통기한제도는 우리나라만 운영하고 있을 뿐, 선진국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일본: 소비기한, 상미기한).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섭취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처분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생산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인 ‘품질유지기한’이 있으나, 유통기간과 같거나 더 짧은 기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활용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일괄적인 유통기한제도를 개선하여 식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기한(부패 변질이 빨라서 신속한 소비가 필요한 제품)’, ‘품질유지기한(부패 변질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적절한 보존이 이루어질 경우 품질 유지가 가능한 제품)’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표 V-18〉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명”이라 함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을 말한다.
2. “식품의 유형”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를 말한다.
3.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캡셀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4-11) 방사선 조사 명칭 변경

방사선 조사에 대한 위생적,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증된 반면, “방사선”이란 단어로 인해 소비자 호감도가 매우 낮고 안전하지 못한 식품으로까지 낙인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방사능”과 “방사선”이 오인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방사능과 방사선을 오인하지 않는 분리된 용어선택의 필요성이 있다. 예로서, 조사식품, 감마선조사식품, 조사살균식품, 이온화살균식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4-12) 식품유통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일반적으로 식품기업에서는 유통전문판매업(OEM) 활동을 위하여 정기적인 방문점검 또는 OEM 업체 상주를 통한 관리, 관련제품에 대한 이화학 및 미생물 분석 검증 등 자체 생산 제품에 준한 엄격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M 제품에서 기준/규격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탁업체에 법규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자발적인 수탁업체 관리 강화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4-13) 영양성분의 색상, 모양 표시제 합리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색상과 모양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품단위로 포화지방, 당, 나트륨 함량 등이 초록색 표시라도 자주 먹으면 빨간색표시 제품을 한번 먹는 것 보다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특정 영양소 함량이 높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빨간색 표시는 소비자들에게는 ‘먹어서는 안되는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거부 혹은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식품보존성과 풍미를 높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유탕의 방법을 이용한 유탕제품의 경우 저감화 의지와 상관없이 ‘총지방’ 및 ‘포화지방’은 적색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성분표시제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방안 혹은 식품 유형의 특성을 감안한 표시방안에 대한 검토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제도가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식품유형을 감안한 새로운 표시제도 개발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V-19〉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2조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 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색상·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14)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중 예외규정 신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숙취해소, 보양 등의 기능성 식품이 단지 식품유형이 음료류 등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기호식품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성인취향의 디저트 및 노년층을 겨냥한 특정화된 양갱 등이 캔디류로 분류되어 부적절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상 제품의 특성 및 섭취목적상 소비대상이 성인인 식품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4-15) 중소병원 기준 적용범위 확대 및 의료법인 포함

현행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대상이 되는 병원의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기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자로서의 자금 및 금융지원 등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소병원은 의료기관수의 80%, 병상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과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폐업율이 8.3%에 이르는 등 경쟁력

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강화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표 V-20〉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조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및 별표 1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별표 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16)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제 체계화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서 MRI와 CT의 설치 기준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미만일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설치 제한은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설치 기준 병상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의 도입과 의료비 증가 억제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공동활용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기관간 공동활용의 절차가 번거로운 면이 많아서 오히려 편법적인 ‘병상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현행 병상수 기준에서 ‘지역별 외래환자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인구밀집도에 따라서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표 V-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 조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설치기준: 1)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2)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4-17) 의료인력 정원 기준 조정

병원 의료인 법정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수를 일정 비율로 입원환자수로 환산한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약사와 의료기사 및 의료관계 인력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은 진료전달체계에 따라 환자의 진료이용행태, 전문과목별 진료능력, 교육연구기능이 다르나, 법정정원은 수십년째 외래 및 입원환자수를 고수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일부 인력의 경우 추가고용에 따른 수가인상분보다 인건비 부담이 높아서 오히려 낮은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경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법정정원 기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시대적 여건 변화와 함께 의료인력 정원 기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18)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현행 의료법의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종합병원 내 입대 계약으로 치과 의원 설치시 필수진료과목 설치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 연구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표 V-22〉 종합병원 진료과목 설치 규정

제3조의3 (종합병원)
<p>①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p>②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p>

〈표 V-23〉 성장동력 확충 관련 규제 개혁 과제 요약

규제개혁 명칭	현재 규제 내용	규제개선 사항	관련법규
식품접객업소 판매 식품의 스티커 표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소에서 접객업소로 납품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포장을 인쇄하여 생산할 경우 불필요한 포장비용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에게 직접판매되지 않고 식품 접객업소 등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스티커 사용의 허용을 검토 	
의약품 소포장생산 의무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상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제조할 때 의무적으로 소포장 의약품을 10% 생산하도록 강제 ●소포장의약품은 실제 약국에서 판매가 부진하여 오히려 재고 부담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소포장생산의무제도의 비율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시장기능에 따른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약사법 제38조 약사법시행규칙 제43조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등 검사결과가 관련 법규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검사 요건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검사가 가능성은 희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완화 필요 	식품위생법 제23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통보서(장비 현황)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중적인 행정절차를 두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와 심사평가원간 의료자원 정보 연계 및 신고·등록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번거로운 행정절차 개선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조세정책 및 기부금 손비인정 차별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의 수익사업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영리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법인은 설립 근거 및 소관부처에 따라 상이한 납세의무와 세제상의 혜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필요 	
위탁급식영업 허위과대광고 처벌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에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의 경우 허위과대광고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위탁급식영업은 이러한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의 소지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제2항의 예외조항에 위탁급식영업소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기준병실 및 상급병실 확보율 기준의 탄력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급병실이 부족한 경우 발생 ●의료관광 욕성에 따라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할 기준병실 및 상급병실의 확보율 기준을 지역적 위치, 전문 분야, 과거 병실 형태별 가동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고려 	

	로 유지하기 위해 일 반병상 확보율 제한과 외국인 환자 병상을 제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		
의료급여환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이 대불청구하 는 금액 중 환자가 지 급할 수 있는 최대 금 액(6개월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서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서 보상받을 수 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 상한제에 의한 보상제도를 건강보험 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을 제도개선의 목표 로 검토 	
식품공정상 인공감미료 성분명에 대한 명시 및 성분별 시험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공전규격에 인공감 미료 불검출인 식품군 이 많은데, 인공감미료 성분이 구체화되어 있 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공전규격에 인공감 미료 해당 성분을 명 확하게 표기하고, 해당 개별성분별 시험법의 추가 필요 	
유통기한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 시 섭취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처분함으 로써 자원 낭비와 생 산자에게 비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괄적인 유통기한제도 를 개선하여 식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기 한’, ‘품질유지기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제기 	
방사선 조사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사선”이란 단어로 인해 소비자 호감도가 매우 낮고 안전하지 못한 식품으로까지 낙 인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사능과 방사선을 오 인하지 않는 분리된 용어선택의 필요성 	
식품유통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M 제품에서 기준/ 규격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에 서 철저하게 관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의견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 탁업체에 법규 위반사 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계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예외 	
영양성분의 색상, 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영양성분 표시제 하에서는 초록색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과 사실적이고 객관적 	

표시제 합리화	라도 자주 먹으면 빨간색표시 제품을 한번 먹는 것 보다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성분표시제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방안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중 예외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숙취해소, 보양 등의 기능성 식품이 단지 식품유형이 음료류 등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기호식품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상 제품의 특성 및 섭취목적상 소비대상이 성인인 식품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필요 	
중소병원 기준 적용범위 확대 및 의료법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는 달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기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자로서의 자금 및 금융지원 등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병원 육성·확충을 위해 중소기업법위를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0억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병원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병원도 중소기업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제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MRI와 CT의 설치 제한은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설치 기준 병상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을 현행 병상수 기준에서 ‘지역별 외래 환자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의료인력 정원 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수를 일정 비율로 입원환자수로 환산한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기준을 환자들의 행태, 진료능력, 기능 등 다양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의료법의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병원 내 임대 계약으로 치과 의원 설치 시 필수진료과목 설치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06

K
I
H
A
S
A

결 론

제6장 결 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어 온 규제 개혁은 현 정부에서도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집권후반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분석하고 그 동안 진행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는 한편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남은 후반기 동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보건복지분야의 규제개혁은 주로 ad-hoc 방식으로 추진되어 옴에 따라 체계적이고 규제간 조화를 이루는 개혁이 추진되지 못한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과제 위주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내용 위주로 규제개혁이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가 국민생활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서 규제개혁의 영역도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에도 수많은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이 일선 행정 담당자에서 출발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체감도나 파급력이 낮은 세부적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에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이 그때그때의 과제발굴 여건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규제개혁 추진의 예측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고, 규제개혁을 위해 쏟아온 노력에 비해 그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토대로 보건의료 분야의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positive)이고 능동적 측면에서의 규제개혁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자율권과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규제개혁은 규제개혁 그 자체로서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겠지만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맞게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적 주요 정책목표와 연결되지 않은 채 규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현재 규제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민생활의 안정, 공정사회의 구현,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등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최우선적인 국정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전략이며, 이를 토대로 할 경우 언제 어디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설정하기가 용이하다.

현실적으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정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분명하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단순히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를 일시에 폐지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규제개혁의 측면만을 고려한 평면적인 발상이다. 주요 국정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기여하는 규제는 존치되어야 필요도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특정 규

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규제개혁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정 규제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나 체감도, 그리고 국민에게 발생한 편익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아울러 보건 복지 분야의 규제개혁이 서민생활 안정이나 공정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관리도 필요하다.

이러한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기별 목표 설정, 추진전략 및 로드맵 마련 등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목표 대비 성과의 달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규제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규제의 질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양적으로 많은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국민의 만족도와 편익증진 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많은 양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의 집중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규제의 완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규제의 강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 등 국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의 강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규제의 강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국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개혁의 추진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규제개혁은 특구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다.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는 도도부현일 수도 있으며, 시정촌 또는 그 이하의 지역단위로도 추진될 수 있다. 규제개혁 시범사업을 위한 특구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운영되며 운영한 다음 그 성과를 평

가하여 규제를 채택하거나 혹은 특군 운영을 연장하기도 하는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개혁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규제개혁과제 발굴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은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evidence)에 입각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시의성을 저해하고 단기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집단 간 의견이 상충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순만·이주선,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5.
- 권장준·정규진, 「공익산업에서의 규제개혁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33집, 2009, p.39-61.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각 년도
- 김 신·최진식,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9.
- 김정해 외,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2007.
- 백병성, 「소비자후생측면에서의 규제개혁 방안: 단순의약품 판매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15권제2호, 2008, p.61-97
-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2010.
- 삼성경제연구소, 『일본의 개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05.
- 심재철 의원실,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화, 藥인가? 毒인가?』, 국회 심재철의원실 토론회 자료, 2009.
- 이영범·최무현, 「OECD 국가의 규제개혁기구 비교연구: 조직유형과 기능적 하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18권제2호, 2006, p.585-607.
- 이영범, 「규제개혁의 국가경제에의 영향」 『kapa@포럼』 제123호, 2008,

p.8-10.

이주선,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7.

이철우,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kapa@포럼』 제123호, 2008,
p.11-15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10.

최무현,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개선방향」, 『kapa@포럼』 제123호, 2008,
p.16-23.

최유성, 「한국 규제개혁의 회고와 전망」, 2009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
대회 발표자료, 2009, p.325-356.

최진식, 「규제개혁정책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0, p.215-242

한국행정연구원,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분석』,
2007.

OECD, Regulatory Policies in OECD Countries: From Interventionism
and to Regulatory Governance, 2002.

부 록

부록 1. 2008년 규제개혁 효과	231
부록 2.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일본의 규제개혁	238
부록 3. 일본 규제개혁 특구 운영 사례	284
부록 4. 외국의 규제개혁 일반 현황	313

부록 1. 2008년 규제개혁 효과

1

전반적인 성과

①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국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가 다수인 보건복지가
죽분야 규제의 특성을 감안, 규제의 합리와 및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
한 국민불편해소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상 규제와 사소하지만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
제를 발굴·개선, “국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국민체감형 규제개혁 주요과제 예시〉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과도한 서류제출로 인한 국
민불편해소 및 업무 간소화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 명부만을 시군구청에 제출함
으로써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간소화
- 장기이식 및 뇌사판정 관련 민원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불편을 완화
-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및 추천수수
료 납부횟수 감축

② 경제적·사회적 중요과제 중점 완료

○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수혜대상이 큰 중요과제를 중점추진하여 완료

〈중요과제 예시〉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08.10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2012년까지 해외환자 10만명 유치하여 연간 9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천명의 신규고용 창출 예상
- 개량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간소화('08.12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 화이자의 고혈압약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특허가 유효함에도 염을 바꾼 아모디핀(암로디핀 캄실레이트)을 2003년 발매하여 2007년까지 490억원에 달하는 보험재정을 절감
- 기초생활보장의 별도가구 인정특례의 불합리성 개선('08.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개정):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자 노인 25만 가구 39만 여명이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
-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08.10 의료채권법 국회제출):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902개, 의료기관 1,619개 혜택

2

주요 과제별 성과

번호	과제명	조치사항 (완료일자)	주요 성과
1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08-10-13)	○ 외국인 환자의 국내 소개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외국인환자 유치가 활성화 - 의료서비스 수지(약 650억 적자) 개선효과가 기대 - 2009년에는 해외환자 4만명을 유치하여 1,460명*의 일자리 창출하고, - 2012년까지 해외환자 10만명 유치하여 연간 9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천명의 신규고용 창출 예상 * 747억원*1.96=1,460명 ('09년 전년대비 진료수입

번호	과제명	조치사항 (완료일자)	주요 성과
			747억원 증가, 보건의료 분야 취업유발계수(매출 1억원 증가시 1.96명) 적용)
2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08-10-22)	○ 채권을 통한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기관 자본조달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 - 채권발행대상 법인 및 의료기관 : 법인 902개, 의료기 관 1,619개 혜택 ※ 민간병원의 타인자본 의존도 현황('06) : 64.2% (제조업 49.7%, 정보산업 43.2%)
3	개량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간소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공포 (08-12-03)	○ 개량신약 약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등재기간을 단축 (최대 90일)시켜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향상시킴으로써, 그 동안 부진했던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에 활력 을 줄 것으로 기대 ○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만 판매 가능한 오리지널 의약품 의 특허기간 중에도 저렴한 대체약제 생산을 활성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화이자의 고혈압약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특허가 유효함에도 염을 바꾼 아모디핀(암로디핀 감실 레이트)을 2003년 발매하여 2007년까지 490억원에 달하는 보험재정을 절감한 바 있음
4	기초생활보장의 별도가구 인정특례의 불합리성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개정 (08-11-03)	○ 결혼한 아들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도 별도가구로 인정하 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수급권 확대 - 혜택대상 :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노인은 시군구별로 3~4가구(총 1천명 내외) 정도이나, 현재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자 노인 25만 가구 39만여명이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
5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08-12-08)	○ 수입자 의무사항인 '제조판매증명서(외국 본사에서는 한 국내 독점 계약업체만 제공)' 비치 의무를 면제하여 독 점 수입권자 이외에도 진정상품과 동일한 제품 수입을 허용 ○ 독점 수입권자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수입 화장 품의 국내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 시장경쟁에 따른 수입화장품 가격 인하요인 발생(수입화 장품 가격의 10~20% 인하효과 기대) - 저렴한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다양성 및 편의 보장 〈국내 화장품 '06년 시장 현황〉 ○ 국내 제조업체 : 508개사, 06년 생산실적 : 약 4 조원, 수출실적 : 3억만불 ○ 수입업체 : 1,987개사, 06년 수입실적 : 6억만불 * 주요수출국 중국, 미국, 일본, 주요수입국 프랑스, 미 국 ○ 세계 11위 시장규모

번호	과제명	조치사항 (완료일자)	주요 성과
6	매장·화장의 방법 개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8-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또는 화장시 입관하지 않아도 매장 또는 화장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 매년 매장 또는 화장건수 총 24만건 중 입관하지 않을 경우를 약 10%(2만 4천건) 추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구입비용 절감(관 1개 비용 10만원 → 24억원 절감) - 화장시 연료비 절감(1건당 1만원 절감 × 12,000건 → 1억2천만원 절감) - 화장시 화장소요시간 단축(1시간30분 → 1시간)
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제출 (08-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개선(희망하는 경우 적용제외) - 국민연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보호 -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보도록 하여 생계급여액에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p>※ '06년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1,448,822명)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18세이상 60세미만자가 650,454명(44.9%)이며, 보장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가 68.8%, 8년미만인 경우가 99.8%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기초생활수급보장기간이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p>
8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제출 (08-1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령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활성화 기대 -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 도모 <p>※ 외국면허소지자 종사인정, 의약품 수입허가 절차 면제 또는 완화,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특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특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의 적용 배제 등</p>
9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의료 연구개발 촉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시행규칙 제 정 (08-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규제특례조항 도입 - 외국인의사가 국내면허 없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료행위 가능 - 의료연구개발 과정의 의약품·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 인허가 규제의 국제규범 적용 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의료연구개발 활성화 - 관련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및 투자촉진 기대
10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08-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의 기준을 1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100병상 이상 9개 이상의 진료과목으로 조정하여 종합병원의 경쟁력 강화

번호	과제명	조치사항 (완료일자)	주요 성과																															
			<table><tr><th colspan="3">현행 의료법</th><th colspan="2">의료법 개정안</th></tr><tr><th>병상수</th><th>100~300</th><th>300초과</th><th>병상수</th><th>100이상</th></tr><tr><td>진료 과목</td><td>7개 이상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td><td>9개 이상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td><td>⇒ 진료 과목</td><td>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td></tr><tr><td>전문의</td><td>7개 과목 전속</td><td>9개 과목 전속</td><td>전문 의</td><td>각 진료과목 별 전속</td></tr><tr><td>의료기관수</td><td>166개소</td><td>150개소</td><td>의료기관수</td><td>274개소</td></tr></table> <p>○ 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중소병원을 특화육성하기 위하여 특수기능병원제도를 도입(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전문병원 제도를, 농어촌지역에는 지역거점병원제도)</p> <table><tr><th>현행 의료법</th><th>국민건강보험 법</th><th>의료법 개정안</th></tr><tr><td>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td><td>+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 + 종합전문요양 기관</td><td>⇒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 상급종합병원 · 특수기능병원 (전문병원, 지역 거점병원)</td></tr></table>	현행 의료법			의료법 개정안		병상수	100~300	300초과	병상수	100이상	진료 과목	7개 이상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	9개 이상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	⇒ 진료 과목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	7개 과목 전속	9개 과목 전속	전문 의	각 진료과목 별 전속	의료기관수	166개소	150개소	의료기관수	274개소	현행 의료법	국민건강보험 법	의료법 개정안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 + 종합전문요양 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 상급종합병원 · 특수기능병원 (전문병원, 지역 거점병원)
현행 의료법			의료법 개정안																															
병상수	100~300	300초과	병상수	100이상																														
진료 과목	7개 이상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	9개 이상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	⇒ 진료 과목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	7개 과목 전속	9개 과목 전속	전문 의	각 진료과목 별 전속																														
의료기관수	166개소	150개소	의료기관수	274개소																														
현행 의료법	국민건강보험 법	의료법 개정안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 + 종합전문요양 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 상급종합병원 · 특수기능병원 (전문병원, 지역 거점병원)																																
11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의료법 개정안 국 회제출	○ 복수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의 경우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 설할 수 있도록 완화																															

번호	과제명	조치사항 (완료일자)	주요 성과
		(08-10-13)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번호	과제명	조치사항 (완료일자)	주요 성과
14	의약품 제조업소의 약사·한약사 의무고용제도 폐지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08-11-28)	○ 제조관리자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무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시장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의약품 제조업소의 약사 또는 한약사 의무고용 제도 폐지, 제품의 특성에 맞는 기술자로 하여금 제조업무를 관리하도록 함 ※ 의약품 제조업소 : 389개소('07.11.20) - 의약품과 의약품 제조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하는 경우, 의약품 제조관리자가 의약품 제조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과 의약품 제조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의약품 제조업소 389개소 중 62개소('07.11.20)
15	국민연금 가입자 증서의 교부 의무 완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제출 (08-11-17)	○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되었으나 이를 희망하는 가입자에게만 교부하도록 개선 ※ 전경련 건의과제 - 특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가입자 자격취득사실 통지를 하고 있어 중복안내에 따른 우편비용 등 행정력 낭비요인 방지 ※ 2007년 가입자증서 발송 현황 : 1,051,785명(총 비용 : 약 3억2천만원)
16	국민연금 보험료의 공제계산서의 작성 교부 의무 완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제출 (08-11-17)	○ 별도의 공제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원천공제된 연금보험료 내역 등을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발행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같음하도록하여 사용자의 편의도모(별도 공제계산서 작성 및 발송비용부담 완화) ※ 전경련 건의과제 ※ '08.2월말 현재 사업장 867,347개소, 사업장가입자 9,226,318명

부록 2.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일본의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명칭	구분	내용
지역 발전 교통 안전 대책 사업	규제개혁 내용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 관할경찰서, 지역주민,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지역참가형협의회가 수립한 지역 발전계획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이 교통규제를 실시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지역 발전 교통 안전 대책 사업’ 관련 특례 조치의 전국 실시에 대하여(2006년 3월 24일자 경찰청 丁規發 제27호)
	실시시기	2006년 3월 24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찰청
로봇 공도 (公道) 실험 원활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보행형/이동형 로봇 실증실험이 도로 사용 허가 대상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로봇의 공도 실험과 관련한 도로 사용 허가 취급에 대하여(2006년 1월 23일자 경찰청 丁規發 제3호)
	실시시기	2006년 1월 23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찰청
공공교통 이용촉진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와 관할경찰서 등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버스/택시/궤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참가형협의회가 수립한 대중교통기관 등의 이용촉진을 위한 계획에 따라 도도부현 경찰이 교통규제를 실시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교통국 교통규제과장으로부터 각 도/부/현 경찰본부장 등에게 통지를 발송하여 대응할 예정
	실시시기	2010년도 내에 조치

	소관부처	경찰청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근무 시간내 기술 이전 겸업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특구 내에 위치한 국립대학 등(인사원 규칙 14-17에 규정된 국립대학 및 특정 시험연구기관 등을 말한다.)의 국립대학교 교원 등(인사원 규칙 14-17에 규정된 국립대학교 교원 또는 연구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은 칸 내에서는 동일함.)이 기술 이전 겸업을 근무시간 중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인정을 신청한 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국립대학교 교원 등이 기술 이전 겸업을 근무시간 내에 하지 않을 시에 기술 이전을 하려는 사업자의 사업 실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 인정되고 또한, 근무 시간 내에 겸업을 하더라도 공무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급여를 감액한다는 전제로 배정된 근무시간의 일부를 할당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국립대학교 교원은 2004년 4월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국가 공무원에서 제외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으므로 근무 시간내 기술 이전 겸업에 대하여 각 법인이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국립대학법인법(2003년 법률 제112호)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법(2003년 법률 제113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인사원】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근무 시간내 연구 성과 활용 겸업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특구 내에 위치한 국립대학 등(인사원 규칙 14-18에 규정된 국립대학 및 시험연구기관 등을 말한다.)의 국립대학교 교원 등(인사원 규칙 14-18에 규정된 국립대학교 교원 또는 연구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은 칸 내에서는 동일함.)이 연구 성과 활용 겸업을 근무시간 중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인정을 신청한 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국립대학교 교원 등이 연구 성과 활용 겸업을 근무시간 내에 하지 않을 시에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실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 인정되고 또한, 근무시간 내에 겸업을 하더라도 공무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급여를 감액한다는 전제로 배정된 근무시간의 일부를 할당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국립대학교 교원은 2004년 4월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국가 공무원에서 제외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으므로 근무 시간내 연구 성과를 활용한 겸업에 대하여는 각 법인이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국립대학법인법(2003년 법률 제112호)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법(2003년 법률 제113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인사원】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근무 시간내 감사역 겸업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특구 내에 위치한 국립대학 등(인사원 규칙 14-19에 규정된 국립대학 및 시험 연구 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내에서는 동일함.)의 국립대학교 교원 등(인사원 규칙 14-19에 규정된 국립대학교 교원 또는 연구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은 칸 내에서는 동일함.)이 감사역 겸업을 근무 시간 중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인정을 신청한 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국립대학교 교원 등이 감사역 겸업을 근무 시간 내에 하지 않을 시에 감사역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 인정되고 또한, 근무 시간 내에 겸업을 하더라도 공무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급여를 감액한다는 전제로 배정된 근무시간의 일부를 할당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국립대학교 교원은 2004년 4월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국가 공무원에서 제외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으므로 근무 시간내 감사역 겸업에 대하여 각 법인이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국립대학법인법(2003년 법률 제112호)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법(2003년 법률 제113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인사원】
예금 취급 금융 기관의 영업용 부동산 효과적 활용사업	규제개혁 내용	특구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전에 대해, 금융청은 특별히 해당 사안과 관련된 조회 내용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사무가이드라인(당시)이 개정됨에 따라 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영업용 부동산 임대 요건을 명확히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중소/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적 감독 지침
	실시시기	2003년 6월 30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금융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의한 선불식 증표 발행 특례 사업	규제개혁 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지역 통화' 발행에 대하여는, 선불식 증표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사전 등록 요건 중 자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내각부령(2007년 내각부령 제27호)
	실시시기	2007년 3월 29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금융청
주민표 사본 자동발급기 설치 장소 확대 사업	규제개혁 내용	주민표 사본 자동발급기를 시정촌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주민표 사본 자동발급기 설치에 관한 기존 통지를 수정. 새로운 통지에 따라 주민표 사본 자동발급기 설치 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① 새로운 기준과 동등한 수준이 확보되었을 경우 시정촌이 판단하여 주민표 사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② 사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통지에 명기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주민표 사본 등 및 인감등록증명서 관련 자동발급기 설치 장소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하여(2005년 3월 28일자 總行市 제249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28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인감등록증명서 자동발급기 설치 장소 확대 사업	규제개혁 내용	인감등록증명서 자동발급기를 시정촌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인감등록증명서 자동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존의 통지를 수정. 새로운 통지에 따라 인감등록증명서 자동발급기 설치 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① 새로운 기준과 동등한 수준이 확보되었을 경우 시정촌이 판단하여 인감등록증명서 자동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② 사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통지에 명기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주민표 사본 등 및 인감등록증명서 관련 자동발급기 설치 장소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하여(2005년 3월 28일자 總行市 제249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28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토지개발공사가 소유한 조성지 임대사업	규제개혁 내용	토지개발공사가 소유한 특구 내의 조성지에 사업용 차지권을 설정하여 업무 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임대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토지개발공사가 소유한 조성지에 사업용 차지권을 설정하여 업무 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임대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정령(2004년 정령 제407호)
	실시시기	2004년 12월 22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국토교통성
지자체가 전적으로 도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전적으로 도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았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5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도매 서비스 제공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전기통신사업의 허가제 및 도매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신고제 등을 폐지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및 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3년 법률 제125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공중선 이득(Antenna Gain)을 증대시킨 5GHz대 무선 접속 시스템 도입 사업	규제개혁 내용	5GHz대 무선 접속 시스템의 무선국 면허와 관련하여, 안테나 송수신 능력(공중선 이득)의 상한치를 올린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무선 설비 규칙(1950년 전파감리위원회규칙 제18호)을 개정한 성령(2005년 총무성령 제84호)
	실시시기	2005년 5월 16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전기통신 업무 이외의 업무에서 무선 접속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규제개혁 내용	무선 접속 시스템 무선국 면허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부여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5GHz대 무선 접속 시스템) 무선 접속 시스템 무선국 면허와 관련하여, 면허제 대신 등록제를 도입. 전기통신 사업자 이외의 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한다. (22/26/38GHz대 무선 접속 시스템)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전파법 시행 규칙(1950년 전파감리위원회규칙 제14호)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년 총무성령 제82호) 무선설비규칙(1950년 전파감리위원회규칙 제18호)을 개정한 성령(2005년 총무성령 제84호) 주파수할당계획(2000년 우정성 고시 제746호)의 일부를 변경한 건(총무성 고시 제572호)

	실시시기	2005년 5월 16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농가 민박의 간이 소방용 설비 등을 허용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농가 민박과 관련하여, 유도등 및 유도 표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소방용 설비 등에 관한 소방 법령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농가 민박에 대한 소방용 설비 등의 기술상의 기준에 대한 특례 적용에 대하여’(2004년 12월 10일자 消防予 제234호)
	실시시기	2004년 12월 10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석유컴플렉스 등 특별방재 구역 내의 사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안전 확보 조치를 하여 시설을 배치하는 등의 사업	규제개혁 내용	석유 컴플렉스 등 특별방재구역 시설 지구의 배치, 특정 통로의 폭, 통로 배치 및 형상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동등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조치를 강구할 경우,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규제 특례 조치의 전국 적용과 관련하여, 석유 컴플렉스 등 특별 방재구역에 신설되는 사업체 등의 시설 지구 배치 등에 관한 성령에, 사업체 별로 상황에 따라 설비를 배치할 수 있는 이른바 ‘특별 승인 제도’를 포함시키기로 한다. 또한, 지방 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특례 내용과 관련된 안전성 판단에 사전에 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석유 컴플렉스 등 특별 방재구역에 신설되는 사업체 등의 시설 지구 배치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년 총무성/경제산업성령 제2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공포/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국내 위성의 지상에서의 무선 통신 면허절차 간소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로켓 발사장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위성의 발사 전 기능 확인과 관련된 무선국 면허 절차 가운데 인공위성 무선국 면허 절차를 생략하기로 하며, 또한, 로켓 발사 계획에 따라 지상 실험 설비(무선국)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전파법 관계 심사 기준의 일부를 개정한 훈령(2005년 10월 31일 총무성 훈령 제57호)
	실시시기	2005년 10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극장 등의 유도등 및 유도 표식에 관한 기준에 대한 특례 적용 사업	규제개혁 내용	<p>특구 내에 소방법 시행령(1961년 정령 제37호, 이하 '정령'이라 한다.) 별표 제1 (1)항의 가에 규정된 극장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구역의 소방장(소방본부가 없는 시정촌의 경우에는 시정촌장, 이하 같음.) 또는 소방서장이 정령 제32조에 입각하여 판단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 해당 극장 등의 피난층의 피난구에 대하여, 유도등 및 유도 표식 설치 및 유지 관련 정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을 통지를 통해 제시한다.</p> <p>【요건】 다음의 1~5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피난층의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하이며, 또한, 객석 부분의 바닥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임. 2. 객석 부분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피난구가 2개 이상 있고, 해당 피난구가 각각의 객석에서 잘 보이며, 또한,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보행 거리가 20미터 이내임. 3. 극장 등의 옥외로 대피한 자가, 해당 극장 등의 개구부로부터 3미터 이내의 부분을 거치지 않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을 것. 4. 화재 시 자동 화재 감지 설비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수동으로도 즉시 점등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출입구를 충분한 밝기로 비출 수 있는 조명기구(비상전원이 부착된)를 피난구 모두에 설치하며, 상영 중에는 해당 피난구 쪽에 관계자를 상주시킬 것. 5. 상영 전에 관계자가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구의 위치 등을 설명할 것.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에 따라 소방법 시행 규칙(1961년 자치 성령 제6호)을 개정하여, 이를 전국에 적용한다. 단, 위의 요건과 관련, 관계자 상주 및 관계자 설명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기로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소방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8년 총무성령 제55호)
	실시시기	2008년 4월 30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총무성
외국인 연구자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규제개혁 내용	외국인 연구자의 체재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 경우,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체재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p>필요최소한의 폐해 예방 조치를 강구한 후에 아래의 조치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연구시설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연구를 함과 동시에 해당 특정 분야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사업을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 2. 해당 외국인 관련 체재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

		장한다. 3.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체제 자격인 '연구' 관련 학력/실무 경험 요건을 완화하고, 체제 자격인 '투자/경영' 관련 투자 요건/실무 경험 요건을 완화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43호)
	실시시기	2006년 11월 24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법무성
외국인 정보처리기술자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규제개혁 내용	외국인 정보처리기술자의 체제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이 특례 조치를 통해 실현된 내용을 확보하고,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전국에 적용하기로 한다. 단, 폐해 예방 조치는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43호)
	실시시기	2006년 11월 24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법무성
야간대학원 유학생 도입 사업	규제개혁 내용	야간 수업을 하는 대학원 연구과에서 교육받는 유학생에게, '유학' 체제자격을 부여하고, 주 28시간 이내의 포괄적인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이 특례 조치를 통해 실현된 내용을 확보하고,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전국에 적용하기로 한다. 단, 폐해 예방 조치는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 기준을 규정한 성령(2006년 법무성령 제29호)
	실시시기	2006년 3월 30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법무성
외국 기업 지점 등의 개설을 촉진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 등이 외국 기업에게 지점 등의 시설을 제공한 경우, 사업체로서의 일본 거점을 확실히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 내 전근' 체제자격과 관련된 기타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점 등의 개설을 준비하는 외국 기업 직원에게 '기업 내 전근' 체제자격을 부여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입국/체제 심사 요령(2005년 7월 26일자 법무성 管在 제3260호)
	실시시기	2005년 9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법무성

특정 형사시설의 수용 및 처우 관련 사무 위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규제개혁 내용	형사시설이 시설 경비 및 수감자 처우의 일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형사시설의 수용 및 처우 관련 사무를, 전국 형사시설이, 민관 경쟁 입찰 또는 민간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구조 개혁 특별 구역법 및 경쟁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9년 법률 제33호)
	실시시기	2009년 5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법무성
특정 형사 시설의 병원 등의 관리위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규제개혁 내용	형사시설이 병원 등의 관리를 공적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역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형사시설의 병원 등의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벽지 이외에 의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의사 근로자 파견 시스템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구조 개혁 특별 구역법 및 경쟁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9년 법률 제33호)
	실시시기	2009년 5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법무성, 후생노동성
단기체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의 단체관광객 또는 수학여행 학생 인솔자가 단기체제 비자를 발급받을 때 재직증명서 등의 직업관련 서류 또는 주민등록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가 전국에 적용되게 된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단기체제 비자 면제가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실시됨에 따라,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전국 적용의 의의를 모두 충족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한국정부에 대한 통고(2006년 2월13일자 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게 보낸 구상서)
	실시시기	2006년 3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외무성
복수단기체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공공성이 강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러시아인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의 장 등이 신원을 보증한다면 외무성으로 서류를 보내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이 경우, FAX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외무대신으로부터 재외공관장 앞으로 통지를 발송함.
	실시시기	2006년 1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외무성
임시 관청 개설 수수료 경감을 통한 무역 촉진 사업	규제개혁 내용	통관 업무의 시간외 수수료인 임시 관청 개설 수수료 금액을 반으로 줄인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수수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시 관청 개설에 필요한 경비를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규제 특례 조치에서는 국제 물류 효율화 효과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액을 2분의 1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적용을 위하여, 국제 물류 효율화의 효과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적용 요건을 작성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5년 법률 제 22호)
	실시시기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재무성
세관 집무 시간 이외의 통관 체제를 정비하여 무역을 촉진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임시 관청 개설 신청이 확실히 예상되는 시간대에 특구 내의 관공서에 미리 직원을 상주시킨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전국 적용을 하는데 있어 ① 집무시간 이외의 통관 체제를 정비할 관공서는, 통관 수요가 많은 시간대(예를 들어, 임시 관청 개설 신청이 1시간당 1건 이상)에는 미리 직원을 상주시키고,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각각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그 이외의 관공서의 경우에도, 집무시간 이외의 통관 수요에 적확하게 대응해야 한다. ② 통관 수요를 확인한다. 이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집무시간 이외의 통관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관공서는, 임시 관청 개설 신청이 1시간당 1건을 크게 밀돌지 않는 정도(2분의 1정도)를, 미리 계속 상주시킬 시간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실적뿐만 아니라, 임시 관청 개설 신청 건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 새로운 항로의 취항, 컨테이너 게이트 오픈 등으로 인해, 조만간 임시 관청 개설 신청이 확실히 1시간당 1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전망에 입각하여, 그 시간대의 통관 체제를 정비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세관 집무시간 이외의 통관체제 정비에 대하여(2005년 6월 15일자 財關 제771호)
	실시시기	2005년 7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재무성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종합 보세 지역의 일정 부분의 토지 등의 소유 또는 관리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 정비 상황으로부터, 민간사업자의 능력을 더 활용하여 종합보세 지역을 설치하고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화물 유통을 상당 부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신청한 특구의 경우, 지자체 등의 출자 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 중에서, 구조 개혁 특별 구역 계획을 통해 특정 사업 실시 주체로 정해진 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허가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민간사업자 등이 종합 보세지역의 일정 부분의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 대한, 지자체 등의 출자 비율 요건을 철폐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4년 법률 제 15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재무성
국가의 시험 연구 시설 사용 절차 신속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특구 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가 시험 연구 시설을 사용하여 시험, 연구, 시험제작, 기타 산관학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는 국가 이외의 자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 제12호의 '재무대신이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해당 시설 소관부처인 각 성 및 각 청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4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재무대신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국가의 시험 연구 시설을 사용하여 시험, 연구, 시험제작, 기타 산관학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는 국가 이외의 자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 제12호의 '재무대신이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해당 시설 소관부처인 각 성 및 각 청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4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재무대신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 제12호 규정에서 재무대신이 협의할 필요 없다고 정한 경우에 대하여' 통지 일부 개정 등에 대하여(2004년 4월 16일자 財理 제 1509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6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재무성
국가의 시험 연구 시설을 사용하기 쉽게 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특구 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가의 시험 연구 시설을 사용하여 시험, 연구, 시험제작, 기타 산관학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는 국가 이외의 자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산관학 연계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당 시설의 소관 부처인 각 성 및 각 청의 장이 인정한 경

		우, 1958년 1월 7일자 藏管 제1호 '국가의 청사 등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의 취급 기준에 대하여' 통지 1의 (9)의 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외의 자의 국가 시험 연구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국가의 시험 연구 시설을 사용하여 시험, 연구, 시험 제작, 기타 산관학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는 국가 이외의 자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산관학 연계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당 시설의 소관 부처인 각 성 및 각 청의 장이 인정한 경우, 국가 이외의 자의 국가 시험 연구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국가의 청사 등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의 취급 기준에 대하여' 통지 일부 개정 등에 대하여 (2004년 4월 16일자 財理 제1510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6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재무성
거리기준 연장을 통한 보세 장치장 설치 촉진 사업	규제개혁 내용	보세 장치장 거리 기준과 관련하여, 관할 세관 건물에서 약 2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그 거리를 대략 100킬로미터 이내로 연장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관세법 기본 통지 일부 개정 등에 대하여'(2005년 4월 27일자 財關 제564호)
	실시시기	2005년 5월 2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재무성
구조 개혁 특별 구역 연구 개발 학교 설치 사업	규제개혁 내용	각 학교 종류 간에 커리큘럼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교과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등, 교육 과정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교육 과정을 편성, 실시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1.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2. 1의 요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따를 것이며, 규제 소관 부처의 관여는, 헌법,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및 학습지도요령상의 관점 및 아동 또는 학생 교육을 적절히 배려한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학교교육법 시행 규칙(1947년 문부성령 제11호)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8년 문부과학성령 제5호) 및 학교교육법 시행 규칙 제55조의 2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성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건(2008년 문부과학성 고시 제30호) 등

	실시시기	2008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등교거부 아동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 설치 관련 교육 과정 탄력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등교거부 아동 학생 및 등교거부 상태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가, 교육 과정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교육 과정을 편성, 실시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1.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2. 1의 요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따를 것이며, 규제 소관 부처의 관여는, 헌법,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의 관점에 입각하여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학교교육법 시행 규칙(1947년 문부성령 제11호)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년 문부과학성령 제38호)
	실시시기	2005년 7월 6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등의 학교 외 학습 인정 가능 단위 수 확대 사업	규제개혁 내용	다른 고등학교나 중등 교육학교 후기 과정에서 이수한 단위를, 고등학교 단위 수와 교환할 수 있는 범위를, 20단위에서 36단위까지 늘린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1.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2. 1의 요건적합성은 지자체가 판단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학교교육법 시행 규칙(1947년 문부성령 제11호)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년 문부과학성령 제16호)
	실시시기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IT 등을 활용하여 등교거부 아동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 등이 IT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학습활동을, 등교거부 아동 학생이 교육지원센터나 자택 등에서 받을 경우, 해당 학습에 대하여 학생부에 출석으로 기재하고, 또한, 그 성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1.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2. 1의 요건적합성은 지자체가 판단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등교거부 아동 학생이 자택에서 IT 등을 활용하여 학습 활동을 할 경우의 학생부 출결 취급 등에 대하여’(17文科初 제437호)
	실시시기	2005년 7월 6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3세 미만 아동과 관련한	규제개혁 내용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시기는 현재 만3세부터이나, 이를 만3세에 달하는 해의 연초로 한다.
	전국에 적용	유아 발달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유치원의 인적/물

유치원 입학 사업	되는 내용	적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며, 개별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2세 아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전국 적용을 실시한다. 단, 지도상의 유의사항이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유치원을 활용한 육아 지원 차원에서 2세 아동을 입학시킬 때의 유의사항에 대하여’(18文科初 제1275호)
	실시시기	2007년 3월 3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유치원에서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 등의 합동 활동 사업	규제개혁 내용	유치원 교원에 대한 전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학급 정원 범위 내에서, 유치원에 적을 두지 않은 같은 연령대의 유아에 대하여 교육/보육 활동을 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유치원 설치 기준(1956년 문부성령 제32호)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년 문부과학성령 제35호)
	실시시기	2005년 5월 13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시정촌 채용 교원 관련 특별 면허장 수여 절차 신속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교원면허가 없는 자를 특별 면허장을 수여한다는 전제로, 시정촌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직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특별 면허장을 수여하기 위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학식경험자에 대한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시정촌 및 도도부현이 청취 내용, 필요 서류 및 절차를 미리 협의하여 정해두어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장 수여 절차를 신속화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시정촌 채용 교원 관련 특별 면허장 수여 절차 신속화 및 면허장 수여 절차 간소화 사업의 취급에 대하여’(18文科初 제22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시정촌 채용 교원 관련 면허장 수여 절차 간소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교원면허가 없는 자를, 시정촌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직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정촌이 실시하는 채용선발과 면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해당 시정촌이 포함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직원 검정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시정촌 및 도도부현이 미리 협의, 연계하여 통일화, 간소화함으로써 면허장 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시정촌 채용 교원 관련 특별 면허장 수여 절차 신속화 및 면허장 수여 절차 간소화 사업의 취급에 대하여’(18文科初 제22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시정촌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직원 임용사업	규제개혁 내용	교직원의 급여를 도도부현이 부담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어, 시정촌 교육위원회를 통해 시정촌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직원의 임용을 제도화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교직원의 급여를 도도부현이 부담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어, 시정촌 교육위원회를 통해 시정촌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직원의 임용을 제도화한다. 이 경우, 시정촌의 인사 자유를 구속하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국가의 보조금 등의 정리 및 합리화 등에 따른 의무교육비 국고부담법 등의 일부 등을 개정하는 등의 법률(2006년 법률 제18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학교 건물 면적 기준 완화를 통한 대학원 설치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지역 집적도가 높다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 대학원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내각총리대신에게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받을 경우, 학교 건물 면적을 줄일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대학원 대학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학교 부지 면적 기준을 철폐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학교교육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3년 문부과학성령 제15호)
	실시시기	2003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국유 시설 등의 임대 사용 확대를 통한 연구 교류 촉진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특구 내에 과학기술연구의 핵심이 되는 국가 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해당 기관이 실시하는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가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시험 연구 시설을 국가 이외의 자가 임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단, 본 특례 실시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815의 특례는, 본 특례가 전국에 적용됨에 따라 삭제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연구 교류 촉진법(1986년 법률 제57호) 및 특정 방사광 시설의 공동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1994년 법률 제78호)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6년 법률 제37호)

	실시시기	2006년 7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구조 개혁 특별 구역 연구 개발 학교의 교과서 조기 지급 특례 사업	규제개혁 내용	구조 개혁 특별 구역 연구 개발 학교에서 특별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소속 학년 이외의 학년용 교과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급 학년의 교과서를 아래 학년 아동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본 특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인 구조 개혁 특별 구역 연구 개발 학교 설치 사업이 전국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2008년도의 의무교육 각급 학교용 교과서 무상 지급 사무에 대하여’(19 初教科 제25호의 2)
	실시시기	2008년 3월 3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학교 부지/ 학교 건물을 자기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초등학교 등의 설치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교육적으로 또는 연구를 위해 특별한 수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법인의 기부행위를 인가하는데 있어, 대학 등의 학교 부지/학교 건물에 대한 자기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규제 소관 부처가, 학교경영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적 기초의 보유 및 계속적 사용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학교 부지/학교 건물의 자기 소유를 대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체 조치를 강구한 가운데, 2007년도 설치 인가 신청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중에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학교 부지/학교 건물을 자기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초등학교 등의 설치 사업의 전국 적용에 대하여’(18文科高 제756호)
	실시시기	2007년 3월 28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학교 부지/ 학교 건물을 자기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 등의 설치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교육적으로 또는 연구를 위해 특별한 수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법인의 기부행위를 인가하는데 있어, 대학 등의 학교 부지/학교 건물에 대한 자기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규제 소관 부처가, 학교경영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적 기초의 보유 및 계속적 사용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학교 부지/학교 건물의 자기 소유를 대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체 조치를 강구한 가운데, 2007년도 설치 인가 신청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중에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학교법인의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 변경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의 전부를 개정한 건(2007년 문부과학성 고

		시 제41호) 학교 설치회사가 대학, 단기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또는 대학의 학부, 학부의 학과, 대학원, 대학원의 연구과 혹은 단기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대학 등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등에 관한 심사 기준 전부를 개정한 건(2007년 문부과학성 고시 제42호)
	실시시기	2007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 이용 사업	규제개혁 내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공동 이용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공동 이용 지침에 따라 공동 이용하게 된 시설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의 합동 활동 및 보육실 공동 이용과 관련된 취급에 대하여’ (17文科初 제262호)
	실시시기	2005년 5월 13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등의 외국 유학 시에 인정 가능한 단위 수 확대 사업	규제개혁 내용	교장이, 외국 고등학교에서의 이수한 것을 국내 고등학교 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30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제도에 대하여, 지자체가 교육적으로 특별히 배려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 가능 단위 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에게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 36단위까지 단위를 인정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학교교육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10년 문부과학성령 제8호)
	실시시기	2010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전일제 과정 학생 중 등교거부 상태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IT 등을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교육적으로 특별히 배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고등학교 등의 전일제 과정에 재적 중인 등교거부 상태 학생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단위 수 가운데 20단위까지 통신제 교육 과정 특례를 적용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학습을 도입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교직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교육환경 정비 상황 등을 적절하게 배려한 가운데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활용하여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내용 및 요건에 입각하여 인정 가능 단위 수를 36단 위까지 늘려 전국에 적용한다. 또한, 정시제 과정의 경우에도 통신 방법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단위를 취 득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고등학교 전일제 과정 및 정시제 과정에 있는 등교거 부 학생에 대하여 통신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함으 로써 단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20文科初 제8077호)
	실시시기	2009년 3월 3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취학 시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 연장	규제개혁 내용	현재 취학시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은 11월 30일까지 이나, 특구 내 시정촌에서 다른 특구 외 시정촌으로 이사한 어린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12월 31일까지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취학 시에는 원칙적으로 11월30일까지 건강진단을 받 아야 하는데, 통학 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에는, 학교 취학 시의 건강진단을 12월 1일 이후에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아래 각 호의 모든 조건 을 갖춘 경우 12월 31일까지 적절한 시기에 건강진단 을 받을 수 있다. ① 맹/농/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성명 및 맹/농/특수학교에 취학시킨다는 내용의 통지를 12월 31일까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② 12월 중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한 어린이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 에 규정된 건강진단 및 동법 제5조에 규정된 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할 것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정령(2004년 정령 제142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어린이집과 함동 활동을 하는 경우의 유치원 면적 기준 특례 사업	규제개혁 내용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치 원의 경우, 유치원 설치 기준 별표 제1에 규정된 건물 면적 및 별표 제2에 규정된 운동장 면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용 부분 전체를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 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유치원 설치 기준(1956년 문부성령 제32호)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년 문부과학성령 제35호)
	실시시기	2005년 5월 13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학교 부지/	규제개혁	교육적으로 특별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

학교 건물을 자기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전수학교 등의 설치 사업	내용	하는 전수학교 등을 설치하는데 있어 소관 관청인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을 경우, 학교 부지/학교 건물의 자기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안정성/계속성 확보 등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우려를 적절하게 배려한 가운데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학교 부지/학교 건물을 자기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전수학교 등의 설치 사업의 전국 적용에 대하여’(19文科生 제460호)
	실시시기	2007년 12월 25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도시지역 시정촌의 공공직업안정소에 대한 중개 사업	규제개혁 내용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특례 대상인 도서지역의 기준(구인/구직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도서지역이고, 또한 해당 도서지역 내 한 지역(시정촌) 내에 가장 인구가 많은 지구에서, 선박,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관할 공공직업안정소를 왕래할 경우, 왕복 시간이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일 것)에 적합한 도서지역 내 지역(시정촌)이 특구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시정촌장이 공공직업안정소의 구인/구직 중개 사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위와 같은 도서지역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 포함된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시정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생노동대신이 해당 도서지역을 ‘공공직업안정소까지의 교통이 불편하여 해당 공공직업안정소에 직접 구인 또는 구직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직업안정법 제11조 제1항)으로 지정하여, 해당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시정촌장이 구인 및 구직 신청을 공공직업안정소에 중개하는 사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도서지역 시정촌 관련 직업안정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입각한 지정 취급에 대하여(2004년 3월22일자 職發 제0322002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관민 공동창구 설치를 통한 직업 소개 사업	규제개혁 내용	공공직업안정소와 민간 직업소개기관이 공동창구를 설치할 경우에 구직정보 및 구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비밀준수의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공공직업안정소와 민간 직업소개기관이 공동창구를 설치할 경우,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가운데 구인/구직정보를 상호간에 연락/회부하는 것이 비밀 준수 의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지를 통해 분명히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지자체가 설치한 관민 공동창구에 대하여(2005년 3월 24일자 職發 제0324001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지자체에 의한 직업 경력 형성 촉진 보조금 신청 사무 대행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자적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인정한 교육 훈련 관련 직업 경력 형성 촉진 보조금 수급과 관련하여, 사업 내의 직업 능력 개발 계획에 입각한 연간 직업 능력 개발 계획을 작성하고, 지급 창구(고용/능력개발기구)을 통한 내용 조회에 대한 대응 등의 신청 사무를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지자체가 지역의 인재육성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당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적절하게 사업 내의 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업 경력 형성 촉진 보조금 신청 사무를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지자체의 직업 경력 형성 촉진 보조금 신청 사무대행의 전국화에 대하여(2004년 4월 1일자 能發 제0401010호/제0401011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농업인 연수교육 시설의 기관장의 무료 직업 소개 사업	규제개혁 내용	특구인정을 받은 지자체의 경우, 현립 농업대학교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현립 농업대학교가 특구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농업인 연수 교육 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에 대하여(2005년 3월 31일자 職發 제0331002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지정 통원 개호 사업체 등의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수용 사업	규제개혁 내용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가 지정 통원 개호 사업체를, 장애아가 장애인 주간 서비스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새로운 제도를 통해 장애인 및 장애아가 지정 통원 개호 사업체를, 장애아가 생활 개호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입각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171호)
	실시시기	2006년 10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양호 노인홈 관리위탁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양호노인홈 관리 위탁처로 주식회사 등을 인정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양호노인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지정 관리자 제도에 따라 주식회사 등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한 통지를 발송하고 이를 전국에 적용한다. 또한, 전국 도도부현 과장회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사업자 등의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통지 내용을 알린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지자체가 설치한 개호 서비스 제공 시설의 지정 관리자 제도 취급에 대하여(2007년 3월30일자 老計發 제0330006호, 老振發 제0330002호, 老老發 제0330004호)
	실시시기	2007년 3월 30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아동복지 시설의 조리 업무 담당자 파견 도입 사업	규제개혁 내용	유아원, 모자 생활지원 시설, 아동양호시설,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 및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조리 업무 담당자를 외부에서 파견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구조 개혁 특별 구역의 유아원 등의 조리 업무 담당자의 외부 파견 전국 적용에 대하여’(2006년 3월 17일 雇兒發 제0317001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장애아 시설의 조리 업무 외부 위탁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체장애아 시설, 제1종 자폐아 시설, 제2종 자폐아 시설, 지체장애아 통원시설, 시각장애아 시설, 청각장애아 시설, 난청 유아 통원시설, 지체장애아 시설, 지체장애 아동요양보호 시설 및 중증 심신 장애아 시설의 조리 담당자를 외부에서 파견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구조 개혁 특별 구역의 ‘장애아 시설의 조리 업무 외부 위탁 사업’에 대하여’(障發 제0331011호)
	실시시기	2006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보일러 및 제1종 압력용기 개방 검사 주기 연장	규제개혁 내용	보일러 등의 개방 검사 주기는 현재 최장 4년에 1번이나, 현행 규정을 통해 담보되는 안전성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할 경우, 개방 검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보일러 등의 개방 검사 주기에 대하여, 보일러 등의

사업	되는 내용	운전 실적, 시간 경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남은 수명 평가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8년에 1번으로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보일러 등의 개방 검사 주기 관련 인정 제도에 대하여’(2008년 3월 27일자 基發 제0327003호)
	실시시기	2008년 4월 1일 시행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어린이집이 사적 계약 아동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다른 시설의 통폐합 등으로 인해 사적 계약 아동을 현행 정원을 초과하여 받아들일 경우, 어린이집 정원을 개정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인정 어린이집 제도에 입각하여 전국에 적용하며, 규제 소관 부처는 본 특례 조치의 내용이 인정 어린이집 제도에 따라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리도록 한다. 단, 현재 본 특례 조치를 활용 중인 지역의 경우, 규제 소관 부처는 각 시설이 인정 어린이집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해 잘 홍보하고 인정 어린이집으로 이행하기까지 본 특례 조치에 따라 실시 중인 내용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어린이집의 사적 계약 아동의 탄력적 수용 관련 취급에 대하여(2007년 3월 30일자 雇兒發 제0330032호)
	실시시기	2007년 3월 30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의 합동 활동 사업	규제개혁 내용	공동이용지침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를 합동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공동 이용 지침에 따라 공동 이용하게 된 시설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의 합동 활동 및 보육실 공동 이용과 관련된 취급에 대하여’(2005년 5월 13일자 17文科初 제262호/雇兒發 제0513003호)
	실시시기	2005년 5월 13일 실시(조치 완료)
내화 건축물 및 준내화 건축물 요건을 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단층으로 건축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추고, 또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내화 및 준내화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본 특례 조치를 통해 실현된 내용을 확보한다. 단, 폐

사회복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되는 내용	해 예방조치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필요최소한의 조치만 취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지정재택서비스 등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33호)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사업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34호) ‘특별양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38호) ‘양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57호) ‘신체장애자 갱생지원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76호) ‘통지를 통해 조치가 이루어진 구조 개혁 특별 구역의 ‘내화 건축물 및 준내화 건축물 요건을 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전국 적용에 대하여’(2006년 3월 31일 老發 제0331004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보육 실시 관련 사무를 교육위원회 에 위임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시정촌의 권한에 속하는 보육 실시 관련 사무를 해당 시정촌에 설치된 교육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국가의 보조금 등의 정리 및 합리화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된 법률
	실시시기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인원 및 설비 요건을 완화한 단독형 아동 단기 입소 사업	규제개혁 내용	아동 단기 입소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간호 직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간호 직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단독형 아동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관련 단독형 단기 입소 사업 등에 대하여(2004년 3월 29일자 障障發 제0329003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정신지체자 통원 재활 시설의 신체장애자 수용 사업	규제개혁 내용	정신지체자 통원 재활시설은, 18세 이상의 정신지체자를 입소시켜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하는 시설이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3개 장애가 일원화되어 있어, 장애 구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체계에 따라 전국에서 실시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장애인 자립 지원법(2005년 법률 제123호)
	실시시기	2006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 외부 반입 방식 허용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립 어린이집은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3세 이상 아동에 대한 급식을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국에 적용한다. 단, 어린이의 발달 상황에 따른 대응, 알러지 아동/허약체질 아동에 대한 대응, 식사 교육 등의 관점을 중시하여,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좋은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이를 알려나가며 급식 제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아동 복지 시설 최저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된 성령(2010년 후생노동성령 제75호) 어린이집의 식사제공에 대하여(2010년 6월 1일 雇兒發 제0601004호)
	실시시기	2010년 6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 이용 사업	규제개혁 내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공동 이용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요건을 갖추는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공동 이용 지침에 따라 공동 이용하게 된 시설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의 합동 활동 및 보육실 공동 이용과 관련된 취급에 대하여’ (2005년 5월 13일자 17文科初 제262호/雇兒發 제0513003호)
	실시시기	2005년 5월 13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구호시설 정원 요건의 완화	규제개혁 내용	사회적 입원환자 등을 받아들일 곳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구호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행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구호시설 정원 요건을 30명 이상으로 줄인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현행 50명 이상의 인원이 입소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는 구호시설, 갱생시설 및 숙소 제공 시설의 규모를, 30명 이상의 인원이 입소 가능한 규모로 줄인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구호시설, 갱생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숙소 제공 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최저 기준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4년 후생노동성령 제48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신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을 하는 시설을 확대	규제개혁 내용	해당 사업체의 실정에 따라 야간에 적당한 인원수의 종사자를 배치하고, 거실, 욕실 및 세탁실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보호를 실시할 수 있을 경우, 신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신체장애자 통원 복지 시설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개호 직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단독형 신체장애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관련 단독형 단기 입소 사업 등에 대하여(2004년 3월 29일자 障障發 제0329003호)
	실시시기	2004년 4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인원 및 설비 요건을 완화한 단독형 정신지체자 단기 입소 사업의 허용	규제개혁 내용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개호 직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정신지체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관리자, 의사, 생활지원 담당자 또는 개호 직원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거실, 식당, 욕실, 세면실, 화장실, 조리실 및 세탁실 또는 세탁장을 설치할 경우, 단독형 정신지체자 단기 입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및 장애아 관련 단독형 단기 입소 사업 등에 대하여 (2004년 3월29일자 障障發 제0329003호)
	실시시기	2004년 4월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일당 단위를 적용한 시설 훈련 등의 지원 사업	규제개혁 내용	시설 훈련 등의 지원비는 월 단위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여러가지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일당 단위로 산정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새로운 제도에서는 시설 훈련 등의 지원비를 일당 단위로 산정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신체장애자 복지법에 입각한 지정 시설 지원에 필요한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210호) '정신지체자 복지법에 입각한 지정 시설 지원에 필요한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211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일당 단위를 적용한 정신지체자 지역 생활 원조 사업	규제개혁 내용	정신지체자 지역 생활 원조 관련 재택 생활지원비는 월 단위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일당 단위로 산정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새로운 제도에서는, 공동 생활 원조 관련 개호급여/훈련 등 급여(2006년 3월 31일까지 각각 정신지체자 지역 생활 원조, 재택 생활 지원비)를 일당 단위로 산정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입각한 지정장애 복지서비스 및 기준 해당 장애 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169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시정촌에 의한 광견병 예방원 임명 사업	규제개혁 내용	광견병 예방원 임명, 포획인 지정, 개 억류 사무 등을 시정촌이 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광견병예방법(1950년 법률 제247호)을 개정하여 대응할 예정
	실시시기	신속히 조치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위성형 거주 시설 설치 사업	규제개혁 내용	기존의 특별양호노인홈이, 입소정원을 줄이고 각방/유닛케어형 시설로 바꾸는 등의 요건을 갖추며 또한 해당 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성형 거주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위성형 거주 시설의 생활상담원 등의 인원기준 및 복도 폭 등의 설비 기준을 완화

		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본체 시설의 입소 정원을 줄인다는 요건을 철폐함과 동시에, 위성형 거주 시설에 기능훈련 지도원, 개호지원 전문원 등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본체 시설 직원을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처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두지 않아도 되는 등 본 특례 조치를 통해 실현된 내용을 더욱 완화하여,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34호) ‘구조 개혁 특별 구역의 ‘위성형 거주 시설 설치 사업’의 전국 적용에 대하여’(2006년 3월 31일 社援發 제0331029호/老發 제0331018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위성형 장애인 시설 설치 사업	규제개혁 내용	입소 시설 이용자의 지역 생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룹홈 등 본래의 지역 이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과 밀접한 연계를 확보한 가운데 소규모 장애인 시설(이하 ‘위성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새로운 제도를 통해 설치 가능해진 ‘케어홈’에서, 위성 시설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입각한 지정장애 복지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171호) 및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입각한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172호)
	실시시기	2006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입소정원을 3명 이상 7명 이하로 정한 지정 공동 생활 원조 사업	규제개혁 내용	주택 사정상 입주 정원이 4명 이상 7명 이하로 정해져 있는 현행 지정 공동 생활 원조 사업(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장애인의 지역 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판단하여 입주 정원 3명 이상 7명 이하의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사업자 전체 차원에서 최저 정원(4명)을 채우면 되며, 1개 주거당 이용자는 2명 이상이면 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입각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171호)

	실시시기	2006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단기 이용 사업	규제개혁 내용	사전에 이용 기간(퇴소일)을 정하여 치매 고령자 그룹 홈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① 일정 연수를 받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② 그룹홈 개원 후 3년 이상 경과하는 등의 요건을 설정한 다음 이를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금액 산정 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126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의 장애아(자) 수용 사업	규제개혁 내용	장애인 또는 장애아가, 근처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법 (2005년 법률 제123호)에 규정된 생활 개호 등을 이 용하기 어려울 경우, 개호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 호)에 규정된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 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기준 해당 생활 개호에 한하여, 특구 규제 특례 조치 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아동복지시설 최저 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 (2010년 후생노동성령제75호)
	실시시기	2010년 6월 1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지자체 또는 농지 보유 합리화법인이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를 특정법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농업 생산법인이 아닌 법인이 지자체 또는 농지 보유 합리화 법인으로부터 농지 등을 임차받을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비롯하여 현행과 같은 제도로 하며,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 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농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9년 법률 제57 호)
	실시시기	2005년 9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이외의 자에 의한 특정 농지 임대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특구 내에 경작 목적으로 실제로 이용되지 않고, 또한 계속적으로 경작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농지 기타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지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내각총리 대신에게 인정을 신청 인정받은 경우, 해당 인정일부 터 특정 사업 실시 주체인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이 외의 자가 다음에 제시하는 농지에 대하여 임차권 기 타 사용 및 수익을 위해 권리 설정을 할 때에, 특정 농지 임대 에 관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p>‘특정 농지 임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에 든 요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같은 항에 규정된 특정 농지 임대로 간주하여 특정 농지 임대법 및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규정을 적용한다.</p> <p>1. 특정 사업의 실시 주체의 소유 관련 농지(실시 주체가 해당 농지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인정받은 지자체와 협정을 체결한 것에 한함.)</p> <p>2. 특정 사업의 실시 주체가 지자체 또는 농지 보유 합리화 법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용으로 제공하기로 하여, 사용 임차를 통해 권리 또는 임차권을 설정 받은 농지(실시 주체가 해당 농지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인정받은 지자체 및 특정 사업 대상 농지 임대를 하는 지자체 또는 농지 보유 합리화 법인과 협정을 체결한 것에 한함.)</p>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특정 농지 임대에 관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1989년 법률 제58호)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5년 법률 제52호)
	실시시기	2005년 9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농업생산 법인이 실시하는 농업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규제개혁 내용	농업 생산 법인이 농업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농업 체험 시설 운영 및 농업 체험을 위한 민박업 등을 추가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시행 규칙(1980년 농림수산성령 제34호)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년 농림수산성령 제93호)
	실시시기	2005년 9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 권리 취득 후의 최저 면적 요건에 대한 특례 설정 기준을 탄력화 함으로써 농지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규제개혁 내용	농지 권리를 취득한 이후, 권리를 갖게 되는 농지의 합계 면적 관련 최저 면적 요건을 10are(주:100㎡) 이상으로 낮추어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현행과 동일한 제도로 하며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시행 규칙(1980년 농림수산성령 제34호)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년 농림수산성령 제93호)
	실시시기	2005년 9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특정 어항 시설 운영 고도화 추진 사업	규제개혁 내용	어항 관리자가 선정한 민간사업자가 수산물 관련 위생 관리 방법의 개선 등 어항시설의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행정 재산인 어항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국가의 관여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현행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유지한 가운데,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어항 어장 정비법(1950년 법률 제137호) 및 후진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공공사업 관련 국가 부담 비율 특례에 관한 법률(1961년 법률 제112호)일부를 개정한 법률(2007년 법률 제61호)
	실시시기	2007년 8월 15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자연 에너지 발전사업	규제개혁 내용	민간사업자가 일반 전기 사업자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연 에너지 발전과 관련하여, 국유 임야의 기능 및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헥타르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국유 임야를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하여(2001년 9월 7일자 13 林國業 제65호 임야청 장관 통지)를 개정
	실시시기	2009년 4월 1일(조치 완료)
중심 시가지의 상업 활성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대규모 소매 점포의 신설/변경 신고 후 8개월 동안 신설 및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신고 관련 입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중심시가지의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를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의 일부 등을 개정하는 등의 법률(2006년 법률 제54호)
	실시시기	2006년 8월 22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자본관계 등에 의거하지 않는 밀접한 관계를 통한 전력 특정	규제개혁 내용	전력 공급자와 수용가 사이에 자본 관계 등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정 공급 제도를, 동일 기업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거래 관계 등이 있는 경우, 공급자와 수용가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인정한다.
	전국에 적용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되는 전력 공급자와 수용

공급 사업	되는 내용	가 사이에 생산공정, 자본관계, 인적관계 등과 관계없이 공급자가 특정 공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거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 관계가 앞으로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조합이 발전 설비 시설 보유 또는 유지 관리를 하는 경우로써, 그 관계가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특구 규제 특례 조치에는 협정에 지자체가 관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나, 전국 전개를 하는데 있어 그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를 더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117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15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일반용 전기 공작물로 위상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 가정용 연료 전지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가정용 연료전지를 자가용 전기 공작물에서 일반용 전기 공작물로 위상을 변경함으로써, 일반 가정이 주입 기술자 선임 및 보안 규정 책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 등에 입각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체 고분자형 연료 전지 발전 설비이고, 출력이 10kW미만인 것은, 일반용 전기공작물로 보아 주입 기술자 선정 및 보안 규정 책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년 경제산업성령 제19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10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연료 전지 발전 설비 도입 사업	규제개혁 내용	가정용 연료전지(단, 비상용 예비 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제외.)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연료가스가 통하는 부분이 불활성 가스 등이며, 연료가스를 치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인정한다. (1) 고체 고분자형일 것. (2) 출력 10kW 미만일 것. (3) 연료 전지 설비 가운데 연료가스가 통하는 부분에서 연료가스가 배제되는 구조일 것, 또는 연료 전지 설비 가운데 연료가스가 통하는 부분에 밀봉된 연료가스에 의한 폭발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일 것.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가정용 연료전지(단, 비상용 예비 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제외.)에 대하여, 위와 동등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료가스가 통하는 부분이 불활성 가스 등이며, 연료가스를 치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인정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발전용 화력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정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50호)
	실시시기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다이메틸 에테르 시험 연구 시설의 변경 공사 절차 간소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다이메틸에테르 시험 연구 설비로 지자체가 인정한 것에 대하여, 처리능력이 변경되지 않는 공사를 할 때에 필요한 절차를,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신고가 불필요하게 간소화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전국에 적용과 관련하여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과 같이 전국에 적용할 것이며, 가령 시험 연구 설비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는 등의 대체 조치가 요건인 경우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용기 보안 검사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년 경제산업성령 제39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다이메틸 에테르 시험 연구 시설에 방폭구조가 필요하지 않은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현재의 규정을 통해 담보된 안전성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특구 내 지자체 장이 지정한 다이메틸 에테르 시험 연구 시설에, 방폭 성능이 없는 구조의 전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경제산업대신의 특별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액화 석유 가스 보안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56호)
	실시시기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매설된 다이메틸 에테르 저장 설비의 보안 거리 변경 사업	규제개혁 내용	현행 규정을 통해 담보된 안전성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특구 내에 설치된 다이메틸 에테르 저장 설비의 보안 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경제산업대신의 특별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액화 석유 가스 보안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56호)
	실시시기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자체 검사 대상 확대 사업	규제개혁 내용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해 인정 검사 실시자가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제출한 아래의 내용이 현행 규정을 통해 담보된 안전성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은 처리 능력 증가율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1) 처리능력 20%이상이 증가되는 공사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여도 보안이 확보된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요령 (2) 구체적인 처리능력 증가율 상한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에 입각하여 (1)의 평가 기준을 분명히 하는 등을 통해 전국에 원활하게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인정 완성 검사 실시자 및 인정 보안 검사 실시자의 인정에 대하여(내규)(2007년 5월 30일자 2007/05/16 原院 제1호)
	실시시기	2007년 5월 30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수소가스 충전소 등의 가연성 가스 제조 시설의 보안 거리 변경 사업	규제개혁 내용	현재의 규정을 통해 담보된 안전성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특구 내에 설치된 수소가스 충전소 등의 가연성 가스 제조시설의 보안 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경제산업대신의 특별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액화 석유 가스 보안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 (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56호)
	실시시기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가연성 가스 압축 시의 함유 산소량 변경 사업	규제개혁 내용	현재의 규정을 통해 담보된 안전성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특구 내에서 가연성 가스 압축 시의 함유 산소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경제산업대신의 특별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액화 석유 가스 보안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 (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56호)
	실시시기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방액제 내외의 배관 설치 기준 변경 사업	규제개혁 내용	현재의 규정을 통해 담보된 안전성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특구 내에서 방액제 내외의 배관 설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경제산업대신의 특별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액화 석유 가스 보안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 (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56호)
	실시시기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고압 가스 설비의 개방 검사 기간 변경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 제안에 따라, 고압가스 설비 개방 검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일정한 조직 체제가 구축되고 남은 수명 예측 진단 등과 관련된 대체 조치에 대한 민간 규격이 제안되고 그 적정성이 확인되어 국가 기준으로 채택되었을 경우, 각 사업자가 이 규격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가를 도도부현이 판단함으로써 개별 기기에 대한 개방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냉동 보안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109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석유 컴플렉스 등 특별 방재구역 내 사업체에 대한 다양한 안전 확보 조치를 통한 시설 배치 등의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 제안에 따라 석유 컴플렉스 등 특별방재구역에 서의 시설 지구의 배치, 특정 통로의 폭, 통로 배치 및 형상 등의 기준을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규제의 특례 조치를 전국 적용하는데 있어, 석유 컴플렉스 등 특별 방재 구역에 신설되는 사업체 등의 시설 지구 배치 등에 관한 성령에 사업체 상황에 따라 설비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별 승인 제도'를 포함 시킨다. 또한 지방 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특례 내용과 관련된 안전성 판단에 사전에 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석유 컴플렉스 등 특별 방재구역에 신설되는 사업체 등의 시설 지구 배치 등에 관한 성령(1976년 통상산업성/자치성령 제1호)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년 총무성/경제산업성령 제2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특정시설의 보안 검사 기간 변경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 제안에 따라 특정시설의 보안 검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공기 분리 설비를 제조 세부항목 고시 제14조에 추가 함으로써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제조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및 제조 방법 등에 관한 기술 기준 세부항목을 정한 고시(1982년 9월 27일 고시 제379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특정 제조 사업체의 경계선까지의	규제개혁 내용	현재의 규정을 통해 담보된 안전성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특구 내에 설치된 특정 제조 사업체의 고압가스 제조시설로부터 사업체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거리변경 사업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경제산업대신의 특별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액화 석유 가스 보안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 (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56호)
	실시시기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고압 가스 설비 관련 인접 보안 구획 내에 위치한 고압가스 제조설비 까지의 거리 변경 사업	규제개혁 내용	현재의 규정을 통해 담보된 안전성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특구 내에 설치된 특정 제 조 사업체의 고압 가스 설비로부터 인접 보안 구획 내 에 위치한 고압가스 제조설비까지의 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경제산업대신의 특별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액화 석유 가스 보안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 (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56호)
	실시시기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특정 제조 사업체의 시험 연구 시설 변경 공사 절차 간소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에 의해 특정 제조 사업체 시험 연구 시설이라 인정된 경우, 처리량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구조 변경 을 경미한 변경 공사로 보고, 허가 신청을 신고제로 하여 신고는 불필요한 것으로 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전국에 적용과 관련하여,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과 같이 전국에 적용할 것이며, 가령 시험 연구 설비 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는 등의 대체 조치가 요건 인 경우,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용기 보안 검사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 년 경제산업성령 제39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고압 가스 설비의 기술 상의 기준을 변경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현행 규정을 통해 담보된 안전성과 동등한 안전성이 담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특구 내의 고압 가스 설비 의 기술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경제산업대신의 특별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일반고압가스보안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6년 경제산업성령 제43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3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수료자에 대한 초급 시스템	규제개혁 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강좌 수료자에 대하여, 초급 시스템 관리자 시험의 시험과목 중 오전 시험 과목을 면제한 다.

관리자 시험 오전시험을 면제하는 강좌 개설 사업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개설자가 IPA가 제공하는 문제를 사용한 인정 강좌에 대하여, 규제소관 부처에 따르면 전국에 적용하는데 따라 ① IPA의 재산성 개선을 위해 강좌 인정 심사료 설정 및 문제 제공료 개정, ② 인정 강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 유효기한 설정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정 강좌 개설 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한 가운데,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을 전국에 적용한다.(단,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은 초급 시스템 관리자 시험이 폐지되는데 따라 2009년 4월 30일자로 종료함.)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정보 처리 기술자 시험 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 (2006년 경제산업성령 제82호) 초급 시스템 관리자 시험 및 기본 정보 기술자 시험의 이수 항목을 정한 고시(2006년 경제산업성 고시 제 247호)
	실시시기	2006년 8월 14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수료자에 대한 기본 정보기술자 시험의 오전 시험을 면제하기 위한 강좌 개설 사업	규제개혁 내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강좌 수료자가, 기본 정보 기술자 시험의 시험과목 중 오전 시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신청절차 등의 간소화를 적절하게 배려한 가운데, 특 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 (2009년 경제산업성령 제59호)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규칙 제2조 제6항 제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 처리 기술자 시험 규칙 제2 조 제6항 제2호에 규정된 경제산업대신이 고시로 정 한 민간 자격 및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경제산업대 신이 고시로 정한 문제를 정한 건(2009년 경제산업성 고시 제302호)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규칙 제2조 제6항 제1호의 경제 산업대신이 정한 기본 정보 기술자 시험 관련 이수 항 목 일부를 개정한 고시(2009년 경제산업성 고시 제 303호)
	실시시기	2010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온천 광산의 보안 기술 직원(담당자) 외부 위탁/ 검무 사업	규제개혁 내용	온천광산의 해당 광산 외부에서 보안 기술 직원(담당자)을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담당자를 외부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2이상 또는 3이상의 광산 담당자를 겸무시킬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광산 보안 규칙이 폐지되고 새로이 광산 보안법 시행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담당자 제도가 폐지되어 새로

		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해당 작업 감독자 선임 시에 외부 위탁이 가능하며, 또한 보안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담당자의 겸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광산보안법 시행 규칙(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96호)
	실시시기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온천 광산의 방폭형이 아닌 전기 시설 설치 사업	규제개혁 내용	온천광산의 현행 방폭형 기기 사용의무에 대하여, 현행 광산보안법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광업권자가 강구할 조치로 예시된 조치, 혹은 해당 조치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실증된 조치를 강구한 경우, 방폭형 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광산보안법 시행 규칙(2004년 경제산업성령 제96호)
	실시시기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온천 광산의 시설 설치 제한 완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온천광산의 가연성 가스가 분출하거나 또는 분출할 우려가 높은 갱정(坑井) 등으로 부터 주택 등까지의 거리를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광산보안법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광업에서 사용하는 공작물 등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한 성령 관련 고시에서, 일반법(소방법)에서 규정된 보안 거리와 동등하고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음이 입증, 확인된 경우, 거리 제한을 더 완화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광업에서 사용하는 공작물 등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한 성령에 따라 광업에서 사용하는 공작물 등의 보안 거리 등을 제정한 건(2005년 경제산업성 고시 제57호)
	실시시기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온천 광산의 고압 가스 설비 등의 설치 제한 완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온천광산의 새로이 고압 가스 설비를 설치할 시의 건축물 등의 거리 제한에 대하여, 현행 광산보안법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광업에서 사용하는 공작물 등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한 성령 관련 고시에서, 일반법(소방법)에서 규정된 보안 거리와 동등하고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음이 입증, 확인된 경우, 거리 제한을 더 완화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광업에서 사용하는 공작물 등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한 성령에 따라 광업에서 사용하는 공작물 등의 보안

		거리 등을 제정한 건(2005년 경제산업성 고시 제57호)
	실시시기	2005년 4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경륜장 입장료 무료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경륜 시행자가 되어 개최하는 경륜에 대하여, 경륜장 내의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입장료를 무료화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구 계획 인정을 받은 경우, 경륜을 개최하는 날 중 해당 지자체가 정한 날의 입장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무료화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경륜장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자전거 경기법 시행 규칙 및 소형 자동차 경주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 한 성령(2007년 경제산업성령 제42호)
	실시시기	2007년 6월 13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이전 촉진 지역에서 제외함 으로써 사업자 교류 연계를 촉진 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사업자 교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공장 이전이 필요한 지역인 '이전 촉진 지역'에서 제외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공업 재배치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특례 조치를 강구한 공업 재배치 촉진법 시행령 제1조 기준을 규정한 성령을 폐지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공업 재배치 촉진법 시행 규칙 등을 폐지한 성령(2006년 재무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령 제2호)
	실시시기	2006년 4월 26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공유 수면 매립지 용도 변경 등의 유연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조기에 매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임해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조개혁 특별구역계획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의 허가 기준인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 또한 대신(大臣) 협의 처리기간을 수리된 후 통지까지 2주일(토, 일, 공휴일 제외.)로 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준공 인가를 고시한 매립지에 대하여, 임해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작성한 이용 계획이 일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경우, 해당 매립지 관련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의 허가 기준인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 또한 대신 협의 처리기간을 수리 후 통지까지 2

		주일(토, 일, 공휴일 제외.)로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매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임해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구역의 공유수면매립법(1921년 법률 제 57호) 제27조 및 제29조의 적용 관련 특례 조치에 대하여(2004년 12월 17일자 國河政 제92호, 國港管 제857호)
	실시시기	2005년 1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공유 수면 매립지의 용도 구분 유연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기존의 용도구분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이용 형태 및 복합적 토지 이용의 경우에도 공유 수면 매립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규제 소관 부처가 인정 특구의 특정 사업 진척 상황을 확인한 후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에 적용하는데 있어 지자체가 특구 계획에 대신하는 계획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할 경우, 계획에는 필요최소한의 내용 및 절차를 담는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매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임해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구역의 공유수면매립법(1921년 법률 제 57호) 제27조 및 제29조의 적용 관련 특례 조치에 대하여(2005년 6월 27일자 國河政 제28호, 國港管 제253호)
	실시시기	2005년 7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특정 부두 운영 효율화추진 사업	규제개혁 내용	민간 기업중에 항만관리자가 인정한 자에 대하여, 행정 재산인 공공컨테이너 터미널을 일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인정을 대신하는 국토교통대신 동의에 대하여, 그 기준을 명시하며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항만법(1950년 법률 제218호) 일부 개정을 포함한 '해상물류 기반 강화를 위한 항만법 등의 일부를 개정 한 법률'(2006년 법률 제38호)
	실시시기	2006년 10월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자동차 회송 운행 시의 임시번호판 표시 유연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해당 구역에 국제 자동차 전용 선박이 출발/도착하는 부두가 위치해 있고, 법 제4조 제2항 구조 개혁 특별 구역 계획에서 정한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운행 구간 이 그 도로 및 통행 차량의 상황, 주변 환경을 보았을 때 주로 자동차 전용 선박에서 양육된 자동차가 주차장, 정비 공장, 기타 관계 시설로 회송되거나 또는 자동차 전용 선박에 신기 위한 자동차 회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여 특구로 인정받은

		후, 도로 운송차량법 제36조의 2에 규정된 회송 운행 허가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구간에서만 사용가능한 회송 운행 허가 번호표를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성령(2005년 국토교통성령 제14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중량물 수송 효율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중량물을 수송하는 차량이 교량/고가 도로 등이 아닌 경로로 통행하고, 또한, 축중이 10톤(구동축에 에어스펜션을 장착한 차량의 구동 윤중의 경우 11.5톤) 이하이며, 도로 보수 등을 지자체 등이 적절하게 관리할 경우, 차량 총중량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차량 통행 경로가 도로의 횡단으로 한정된 경우의 차량 총중량 및 윤중 특례 조치를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도로의 횡단에 한정된 특수차량 통행 허가 특례에 대하여(2010년 9월 30일 國道交 제47호)
	실시시기	2010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NPO등의 자원봉사 차원의 수송을 유상 운송할 경우의 사용 차량을 확대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복지 유상 운송의 경우, 사용 차량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단 등 일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이용자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복지 유상 운송을 전국에 보급하고, 수송의 안전성과 여객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 유상 운송의 전체적인 체계를 재검토하고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법률을 개정한다. 해당 법률 개정이 현행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도로운송법(1951년 법률 제183호)의 일부 개정을 포함한 '도로운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6년 법률 제40호)
	실시시기	2006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교통기관 공백 과소 지역에서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수송현황을 보았을 때, 택시 등의 대중교통기관만으로는 주민 수송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NPO 등이 교통기관 공백 과소지에서 주민 수송을 유상으로 운송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운영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판명된 문제점 등을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한 후 구

		<p>조개혁신특별구역계획을 신청하여 인정받을 경우, 해당 NPO 등에 의한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허가한다.</p> <p>1. 운송주체가 해당 수송 확보와 관련하여 지자체로부터 구체적인 협력 의뢰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NPO (보건, 의료 혹은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또는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함.) 또는 지자체가 스스로 주재하는 자원봉사 조직일 것.</p> <p>2. 운송대상은 미리 등록된 회원 및 그 동반자이며 회원의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 구역 내이어야 함. 또한 운송 출발지 또는 도착지 중 어느 하나가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구역 내에 있을 것.</p> <p>3. 운송에 사용할 차량에 주민 수송 관련 유상 운송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것, 운임 및 요금, 운전자 성명 및 자동차 등록번호 등을 승객이 알기 쉽게 게시할 것.</p> <p>4.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보통 제2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가운데 충분한 능력 및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받을 것.</p> <p>5. 운송에 사용할 차량 모두에 대하여, 대인 8,000만 엔 이상, 대물 200만 엔 이상의 임의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할 계획이 있을 것.</p> <p>6. 운송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은 해당 지역의 일반 승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임 금액 상한선, 대중교통기관의 상황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리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할 것.</p> <p>7. 운행 관리 체제가 갖추어져 있고 지휘 명령 체계가 명확해야 하며 사고 방지 교육 및 지도 체제가 구축되어 있을 것. 사고 시 처리 및 책임 체제 등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을 것. 사용할 차량에 대한 정비 관리 체제가 확립되어 있고, 또한, 이용자의 불만 처리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p> <p>8.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도로 운송법 제7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아닐 것.</p>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NPO 등이 자원봉사 수송을 유상으로 실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운영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판명된 문제점 등을 신속히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해당 NPO 등이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건 대하여 신속히 허가한다. 위의 1~8의 허가 요건과 관련하여 운송 주체, 운송 대상 등의 요건을 완화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복지유상운송 및 과소지유상운송관련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의한 허가취급에 대하여(2004년 3월 16일자 國自旅 제240호)
	실시시기	2004년 3월 3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특정매립지 관련 소유권 이전 제한 기간 등 단축 사업	규제개혁 내용	항만 내 매립지의 권리 이전/설정, 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한 기간이 준공 인가 고시 이후 10년이던 것을 5 년으로 단축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실시 주체의 주체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특구인정을 대신하는 국토교통 대신 과의 협의를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항만법(1950년 법률 제218호) 일부 개정을 포함한 ‘ 해상 물류 기반 강화를 위한 항만법 등의 일부를 개정 한 법률’(2006년 법률 제38호)
	실시시기	2006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옥외 광고물 제거를 통한 미관정화 유지 사업	규제개혁 내용	도도부현 등이, 특구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주거전 용지역, 풍치지구 등의 지역이고,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옥외광고물 표시 상황 등을 보았을 때, 미관 정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 각총리대신에게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 깃발 형 광고 등도 간이 제거 대상에 포함시킨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별한 지역 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조례 를 위반한 깃발형 광고를 간이 제거할 수 있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옥외광고물법(1949년 법률 제189호) 일부 개정을 포 함한 ‘경관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111호)
	실시시기	2004년 12월 17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도로관리자가 설치한 유료 도로 주차장의 특별 요금 설정 및 변경 절차 용이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일 경우, 국가의 허 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 이용 요금 중 회수권 요금, 야 간 1박 요금, 1개월 정기 요금 등의 특별 요금을 설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 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도로정비특별조치법에 따라 도로관리자가 설치하는 유 료 도로 주차장의 특별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의 취급에 대하여(2005년 9월 22일자 國道有 제37 호)
	실시시기	2005년 10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유학생용 숙소와 관련하여 공영 주택을 목적 이외로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다음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내각 총리대신에게 구조 개혁 특별 구역 계획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 보조금 등 관련 예산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입각한 공영 주택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국토교통 대신에게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간소화하는 사업		사후 보고함으로써 국토교통 대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취급하기로 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1. 유학생(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1951년 정령 제319호) 별표 제1의 4의 위의 란에 규정된 '유학' 체재 자격으로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용 숙소가 부족하여, 해당 숙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2. 공영주택의 원 입주자들의 입주를 저해하지 않고, 공영주택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전국에 적용하는데 있어 사업주체가 특구 계획을 대신하는 계획을 지방정비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절차를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유학생용 숙소와 관련하여 공영주택을 목적 외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간소화하는 것에 대하여(전국에 적용 실시)(2005년 3월 25일자 國住總 제205호)
	실시시기	2005년 3월 25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대학 교실 천정 높이 관련 건축 기준 수정	규제개혁 내용	학교 천정 높이가 3.0미터 이상이라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의 특례를 만들어, 대학 교실의 경우에도 일반 용도와 마찬가지로 천정 높이 최소 기준을 2.1미터까지 낮춘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개정 전 3미터 이상이었던 대학 교실 천정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낮춘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건축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정령(2003년 정령 제423호)
	실시시기	2003년 9월 25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가 (빈 집) 정보 제공 등을 권장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NPO 법인 등의 사업주체가 공가 임대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가를 임차하여 희망자에게 해당 공가를 전대(轉貸)하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가 특구 내 부동산 임대차/매매 거래 건수 등의 거래 동향을 감안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그린투어리즘, 농촌체험학습 등 지역 활성화 정책 목적에 따라 이를 권장하는 것은 택지건물거래업법의 적정한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이 때, 특구 인정 신청을 대신하는 절차로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판단한 후, 해당 지자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면허 행정청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실을 사전에 연락하여 해당 면허 행정청으로부터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

		다. 단, 특례 전국 적용에 따라, 규제 소관 부처로부터 (1) 가령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택지건물거래업법상의 매개 행위를 무면허로 해도 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2) 정보 제공 등 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택지 건물 거래업자 등에게 해당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알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잘 숙지시킨다. 이 경우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요건이 추가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공가 정보 제공 등을 권장할 경우에 대한 택지건물거래업법의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2005년 11월 1일자 國總動 제55호/제56호)
	실시시기	2005년 11월 1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환경을 배려한 렌트카형 car sharing을 위한 무인 대여 시스템 가능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지자체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줄이고자, 공회전 중지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을 사용한 렌트카형 car sharing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 개혁 특별 구역 계획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 해당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렌트카형 car sharing과 관련된 도로운송법 제80조 제2항에 입각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대여가 무인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IT 등을 활용하여 차량 정비/관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체 조치를 강구할 경우, 신속히 허가하기로 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대여인을 자동차 사용자로 하여 이루어지는 자가용 자동차 대여(렌트카) 취급에 대하여(2006년 3월 30일 國自旅 제286호)
	실시시기	2006년 3월 30일 실시(조치 완료)
	소관부처	국토교통성
국립/국정공원에서 자연을 활용한 행사를 개최하기 쉽도록 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국립/국정공원 내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실시되는 풍치 또는 풍경 유지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역 허가 및 보통 지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지자체가 풍치 유지를 위한 배려, 원상회복을 위한 체제/내용 등을 기재한 '행사계획'을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환경성 지방 지분부국(支分部局)에, 국정공원의 경우에는 도도부현에 제출함으로써, 특구 규제 특례 조치와 마찬가지로, 해당계획에 입각한 국립/국정공원 특별 지역 또는 보통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행위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작물 신축 및 광고물 게재 등의 행위의 경우 허가/신고가 필요없

		다. 해당 '행사 계획'은 특구계획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것이어야 하며, '행사 계획'에 기재된 각 행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행사 실시자는 행사 명칭, 행위 개요, 장소, 실시 기간을 환경성 지방 지분부국 또는 도도부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자연공원법 시행 규칙(1957년 후생성령 제41호)
	실시시기	2006년 3월 30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환경성
재생 이용 인정 제도 대상 폐기물 확대 사업	규제개혁 내용	재생 이용 인정 제도(재활용 대상품을 환경대신이 인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관련업, 시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체제)의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① 폐타이어를 제철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② 폐목재(제습 조치를 한 것에 한함)를 제철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전국에 적용 되는 내용	폐타이어를 제철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환경대신이 정한 일반 폐기물(1997년 후생성 고시 제258호), 재생이용 관련 특례 대상인 산업폐기물(1997년 후생성 고시 제259호)을 개정 폐고무 제품 관련 재생이용 내용 등의 기준(2006년 환경성 고시 제77호)을 신설
	실시시기	2006년 3월 28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환경성
망 또는 올가미를 지정하여 수렵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	규제개혁 내용	조수로 인해 농림업이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해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포획이 어려운 지역에서 조수로 인한 농림업 피해를 방지하고, 조수를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며 수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내각총리대신에게 구조 개혁 특구 지역 계획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 인정 구역 내에서 망/올가미 수렵 면허 관련 수렵 면허 시험을 실시할 때에 신청자가 망 또는 올가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정하여 신청할 경우, 망 또는 올가미 중 하나의 수렵법에 특화된 문제로 구성된 시험을 치름으로써 수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시정촌이 신청 주체인 경우, 관할 도도부현 지사의 수렵 면허 사무 중 수렵 면허 시험 실시 관련 사무를 해당 시정촌에 위임한 경우,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해당 시정촌의 특례를 조치한다고 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해당 특구 내에서 받은 면허의 경우 해당 특구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특구 내의 수렵자 등록 시에는 시험을 본 망 또는 올가미 별로 등록한다. 또한, 면허 신청 및 등록 신청대상자는 해당 특구 내에 주소지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전국에 적용	망/올가미 수렵면허를 망 수렵면허와 올가미 수렵면허

	되는 내용	로 구분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조수 보호 및 수렵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6년 법률 제67호) 등
	실시시기	2007년 4월 16일 시행(조치 완료)
	소관부처	환경성
일반 폐기물 용융 고화물 이용 특례 사업	규제개혁 내용	1998년 3월 26일자 生衛發 제508호 후생성 생활 위생국 수도환경부장통지 특례 통지인 '구조개혁특별구역의 '일반 폐기물 용융 고화물 재생 이용 실시' 관련 용도의 특례 조치에 대하여(통지)(2006년 3월 28일자 環廢對發 제060328001호)' 내용에 적합한 일반 폐기물 용융 고화물 용도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구조 개혁 특별 구역 계획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 받은 경우, 해당 구조 개혁 특별 구역 내에 한하여 시정촌이 스스로 발주한 공공 건설 공사로 실시되는 지중 공간의 충전 이용에 대하여도 폐기물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	특구 규제 특례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을 전국에 적용한다.
	전국 적용을 위한 법령	'일반 폐기물 용융 고화물 재생이용 실시 촉진 관련 통지 일부 개정에 대하여'(2009년 10월 2일자 環廢對發 제091002001호)
	실시시기	2009년 10월 2일 시행(실시 완료)
	소관부처	환경성

부록 3. 일본 규제개혁특구 운영 사례

특구 명칭	구분	내용
구시로시 아칸(阿寒)호 온천지구 공생형 복지 서비스 특구	추진 지자체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釧路)시
	구역범위	구시로시 구역 일부(아칸호 온천지구)
	특구 개요	구시로시의 복지 서비스 기반 정비는 주로 도시부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구시로시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아칸호 온천지구에, 2009년 12월, 이 지구 최초의 복지서비스 제공 거점인 공생형 다기능 시설이 개설되었다. 그 중심이 된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간호 사업체가,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아(자)도 수용함으로써, 지구 내에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아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지역의 normalization 의식을 고조시키는 계기로 삼아 관광지로서의 hospitality를 향상시킨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간호 사업체가 장애아(자)를 받아들이는 사업
신토불이를 통해 풍요로운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홋카이도 기요사토쵸(清里町)
	구역범위	홋카이도 샤리(斜里)군 기요사토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여성의 사회참가가 진행되는 속에서 육아 지원 및 보육의 질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의 보육 및 부모에 대한 지원의 장으로서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기 고장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식사 내용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집/초등학교/중학교의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급식 식자재 구입 일원화 및 급식 조리사의 적절한 배치 등을 통하여 급식 조리 업무와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효율화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자기 고장에서	추진 지자체	홋카이도 유베츠쵸
	구역범위	홋카이도 몬베츠(紋別)군 유베츠쵸(湧別町) 지역 전

생산된 것을 사용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특구		체
	특구 개요	가미유베츠초(上湧別町)/유베츠초는 육아 지원과 식사 교육을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초(町)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 센터에서는 이 지역의 신선하고 풍부한 농산물과 어패류를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맛벌이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위의 2개 초(町)내 어린이집에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원래 총 4곳의 어린이집에서 각각 조리를 하여 식사로 제공하였으나, 조리 및 식자재 구입이 상당히 비경제적인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여, 초(町)내 학교 급식 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측에 제공함으로써, 신도불이를 배려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식습관을 정착시키고자 한다. 또한 급식 식자재 구입 일원화를 통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해 진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니캇뿌초 광견병 예방 특구	추진 지자체	홋카이도 니캇뿌초(新冠町)
	구역범위	홋카이도 니캇뿌군 니캇뿌초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현재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광견병 예방원 임명, 포획인 지정 및 개역류 등을 시정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을 망라하여 광견병 예방원을 배치하고 들개 발생시 즉시 대응 및 미등록견 해소, 광견병 예방 집중 지도 등 지역에 뿌리내린 동물 지도 활동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육동물의 적절한 사육을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시정촌에 의한 광견병 예방원의 임명
아키타시 지역 밀착공생형 복지특구	추진 지자체	아키타(秋田)현 아키타시
	구역범위	아키타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아키타시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활용하여, 기존 해당 시설에서 장애아(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시내 지역 전체적으로 장애 유무 및 연령 구분 없이 복지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본 계획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도 장애아(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장애아(자)의 지역에서의 자립을 촉진하고, 아키타시형 복지 서비스를 가일층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어린이집/ 학교에서의	추진 지자체	야마가타(山形)현 가네야마마치(金山町)
	구역범위	야마가타현 모가미(最上)군 가네야마마치 지역 전체

일관된 식사 교육을 통한 가네야마인 만들기 특구	특구 개요	가네야마마치에서는 현재 공립 어린이집에서 독자적으로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립 초등학교 5교의 급식은 공동 조리장에서 조리하여 학교로 운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급식은 지역의 방침인 '유아기로부터 일관된 교육'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어린이집 급식을 공동조리장에서 조리하여 반입함으로써, 동일 메뉴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영양과 건강, 식자재 생산 등에 대해 일관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원아/아동 학생의 보호자 등이 생산하는 자기 고장 생산품을 소비(신토불이)함으로써 기간 산업인 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식사 교육 기능 통합을 통한 차세대 육성 튼튼 특구	추진 지자체	야마가타현 모가미마치(最上町)
	구역범위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모가미마치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모가미마치는 유치원/초등학교 일환(一環) 교육이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지도 기준인 '모가미마치 신 유아 교육 과정'을 책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를 위하여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식사 교육', '신토불이 식사 교육'을 기본 목표로 한 종합적인 식사 교육 기능을 모가미마치 학교 급식 센터에 부여함으로써, 모가미마치의 독자적이고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타카하타마치 사이 좋은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야마가타현 타카하타마치(高畠町)
	구역범위	야마가타현 히가시오키타마(東置賜)군 타카하타마치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타카하타마치 공립 어린이집은 급식 식자재를 소량 주문이 가능한 현지 업자에게서 조달하고 있는데, 공립 어린이집 3곳 중 정원 미달인 니이쥬쿠(二井宿) 어린이집의 경우 현지 업자가 폐업하여 급식 업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소량 주문이기 때문에 먼 곳의 업체에서 식자재를 조달하기는 어려우므로 근처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반입해 들여오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과제가 많아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설비 등의 여력이 있는 다른 공립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급식을 반입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아미마치 활기찬 육아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이바라기(茨城)현 아미마치(阿見町)
	구역범위	이바라기현 이나시키(稲敷)군 아미마치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아미마치는 현재 7개 어린이집(공립6, 사립1) 정원

		600명에 대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미마치 역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고 취업 여성이 증가하는 등 육아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립 어린이집의 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원내 조리로는 고조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 급식 센터에서 급식을 외부 반입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유아에서 중학생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합리화를 통해 절감된 경비를 재원 삼아 육아 지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구닛코 니코니코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군마(群馬)현 구니무라(六合村)
	구역범위	군마현 아가츠마(吾妻)군 구니무라 지역 전체
	특구 개요	구니무라는 군마현 북서부에 위치한 과소/고령화, 급격한 저출산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합동 시설인 '구니 어린이집'을 건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체화하여 운영하는 등의 시책을 책정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만족할 만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급식 센터에서 외부 반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 식자재 다양화 등 풍요로운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일관된 식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사이타마현 서비스 관리 책임자 자격 요건 탄력화 특구	추진 지자체	사이타마(埼玉)현 사이타마현
	구역범위	사이타마현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사이타마현은 장애인 지원 계획에 입각하여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조합한 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근거한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체 등의 수를 늘려 왔으나, 사업체 지정 기준 미달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특례를 활용하여 서비스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체 등을 더욱 늘림으로써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기회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서비스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 탄력화 사업
브레멘 공생형 서비스 추진 특구	추진 지자체	치바현(千葉縣) 이스미시
	구역범위	이스미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치바현은 민간과 행정이 합동으로 시책을 기획/전개하

		고, 장애인, 고령자 등의 대상자 횡단적인 시책을 목표로 한 '건강복지치바방식'을 통해, '누구나 있는 그대로/그 사람답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브레멘형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 복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자)를 수용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이 자기가 익숙한 지역에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횡단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치바현이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건강한 어린이가 자라나는 요코시바 히카리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치바현 요코시바히카리마치(横芝光町)
	구역범위	치바현 산부(山武)군 요코시바히카리마치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라이프스타일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식생활의 영양 균형이 깨지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등 어린이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식사 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초(町)립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급식 센터에서 외부 반입함으로써 연령에 맞춘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급식 외부 반입을 통해 절감된 경비를 재원으로 하여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아오타키마치 육아 활기찬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치바현 아오타키마치(大多喜町)
	구역범위	치바현 이스미(夷隅)군 아오타키마치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아오타키마치에는 현재 공립 어린이집(미즈바 어린이집, 츠구미의 숲 어린이집) 2곳이 있는데, 1999년과 2004년에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새로이 개원한 어린이집 들이다. 개원 후 유아 보육/일시 보육/연장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휴일 보육 등 다양해진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세심한 보육 행정을 계속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례 조치를 통해 공립 어린이집 급식의 외부 반입을 허용하는 사업을 활용하여, 완전 전기화된 주방(전자 조리 설비)를 도입, 조리 환경이 뛰어난 미즈바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한 후 반출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츠구미의 숲 어린이집에 제공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가나가와 바이오 의료	추진 지자체	가나가와현(神奈川) 가나가와현

산업 특구	구역범위	가나가와현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도의 연구 성과에 입각한 새로운 첨단 기술/산업 창출을 촉진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바이오 관련 기술은 다양한 업종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본 특구 계획을 통해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의 미용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력 등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원활하게 사업화하고, 새로운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향상시켜, 민간 주도에 의한 지역 산업 활성화, 현민의 장수/건강, 마음이 풍요로운 삶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병원 등 개설 회사에 의한 병원 등의 개설
요코하마 젊은이 서포트 스테이션의 공공직업안정소 인터넷 서비스구인 정보를 이용한 직업 소개 특구	추진 지자체	가나가와현 요코하마(横浜)시
	구역범위	요코하마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공공직업안정소 인터넷 서비스 구인 정보 검색에 사업체명 등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요코하마 젊은이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NPO법인이 이용자에게 직업 소개를 하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소에 사업자명 등을 문의하고, 사업자가 양해할 경우 사업자 등이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공개되는데, 그 사업자에게 구인 신청을 의뢰하여 이용자에게 직업 소개를 함으로써 요코하마 젊은이 서포트 스테이션의 직업 소개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NPO 법인에 의한 직업 소개에 대한 지원 사업
도야마형 복지 서비스 추진 특구	추진 지자체	도야마(富山)현 도야마현, 도야마시, 타카오카(高岡)시, 타테야마마치(立山町)
	구역범위	도야마시 및 타카오카시 및 나카니카와(中新川)군 타테야마마치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도야마현에서는 도야마형 주간 서비스 추진 특구 및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활용하여, 다수의 지정 통원 개호 사업체 및 기존 해당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장애 유무 및 연령 구분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도야마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본 계획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에 장애아(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아(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 촉진될 것이며, 도야마형 복지 서비스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노미 이키이키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이시카와(石川)현 노미(能美)시
	구역범위	노미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노미시는 다양화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조리여력이 있는 다츠노(辰口) 학교 급식 센터에서 노미시 다츠노지구 6곳의 어린이집에 급식을 외부반입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보육 서비스를 내실화하는데에 사용함으로써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식사 교육을 보육의 중요 과제로 삼아 급식을 통한 '식사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사카이 튼튼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후쿠이(福井)현 사카이(坂井)시
	구역범위	사카이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사카이시는 다양화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아보육, 장애아보육, 연장보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인해 계속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급식 식자재는 현재 각 어린이집이 소량 주문을 받는 업자로부터 조달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발주를 할 수 없어 코스트를 삭감하기가 어렵고 현지 농산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조리 여력이 있는 미쿠니(三國) 학교 급식 센터에서 미쿠니쵸(三國町) 자치구 내 7개 어린이집에 급식을 외부 반입함으로써, 자기 고장에서 생산된 쌀과 야채류를 이용한 고장 요리와 계절요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메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에치젠쵸 쑥쑥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후쿠이현 에치젠쵸(越前町)
	구역범위	후쿠이현 뉴우(丹生)군 에치젠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에치젠쵸 내 공립 어린이집은 입소율이 77.4%로 정원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적당한 배치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에치젠쵸 내 2곳의 급식 센터로부터 급식을 외부 반입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재원을 일시보육, 연장보육 등 다양해진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충당함으로써 육아 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지 농산물을 활용하여 급식 센터를 중심으로 한 신토불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농림 어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더 안전하고	추진 지자체	야마나시(山梨)현 이치카와미사토쵸(市川三郷町)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특구	구역범위	야마나시현 니시야츠시로(西八代)군 이치카와미사토초 구역 일부(이치카와다이몬(市川大門) 및 시모오오토리 이(下大鳥居) 지구)
	특구 개요	이치카와미사토초에서는 저출산,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고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으며 보육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초(町)립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급식 센터에서 외부 반입함으로써, 조리 설비를 집약화하고 식자재 구입을 일원화하여 절감한 경비를 재원 삼아 증가하는 아동복지사업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급식으로 신도불이 및 식사 교육을 추진하여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취학 전부터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음 풍요로운 어린이가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이나시 지역 공생형 복지 특구	추진 지자체	나가노(長野)현 이나(伊那)시
	구역범위	이나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의거한 지정 생활 개호 혹은 지정 생활 훈련을 근처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이 개호보전법에 의거한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 중 통원 서비스 또는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장애인은 가까운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활기찬 나가와코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나가노현 나가와마치(長和町)
	구역범위	나가노현 치사가타(小縣)군 나가와마치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나가와마치에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취업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나가와마치에는 3곳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균형 잡힌 급식을 추진하고자 급식 외부 반입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식자재를 일괄 조달하여 신도불이를 추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오오가키시 지역밀착형 복지 서비스 특구	추진 지자체	기후(岐阜)현 오오가키(大垣)시
	구역범위	오오가키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현재 시내에는 다수의 개호 보험 사업체가 있으며, 3곳의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장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적다. 따라서,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가진

		다닌다', '숙박한다', '방문한다' 기능을 활용하여, 장애인/장애아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등의 개호 부담을 경감하고, 세대를 초월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오래 살아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의 장애아(자) 수용사업
에나시 식사 교육 추진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기후현 에나(惠那)시
	구역범위	에나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에나시는 신토불이 및 식농 교육, 초중학교와의 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활용 중인 학교 급식 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채배된 농작물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 시내 14곳의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규모가 각기 달라 단독으로 현지 농산물을 급식에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급식을 학교 급식 센터에서 공급함으로써 바람직한 식습관을 정착하고 심신 건전한 어린이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튼튼한 성장을 지탱하는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기후현 모토스(本巢)시
	구역범위	모토스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모토스시는 핵가족/맞벌이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점점 다양해지는 보호자들의 육아 지원 수요 및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시립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급식 센터에서 외부 반입함으로써, 시내 모든 어린이들이 풍요로운 식사 체험을 통해 유/소년기부터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식사 교육'의 질을 높이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자재를 일원적으로 구입하여 경비를 절감하며, 지역농산물을 많이 활용하여 신토불이를 추진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마음 풍요로운 어린이를 키워 가는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기후현 고도쵸(神戸町)
	구역범위	기후현 안파치(安八)군 고도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고도쵸 역시 다른 시정촌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상태여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체화하여, 작년도부터 4개 유아원에서 다른 연령대 간의 집단 활동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연도 9월에 급식 센터가 가동될 예정인데, 4개

		유아원에 급식을 외부 반입하기 위하여 현재 급식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본 특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 3세 미만 아동식, 알러지식 등에도 대응하면서, 취학 전 아동에서 초/중학교 아동/학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여 마을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현지 생산 식자재를 이용한 풍요로운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기후현 안바치쵸(安八町)
	구역범위	기후현 안파치(安八)군 안바치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안바치쵸는 도시권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혜택 받은 환경이어서 맞벌이 육아 가정이 많다. 이로 인해 보육 수요가 많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망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도불이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 아동에서 초/중학교 아동/학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풍요로운 마음과 신체를 키우기 위한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기후현 이비가와쵸(揖斐川町)
	구역범위	기후현 이비(揖斐)군 이비가와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요즘 어린이들의 식습관이 흐트러지면서 어린이들의 '식사 교육'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비가와쵸 내 각 공립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 센터가 연계하여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함으로써, 영유아기부터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 학생의 식생활의 기호 및 식습관 정보를 교환하고 파악할 수 있어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 특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위생 측면 등에서도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에서 조리를 하게 되어 식생활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마을 풍요로운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기후현 오오노쵸(大野町)
	구역범위	기후현 이비군 오오노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오오노쵸에는 요즘 교통의 편리함과 낮은 주택지를 찾아 전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고있는데, 그 대부분이 맞벌이 육아 가정이다. 이로 인해 보육 수요가 많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희망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의 특례 조치를 활용하여,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 보육 서비스를 내실화하여 육아가정의 수요에 부응하며 어린이집에서의 식사 교육과 신도불이를 추진하여 어린이가 마을 풍요롭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마음 풍요로운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기후현 기타가타초(北方町)
	구역범위	기후현모토스(本巢)군기타가타초지역전체
	특구 개요	기타가타초는 교통의 편리한데다 아파트 등의 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전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맞벌이 육아 가정이다. 이로 인해 보육 수요가 많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희망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의 특례 조치를 활용하여,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 보육 서비스를 내실화하여 육아가정의 수요에 부응하며 어린이집에서의 식사 교육과 신도불이를 추진하여 어린이가 마음 풍요롭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미래를 읽어질 어린이들이 쑥쑥 자라나는 미노시라카와 (美濃白川)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기후현 시라카와초(白川町)
	구역범위	기후현 가모(加茂)군 시라카와초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시라카와초는 초(町)립 어린이집 급식을 초중학교과 동일한 초(町)립 급식 센터에서 외부 반입하는 것을 통해 유아기로부터 초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식자재와 관련하여 현지 생산자와 연계하여 안전/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납품 받아 자기 고장 생산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신도불이를 추진하여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식품 구입을 일원화하고 일괄 조리하는 것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경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을 다양해진 보육 서비스 확충에 충당함으로써 육아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21세기를 향해 날아오르는 마음 풍요로운 어린이가 자라나는 시라카와무라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기후현 시라카와무라(白川村)
	구역범위	기후현 오노(大野)군 시라카와무라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시라카와무라는 촌(村)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초중학교와 동일한 촌립 급식 센터에서 외부 반입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초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식자재는 자기 고장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가능한 한 활용하여 신도불이를 추진함으로써,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식품 구입 일원화, 일괄 조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재원을 다양해진 보육 서비스 확충에 충당함으로써 육아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하츠시마 어린이집 급식 외부 반입 특구	추진 지자체	시즈오카(静岡)현 아타미(熱海)시
	구역범위	아타미시 구역의 일부(하츠시마(初島) 지구)
	특구 개요	아타미시의 낙도인 하츠시마는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하츠시마 내 공립 초중학교에서 반입함으로써 재정 상황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또한 합리적인 보육운영을 통해 절감된 경비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여 보육을 내실화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급식과 메뉴가 동일하므로 영유아기 부터 의무 교육을 마치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할 수 있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이즈시 시민 앗타카/ 어린이 활기찬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시즈오카현 이즈(伊豆)시
	구역범위	이즈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이즈시는 2004년에 4초(町)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시이며, 시내에 8개의 공립 어린이집/2개의 사립 어린이집/5개의 공립 유치원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어린이집 입소 아동 수가 줄어 어린이집 재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가 검토되고 있으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설 정비와 인원 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립 어린이집 급식을 시설 여유가 있는 이즈시 내부의 학교 급식 센터에서 조리하고 집중 관리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즈시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적극 사용하여 신도불이, 식사 교육을 추진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안조 마음 풍요로운 어린이를 키우기 위한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愛知)현 안조(安城)시
	구역범위	안조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안조시는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도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육아 지원을 중요시책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시립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급식센터에서 외부반입함으로써, 조리 설비의 유지 관리 합리화, 식자재 구입 일원화, 조리사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그 재원을 이용하여 계속 늘고 있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식사 교육과 신도불이를 더불어 추진함으로써,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날아오르자 미래를 향해! 마음 풍요로운 토코나멧코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토코나메(常滑)시
	구역범위	토코나메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토코나메시 공립 어린이집 건물은 건축년도가 1966년부터 1978년로 오래되었고, 조리실 설비 역시 노후화되어,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원내 조리로는 세심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의 특례 조치를 활용하여 신도불이를 추진하고 있는 시내 2곳의 학교 급식 센터에서 급식을 외부 반입함으로써, 조리사 인건비 절감, 급식재료 구입 일원화, 조리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여 공립 어린이집 경영 합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어린이집의 식사 교육 및 신도불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음 풍요로운 어린이가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이나자와시 식사 교육 추진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이나자와(稲澤)시
	구역범위	이나자와시 구역의 일부(소부에쵸(祖父江町) 및 헤이와쵸(平和町) 지구)
	특구 개요	이나자와시에서는 핵가족화 진행 및 취업 여성 증가로 인해 보육 수요가 늘고 있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희망도 다양해지고 있어, 연장보육, 병 회복기의 아동 보육 등의 특별 보육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다양해진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소부에쵸/헤이와 지구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각 지구의 학교 급식 공동 조리장으로부터 외부 반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 절감을 실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또한 신도불이를 도입하여 안심/안전한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을 활성화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닛신시 안전 안심 어린이집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닛신(日進)시
	구역범위	닛신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닛신시는 1965년경부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일시보육, 연장 보육 등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9곳의 운영에 대해 검토한 결과, 향후에는 조리환경이 뛰어난 2곳에서 급식을 반출하여 조리하지 않는 2곳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설비 경비, 식자재 조달, 인원 배치 등 코스트를 절감하고 그 재원을 충당하여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한다. 또한 신도불이 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된 식사 교육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어린이들이 마음 풍요롭게 자라나는 지역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신도불이 식사 교육을 통한 안심 육아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타하라(田原)시
	구역범위	타하라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타하라시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어린이집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5곳을 휴원, 1곳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을 21곳으로 재편하였다. 한편, 농업산출액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산물/어패류 등의 식자재가 풍부한 지역이므로, 본 계획에서는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 외부 반입 방식을 활용하여 근처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만든 안전한 식자재를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기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도불이 축진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양해진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효율화하여 육아 지원 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지역과 함께 자라는 어린이를 위한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기요스(清須)시
	구역범위	기요스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기요스시 어린이집의 원아 가운데 특히 3세 미만 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연장보육, 일시보육,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등 보육수요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 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시내 3곳의 학교 급식 센터에서 조리하여 반입하는 외부 반입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각 어린이집 조리실에 조리사, 학교 급식 센터에 어린이집 전임 영양사를 배치하여, 양자가 협동하여 연령대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고, 식품 알러지가 있는 아동을 위한 제거식, 대체식을 제공하며, 허약체질 아동에 대하여도 유연하게 대응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기타나고야 활기찬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기타나고야(北名古屋)시
	구역범위	기타나고야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기타나고야시의 보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취학전 아동 인구가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타나고야시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보육 내용,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시내 2곳의 급식 센터로부터 일괄 반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일괄조리에 의한 식자재 조달, 조리사의 합리적 배치를 실시하여 조리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그 재원을 보육 서비스 확충에 충당할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수 있게 된다. 또한 급식 식자재에 현지 식자재를 도입하여,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 신토불이에 입각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유아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토고쵸 마을 풍요로운 어린이를 키워 내는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토고쵸(東郷町)
	구역범위	아이치현 아이치군 토고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토고쵸 공립 어린이집 8개 시설 가운데 6개 시설이 1971년에서 1979년에 건설된 것이며, 조리시설 역시 노후화되어 있어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원내 조리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초(町)내 학교 급식 센터에서 조리하여 반입하는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발달 단계에 맞는 균형 잡힌 영양의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의 식자재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심/안전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토고쵸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신토불이를 추진함으로써 농업을 진흥시키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나가쿠테쵸 잘 놀고 자연과 친해지는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나가쿠테쵸(長久手町)
	구역범위	아이치현 아이치군 나가쿠테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나가쿠테쵸는 증가하는 보육 수요와 다양한 요망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육아 지원시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연장보육, 일시보육, 장애아보육 등 특별보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 어린이집 6개 시설 가운데 3곳이 1974년~1978년에 지어진 것이며, 조리시설 역시 노후화된데다 증가하는 보육 수요로 인해 어린이집 내에서 조리하여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 센터에서 공립 어린이집으로 급식을 외부 반입하여, 발달 단계에 맞는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 식자재를 이용한 학교 급식을 어린이집에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육아 지원의 일익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특별 보육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하루히 마음 따뜻한 생글생글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기요스(清須)시
	구역범위	아이치현 기요스시 구역 일부(구 가스가쵸(春日町))
	특구 개요	가스가쵸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어린이집 입소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재편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시설 정비, 인원 배치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설비의 여유가 있는 가스가초 내 학교 급식 센터에서 일괄조리, 집중관리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학교 급식과 연계하여 급식내용의 내실화하며 신도불이,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건강하고 왕성하며 튼튼한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아마(あま)시
	구역범위	아마시 구역의 일부(구 지모쿠지쵸(菴目寺町))
	특구 개요	구 지모쿠지쵸는 나고야시의 베드타운이어서 다른 시정촌이 저출산 상태에 있는데 비해 계속 전입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입자 대부분이 맞벌이 육아 가정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입소 희망자가 많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다양해지고 있다. 운영 경비를 삭감하고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지역 내 6곳 모든 어린이집이 학교 급식 센터를 이용하여, 초중학교 같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영유아를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유년기부터 식사 교육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카니에 활력 넘치는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카니에쵸(蟹江町)
	구역범위	아이치현 아마(海部)군 카니에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카니에쵸에는 현재 6곳의 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건 축년도가 오래되었고 조리실 설비가 노후화되어, 원내 조리로는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 때문에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쵸(町)내 급식 센터에서 외부 반입하여 제공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더욱 질 높은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2곳의 급식 센터에서 조리함으로써, 아동의 발육/발달 단계, 알러지 등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어린이가 건강하게 빛나며 자라나는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아구이쵸(阿久比町)
	구역범위	아이치현 치타(知多)군 아구이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아구이쵸의 어린이집은 정원규모가 60명 정원인 비교적 소규모 어린이집이 5곳 중 3곳이어서, 자체 조리방식에 의한 급식의 경우에는 현지 농산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을 쵸(町)내 학교 급식 센터에서 공급함으로써 쵸(町)립 어린이

		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초/중학교의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여, 아동이 바람직한 식습관을 갖게 하고 심신 건전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옛날 급식 및 자기 고장에서 생산된 것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하여 자기 고장에서 생산된 것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아구이초를 비롯한 치타(知多)반도 특산물과 향토 요리를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 제공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잇시키초 마음 풍요로운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잇시키초(一色町)
	구역범위	아이치현 하즈노고오리(幡豆)군 잇시키초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일본 제일의 양식장 어산지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 잇시키초에게 있어 먹거리 안전/안심은 브랜드 이미지 확립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신도불이 및 식사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립 초/중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을 '잇시키초 급식 센터'로부터 반입함과 동시에 지역의 식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영유아기부터 발달 단계에 따라 연계되는 식사 교육을 실시하며, 얼굴이 보이는 생산자에 의해 자기 고장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하는 등 신도불이를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키라 왕성하며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키라초(吉良町)
	구역범위	아이치현 하느조고오리군 키라초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키라초는 전국에 앞서 현내 보육료를 경감한 지역이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 일반 재원 지출이 늘어나 재원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개개 어린이집에서 조리 업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신설된 학교 급식 센터에서 급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 원아의 발육/발달 단계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전임 영양사를 배치하여, 영양교원과 함께 초중학교와 연계된 식사 교육을 지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현지 식자재를 이용한 신도불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하즈코가 커나가는 즐거운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하즈초(幡豆町)
	구역범위	아이치현 하즈노고오리군 하즈초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하즈초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공립 어린이집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장보육, 일시보육 등 특별보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조리설비가 노후화되고 보육 수요가 증가하여 원내 조리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구를 활용

		하여 초(町)내 학교 급식 센터에서 외부 반입하여,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각종 육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현지 식자재를 도입하여 신도불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미요시초 두근두근 왕성한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미요시초(三好町)
	구역범위	아이치현 니시카모(西加茂)군 미요시초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미요시초는 요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맞벌이 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증대되는 보육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육아 지원을 시급히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더욱 세심한 보육/육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특례를 활용하여 초(町)내 학교 급식 센터에서 일괄 조리함으로써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효율화하고, 그 재원을 보육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육아가정에 대한 지원에 충당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일관된 식사 교육, 신도불이 추진을 통해 심신 모두 건강하고 잘 노는 어린이를 키워 내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식사 교육 시타라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시타라초(設楽町)
	구역범위	아이치현 키타시타라(北設楽)군 시타라초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시타라초는 공립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町) 북부에 위치한 나쿠라(名倉) 지구는 시타라초의 농업 진흥 지구이어서 무논에 심은 벼나 여름 야채 등의 식자재가 풍부하다. 이에 따라 이 지구의 나쿠라 어린이집은 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인접한 나쿠라 초등학교와 같은 메뉴를 통해 '일관된 급식'을 실시하여, 일관된 '식사 교육'을 지도함과 동시에, 특색 있는 현지 식자재를 구입하여 신도불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마을 두근두근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아이치현 토요네무라(豊根村)
	구역범위	아이치현 키타시타라군 토요네무라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토요네무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중인 소규모 산촌 마을이다. 다양해진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장보육, 일시보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리설 설비 노후화 및 재정난으로 인해 어린이집 내에서의 조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급식을 촌내 학교 급식 급식 센터로부터 외부 반입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또한 영양 측면에서 균

		형 잡힌 메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카메야마시 안심 안전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미에(三重)현 카메야마(龜山)시
	구역범위	카메야마시의 일부(세키쵸(關町) 및 카다(加太)지구)
	특구 개요	카메야마시 산간부는 과소화로 인해 원아가 감소하고 원내 조리 시설도 노후화되어, 공립 어린이집은 시내 급식 센터로부터 급식을 외부 반입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절감된 경비를 아동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충당하며, 유아기부터 초/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시마시 온화한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미에현 시마(志摩)시
	구역범위	시마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시마시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 아동수 감소 및 시설 노후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시 차원에서 효율적인 운영 및 현재 육아의 사정에 맞는 어린이집/유치원 방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7년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바람직한 방식 검토회'를 발족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 시설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급식 센터에서 외부 반입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이가시 안심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미에현 이가(伊賀)시
	구역범위	이가시 구역의 일부(아야마(阿山) 및 오야마다(大山田)지구)
	특구 개요	이가시는 현재 산간부의 과소화로 어린이집 아동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시설이 노후화되어 어린이집 내에서 급식을 조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립 어린이집에서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함으로써, 소규모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또한, 합리화를 통해 절감된 경비를 재원 삼아 아동복지를 내실화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급식과 더불어 신도불이 및 식사 교육을 추진하여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키소사키 쑥쑥	추진 지자체	미에현 키소사키쵸(木曾岬町)
	구역범위	미에현 구와나(桑名)군 키소사키쵸 지역 전체

급식 특구	특구 개요	쵸(町)내 어린이집 아동, 유치원 원아에게 동일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공통 화제를 만들 수 있는 등, 즐거운 식사 체험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함양하고 식사를 영위하는 힘의 기초를 다지는 식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유아 수가 감소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진 적은 인원 수의 보육 형태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특히 유아기는 인간 형성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어린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한사람 한사람이 자립심을 갖고 생활습관을 형성하며 심신 발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풍요로운 인간성, 사회성, 창조성을 함양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쑥쑥/튼튼 이즈미사노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오오사카(大阪)부 이즈미사노(泉佐野)시
	구역범위	이즈미사노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이즈미사노시의 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년도가 1965년 경으로 오래되었으며 조리실 설비 역시 노후화 되어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어린이집 자체 조리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어린이집에게는 더욱 세심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외부 반입함과 동시에 안전 위생 측면, 식사 교육 등을 충분히 배려한 가운데, 조리사의 인건비 절감 및 급식 재료 구입 일원화 등 경비를 절감하여, 그 재원을 보육 서비스 향상은 물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시책에 충실하게 활용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튼튼 구맷코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오오사카부 쿠마토리쵸(熊取町)
	구역범위	오오사카부 센난(泉南)군 쿠마토리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쿠마토리쵸에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가족과 지역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가정의 육아 부담 및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부모의 고민과 불안은 어린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합적인 육아 지원책을 내실화해야 한다. 공립 어린이집 급식 외부 반입은 위생, 안전, 식사 교육 등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절약된 재원을 보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시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이타미 서로 돌보는	추진 지자체	효고(兵庫)현 이타미(伊丹)시

복지 지역 발전 특구	구역범위	이타미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이타미시는 모든 사람들이 '주거에 익숙한 지역에서' 안전하게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지역 차원에서 서로 지탱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장애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 데다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근처에서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입각한 주간 활동/숙박 서비스를 개호보험법에 의거한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더욱 주체적인 공생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시가지 이즈시 "장애의 침상" 상가 특구	추진 지자체	효고현 토요오카(豊岡)시
	구역범위	토요오카시 구역의 일부(토요오카시 이즈시(出石_전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특구 개요	이즈시 지역은 城下町로서 국가에 의해 중요 전통 건조물군 보존 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 들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1시간 정도 들리는 관광객이 많아, 현지 전체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중심지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 보존 지구 내에 빈 집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귀중한 건조물을 잘 유지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현지 주체의 노력을 통해 보존 지구 내의 빈 집을 활용한 숙박 장소를 확보함으로써, 소중한 경관 재산인 마을의 집을 유지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을 활성화한다.
	규제특례조치	전통적 건조물을 이용한 여관 영업 사업
이치카와쵸 안심 안전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효고현 이치카와쵸(市川町)
	구역범위	효고현 간자키(神崎)군 이치카와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이치카와쵸에는 공립 어린이집이 4곳 있는데, 시설의 태반이 노후화되어 자체 조리를 하기에는 유지 관리, 식자재 확보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립 어린이집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하여 발육, 발달 단계에 맞는 영양관리를 하고 영유아기부터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신도불이를 추진하여 신선하고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절감된 경비를 육아 지원 서비스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여 일하는 부모의 수요에 부응한 육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후쿠사키쵸 건강 만들기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효고현 후쿠사키쵸(福崎町)
	구역범위	효고현 간자키군 후쿠사키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후쿠사키쵸에는 공립 어린이집이 4곳 있는데, 시설의 태반이 노후화되어 자체 조리를 하기에는 유지 관리 및 인건비, 식자재 확보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급식 외부 반입 방식을 도입하여 일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경비를 보호자 수요에 맞는 육아지원시책을 전개하기 위한 재원으로 삼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발육, 발달 단계에 맞는 영양 관리를 하고, 영유아기부터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여, 어린이 건강만들기에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현지산 식자재를 공급하여 신선하고 보다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키미코 건강하고 즐거운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와카야마(和歌山)현 키미노쵸(紀美野町)
	구역범위	와카야마현 카이소(海草)군 키미노쵸 구역의 일부(하세게바라(長谷毛原)지구, 오가와(小川)지구)
	특구 개요	키미노쵸의 시급하고 중요 과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대책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는 보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센터형 지역 육아 지원, 영유아 의료 보조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저출산 진행이 현저한 소규모 2곳의 어린이집 지역에서 어린이집 근처의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반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사 교육을 주제로 삼아 지역 전체적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다른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전체의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식사 교육’ 추진을 위한 일관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와카야마현 고야쵸(高野町)
	구역범위	와카야마현 이토(伊都)군 고야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고야쵸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 인구 4천 명 정도의 작은 지역이며 고야(高野)산을 중심으로 한 종교 성지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가 높고 어린이에게는 ‘지육(知育)’, ‘덕육(德育)’, ‘체육’ 3가지가 요구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로서 ‘식사 교육’의 소중함이 제창되고 있다. 고야쵸는 특구를 활용하여 공립 어린이집에 공동 조리장에서 급식을 외부 반입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집, 초, 중학교의 통일된 메뉴를 통한 ‘일관된 급식’을 실시하고 일관된 ‘식사 교육’을 지도하고자 한다. 또한, 현지산 식자재 구입을 통해 신토불이를 추진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히로가와 건강한 아이 /무력무력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와카야마현 히로가와쵸(廣川町)
	구역범위	와카야마현 아리타(有田)군 히로가와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히로가와쵸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 작은 지역이며 다양해진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구를 활용하여 공립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급식 공동 조리장에서 외부 반입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연장보육/일시보육 등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교 급식 공동 조리장에서 쵸(町)내 학생/아동/유아의 급식을 집중적으로 조리/관리하게 되면 급식 내용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전체의 '식사 교육' 추진에도 효과적이다. 보건분야와 연계하여 유아기부터 영양 지도를 하여 히로가와쵸의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마음 풍요로운 어린이가 커나가는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와카야마현 스시미쵸(すさみ町)
	구역범위	와카야마현 니시무로(西牟婁)군 스시미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스시미쵸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 인구 5천명 정도의 작은 지역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가 높고 어린이에게는 '지육(知育)', '덕육(徳育)', '체육' 3가지가 요구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로서 '식사 교육'의 소중함이 제창되고 있다. 스시미쵸는 2곳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다른 1곳으로부터 외부반입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 일관된 '식사 교육'을 지도하고자 한다. 또한 과소화가 진행되어 현지에서 급식 식자재를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여서 외부에서 급식 식자재를 조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입을 일원화하여 코스트를 절감, 현지산 식자재를 구입하여 신도불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육성 (급식) 재생 특구	추진 지자체	돗토리(鳥取)현 치츠쵸(智頭町)
	구역범위	돗토리현 야츠(八頭)군 치츠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돗토리현 치츠쵸에서는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 보육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어, 지역 육아 센터 및 패밀리 서포트 센터 등을 설립해 대응해 왔다. 또한, 쵸(町)립 어린이집 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조리 업무를 하기에는 어린이집 운영상 비효율인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원아의 발육, 발달 단계에 따른 식사 제공을 배려한 가운데, 급식을 외부 반입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단, 급식 집중 조리는 2004년 12월에 완성된 학교 급식 협동 조리장을 활용하여 각 어린이집에 배

		송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이즈모시 복지 지역 발전 추진 특구	추진 지자체	시마네(島根)현 이즈모(出雲)시
	구역범위	이즈모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이즈모시는 2005년 3월에 2시 4초(町)가 합병되어 행정 구역이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장애 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의 지역 편차가 있다. 개호보험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를 장애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장애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사업체 선택폭을 넓히고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운南市 육아 개구쟁이 특구	추진 지자체	시마네현 운남(雲南)시
	구역범위	운南市 구역의 일부(구 시마네현 오오하라(大原)군 가모마치(加茂町))
	특구 개요	2005년 4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체화 시설을 개원할 예정인데, 이 시설에서는 유치원 원아가 귀가하기 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합동 교육/보육활동'을 실시한다. 이 합동 활동 실시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공동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합동 활동을 하는 어린이집에 적을 둔 4세/5세아에 대하여, '공립 어린이집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한다. 이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를 통해 심신 발달에 맞는 일관된 양육 방침에 따라, 미래를 짚어질 취학 전 아동들이 연령 및 가정환경 등으로 구분되는 일 없이 다른 연령 아동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커나가는 환경과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유치원의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아동 등의 합동 활동 사업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원아의 합동 활동 사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 이용 사업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 외부 반입
모두 두근두근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오카야마(岡山)현 타카하시(高梁)시
	구역범위	타카하시스 지역 전체
	특구 개요	2008년 3월31일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 외부 반입 허용사업'을 인정받음으로써, 2009년도부터 가와카미(川上) 어린이집 3세 이상의 급식을 인접한 가와카미 학교 급식 센터에서 외부 반입하고 있는데, 가와카미 급식 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전용 조리 루트를 만드는 등 엄중하게 배려하고 있어 어린이집 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3세 미만 아동

		의 급식도 외부 반입하게 되었는데, 더 효율적으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쭉쭉/ 무럭무럭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히로시마(廣島)현 쿠레(呉)시
	구역범위	쿠레시 구역의 일부(쿠라하시쵸(倉橋町) 및 카마가리쵸(蒲刈町) 지역 전체)
	특구 개요	본 계획을 신청한 주체인 쿠레시는 육아환경정비를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육아지원책을 추진하기 위한 '어린이 육성부'를 신설하였다. 저출산 속에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육아 기능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내쿠라하시쵸, 카마가리쵸에서 학교 급식 공동 조리장에서 조리된 급식을 어린이집에 반입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육아지원책을 전개하여 어린이 건강 및 성장에 직결되는 급식 내용을 내실화함으로써 영유아기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키고 어린이 성장에 맞는 영양지도를 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히가시히로 시마시 쭉쭉/건강한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東廣島)시
	구역범위	히가시히로시마시 일부(하치혼마츠쵸(八本松町), 후쿠토미쵸(福富町), 토요사카쵸(豊榮町), 고치쵸(河内町))
	특구 개요	히가시히로시마시에서는 학교 급식 센터에서 공립 어린이집으로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함으로써,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고 보육 수요 확대 및 다양화에 대응하며, 공립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 센터 및 관계 기관이 연계하여 식사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영유아기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정착시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급식에 현지 식자재를 활용함으로써 영유아기부터 현지 식자재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신토불이를 촉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에타지마시 생글생글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히로시마현 에타지마(江田島)시
	구역범위	에타지마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에타지마시는 히로시마(廣島) 만에 있는 섬지역이며 과소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아동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공립 어린이집은 학교 급식 공동 조리장에서 급식을 외부반입하여 운영을 합리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신도불이에 입각한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 아동에서 초/중학교 아동/학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아키오오타초 활기찬 관례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히로시마현 아키오오타초(安芸太田町)
	구역범위	히로시마현 야마가타(山縣)군 아키오오타초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아키오오타초는 히로시마현 북서부에 위치한 과소/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바람직한 집단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의 적정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급식 공동 조리장에서 외부 반입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며 현지 식자재를 활용하여 풍요로운 급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식사 교육을 하고자 한다. 또한 절감된 경비는 다양해지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사업
우베시 장애아(자) 지원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특구	추진 지자체	야마구치(山口)현 우베(宇部)시
	구역범위	우베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우베시는 교령자 서비스를 통해 오래 살아와서 익숙해진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를 정비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곳의 사업 시작이 결정되었다. 가까운 지역에 장애인(아) 서비스 거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업소의 경우 수용 가능 시설이 제한되어 있어 긴급 시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구 신청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수용 시설 부족 해소, 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집 근처 복지' 구축의 지역 침투, 서비스 지역 편차 해소를 실현하고 개호/장애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의 장애아(자) 수용사업
하기시 지역 생활 추진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특구	추진 지자체	야마구치현 하기(萩)시
	구역범위	하기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하기시는 합병으로 광범위해진 시인데 지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애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요구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일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에 장애인(아)을 수용할 수 있게 하여 가까운 지역에서 장애인(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의 자립 지원 체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안심/안전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카가와(香川)현 우타즈마치(宇多津町)
	구역범위	카가와현 아야우타(綾歌)군 우타즈마치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우타즈마치는 행정 면적 8.07평방 킬로, 인구 17,460명(2005년 국정조사)이며 상당히 작은 규모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학교 급식 센터(2007년도부터 20년간 PFI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에서 공립 어린이집으로 급식을 외부 반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메뉴를 만들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현지 식자재 조달 비율을 향상시키며, 알러지식을 쉽게 제공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아이난쵸 지역 공생형 복지 서비스 특구	추진 지자체	에히메(愛媛)현 아이난쵸(愛南町)
	구역범위	에히메현 미나미우와(南宇和)군 아이난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아이난쵸는 2002년 10월부터 장애아 주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원이 10명 수준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또한, 생활 개호 사업체가 없고 취업계속지원 및 지역활동지원센터 등이 대응하고 있으나, 정원이 60명으로 적어 충실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특례를 활용하여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에서 장애인 주간 서비스사업 등을 실시하여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아)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주민이 언제까지나 공생하며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고치현산 지료 활용 추진 복지 특구	추진 지자체	고치현 고치(高知)현
	구역범위	고치현 아키(安芸)군 게세이무라(芸西村) 지역 전체
	특구 개요	고치현은 고령화율이 전국 제 3위로 높고, 특별양호 노인홈을 비롯한 개호보험시설 입소 희망자도 많다. 한편, 고치현은 전국 제일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를 중심으로 '현 생산 재료 이용 추진 본부'를 설치하여, 현 차원에서 현 생산 재료를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자 복지 시설을 정비하는데 있어 처우의 질을 강화해야 하므로 시설을 목조로

		만들어 심신에 좋고 건강하며 편안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입소자의 거주성과 환경을 향상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특별 양호 노인홈 등의 2층집 준내화 건축물 설치 사업
오오무타시 서로 돌보는 지역 밀착형 지역 발전 특구	추진 지자체	후쿠야마(福岡)현 오오무타(大牟田)시
	구역범위	오오무타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오오무타시는 일상생활권역인 초등학교 구별로,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를 비롯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정비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치매 고령자 등의 지역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는 개호보협상의 요개호 인정을 받지 못한 고령자 및 장애인(아) 등 지역교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본 특례조치를 활용하여, 고령자와 함께 장애인(아)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익숙한 장소에서 계속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쿠루메시 지역 밀착 공생형 복지 특구	추진 지자체	후쿠야마현 쿠루메(久留米)시
	구역범위	쿠루메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쿠루메시는 일상생활권역 별로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를 정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정비가 진행된 상황이다. 한편, 장애아(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반 정비는 그리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일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고령자와 장애아(자)를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까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복지력을 향상시키며 normalization 지역 발전을 해 나가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의 장애아(자) 수용 사업
다함께 만들어 가자. 가스야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후쿠야마현 가스야마치(粕屋町)
	구역범위	후쿠야마현 가스야군 가스야마치 지역 전체
	특구 개요	가스야마치 4곳의 어린이집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리 업무 가운데 급식 업무를 쇼(町)립 나카하라(仲原) 어린이집 병설 어린이집 급식 센터에서 외부 반입한다. 전임 영양사를 1명 배치하여 연령별/발달 단계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고, 쇼(町)립 어린이집에 동일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통일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며, 영유아기부터 일관된 식사 교육을 추진하여 초등학교/중학교에

		서의 식사 교육의 기초를 만든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센터를 지역의 식사 교육 추진 거점으로 하여, 지역에 대한 식사 교육 정보를 제공하며, 식생활에 관한 상담/지원을 하여, 초(町)내 취학전 아동 전체에 대한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아야쵸 튼튼 식사 교육 급식 특구	추진 지자체	미야자키(宮崎)현 아야쵸(綾町)
	구역범위	미야자키현 히가시모로카타(東諸縣)군 아야쵸 지역 전체
	특구 개요	아야쵸는 공립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 이 어려워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조리 업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급식 외부 반입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으로는 조리는 1곳의 어린이집에서 하여 나머지 2곳의 어린이집으로 배송한다. 급식의 집중적 조리/관리를 통해 내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아야쵸에서 생산된 유기농 야채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여 '신토불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공립 어린이집의 급식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허용
타루미즈시 장애아(자) 생활 지원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특구	추진 지자체	카고시마(鹿児島)현 타루미즈(垂水)시
	구역범위	타루미즈시 지역 전체
	특구 개요	2006년도에 수립된 '타루미즈시 장애인 계획' 및 '타루미즈시 장애 복지 계획'을 통해, 장애아(자)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 생활 이행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갖추고 장애아(자)의 생활을 지역 전체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타루미즈시에는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하여 인근 다른 시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황을 감안하여 타루미즈시 내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에 장애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아(자)의 지역 생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규제특례조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사업체가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

부록 4. 외국의 규제개혁 일반 현황

1. 미국의 규제개혁

가. 미국 규제개혁의 특징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규제완화와 공급위주 정책을 지향함으로써 규제개혁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출발하였다. 규제개혁이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대통령령 12291호를 발령하여 기존의 규제심사제도를 대폭 보강한 규제영향평가(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규제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연방규제의 총량은 약 14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는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미국은 정부와 규제대상 산업 간의 담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회원국들의 규제체계와 크게 차이가 있다. 미국의 규제집행체계는 법과 당사자에 적대적인 관계 위주로 집행되므로 투명성이 강하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체계, 특히 사회규제는 융통성이 없고, 복잡하며, 사소한 면이 있으며 미국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규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계속 진행 중이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부통령 등 최고위층의 관심과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에는 입법부에 의해서 더욱 많은 규제개혁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81년 이후에는 규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입증의 책임을 규제자가 지게 됨에 따라 규제

하는 기관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생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듯 규제개혁은 현재 규제의 총체적 질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 규제 개혁의 기반은 ‘규제기획 및 심사(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로 대표되는 대통령령 12866호(Executive Order 12866)에 근거하고 있다.

규제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향은 1970년 이후로 반경쟁적인 경제 규제로부터 사회규제로의 거대한 변화이다. 사회규제가 경제규제보다 생산성 순이익이 보다 더 쉽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전체적으로 규제체계의 성과를 크게 향상 시켰다. 많은 연구결과,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은 OECD국가들 중 최고이다. 우수한 규제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법적 구조에 대한 상당한 투자는 미래 정책안, 규제 영향의 분석 등 주요한 여러 분야에서 훌륭하게 기능하는 규제체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규제체계는 비용과 정책효율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이슈화된 사회규제들의 순수한 사회적 이득은 최근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개인적인 규제는 이득보다는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4~10%정도로 추정되는 규제비용을 사회복지비용 삭감 없이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연방정부의 규제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규제에 기본이 되는 법의 질이 낮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규제결정에 대한 책임의무가 축소된 주/연방정부의 경계로부터 발생하는 불일치, 불확실성, 그리고 복잡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나. 미국의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상의 구조

1) 미국의 행정과 법률 환경

미국은 한 세기 이상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음식, 환경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서비스와 보호를 위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법 외에도 60개가 넘는 연방정부의 행정부서는 허부 규제를 공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매년 4000~5000개의 새로운 규제가 규정되며, 200권이 넘는 연방규제들이 심의 중에 있다. 국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의 편익뿐만 아니라 규제의 직접비용의 추정치는 GDP의 4~10%에 달한다. 그 결과 연방정부의 규제는 개인, 사업, 주, 지역, 원주민정부,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운영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의 역할은 오랜 논의의 핵심으로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포함한다.

-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혁신적이고 다이내믹한 경제에서 규제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이슈
- 연방의 권력과 주 권리사이의 균형에 대한 연방주의자들의 이슈
- 의회,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 사이의 끊임없는 권력다툼으로부터 내려온 제도적 이슈
- 개인의 재산권과 공동소유권과 같은 헌법적 이슈

미국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연방규제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 매년 수백억 달러가 연방규제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고, 더 많은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 산하 관리예산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OMB)는 환경, 안전, 보건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규제가 매년 1700억~23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일 년의 편익은 2600억~3.5조 달러를 발생한다고 의회에 보고 하였다¹⁰⁾.

진입과 경제에 대한 조절은 편익을 창출하지만 매년 700억달러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이런 규제들로 인해 사회적 복지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¹¹⁾.

10)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1999), "Report to Congres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Federal Regulations", 4 February

□ 미국의 사회규제의 질적 개선 이정표

- 1971 Quality of Life Review는 규제 조정 향상의 수단으로 수행
- 1974 의회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과 물가 안정에 대한 주요한 규제를 준비
- 1978 규제 부처와 CWPS가 경제효과분석을 실시
- 1980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OIRA)는 문서업무 축소와 정보관리를 위해 문서업무 축소 법령에 의해 설치. 규제 융통성 법령은 작은 단체에 관한 규제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관을 필요로 하고, 1년간의 연방정부 규제 의제를 발행
- 1981 규제완화를 위한 대통령 산하 태스크포스팀이 설치(부통령을 의장으로 한 규제정책의장관급 의회). OIRA는 발의된 최종 단계에서 연방정부규제의 행정부 지시에 의해 공식적인 규제재검토를 위한 의무를 부여 받음. 규제효과분석은 행정부의 지시하에 권한을 위임받음(편익비용분석포함)
- 1985 규제계획프로세서는 성장하에 주목할 만한 500규제라는 설명서를 포함한 미국정부의 1년의 규제프로그램의 공시하여 설치
- 1989 경쟁력을 위한 의회 설치
- 1993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OIRA에 의한 규제 재검토와 편익비용분석은 재차 확인: 규제조사 위원회(Regulatory Working Group)은 부통령의 조언에 의해 설치. 경쟁력을 위한 의회 해산. National Performance Review는 결과주의 지향적 원칙에 대한 정부의 개혁을 위해 부통령 산하 설치.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법령은 주요관리 문제, 프로그램 평가,성취목표에 대한 전략 등 여러 쟁점 중에 확인된 의회 전략계획을 위한 준비를 위한 정부부처를 필요로 함
- 1995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규제 법전의 140000장 중 16000장의 분량을 삭제와 함께 포괄적인 규제재검토를 하기 위한 조정자 필요로 함
Unfunded Mandates Reform 법령은 정부의 폭 넓은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첫 번째 법령의 기본체계를 제공
Amended Paperwork Reduction 법령은 관리예산처(OMB)의 권한을 확장하고, 문서작업 축소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규제국(OIRA)을 필요로 함
- 1996 중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법령은 중소기업 규제효과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을 단단히 함
Congressional Review 법령은 재검토를 위해 의회에 모든 규제를 지시하기 위한 규제자들을 필요로 함 : 가장 중요한 규정은 법령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60일 지연
- 1997-8 재무부와 정부의 세출예산법(Treasury and Government Appropriations)
법령은 개선을 위한 추천과 연방정부의 규제들에 대한 연간 총편익비용을 의회에 평가를 위해 제출하기 위한 관리예산처(OMB)가 필요

11) Regulatory reform 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apacity to Assure High Quality Regulation, 1999

1980년대에 개혁의 초점은 경제규제 완화에서 급성장한 사회규제로 이동하였다. 미국은 OECD국가들에서는 흔하지 않게 사회적 규제의 질을 개선하고, 문서업무축소를 규제개혁의 중점목표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관련 규제가 개혁프로그램에서 무시되었다고 결론짓고 있지만 이는 사회 관련 규제가 경제관련 규제보다 3~4배나 높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회복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것 중 하나로 규제완화를 가장 우선시 했다. 일부에서는 방해가 되는 규제 기준은 불필요하며, 비경제적인 것으로 평가 절하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개방된 세계에서 경쟁력은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1987년에 관리예산처(OMB)는 규제를 포함한 국내정책은 국제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89년 부시대통령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경쟁력에 관한 장관급 위원회를 설치하였을 때 규제개혁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졌다. 이 위원회는 투명성과 편향성에 대한 우려로 1993년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클린턴 정부 동안 규제개혁을 위한 엘 고어 부통령을 의장으로 한 국가업적평가(National Performance Review: NPR)를 구성하였다. NPR은 관료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과 효율적인 정부를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다. 제도개혁의 책임자 :국가적 정책 및 기관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내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는 1980년에 세워진 기구로서 OIRA의 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직원은 동일업무에서 다년간 종사해온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OIRA는 연방의 각 행정부가 제안하는 규제에 대하여 대통령의 통치원리, 대통령의 정책 및 정책우선순위에 맞는지, RIA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고 적합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의회는 소관위원회나 GAO(General Accounting Office)등 의회조직을 통해 규제의 목적과 담당기관, 규제절차 등을 감시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 사법부의 역할도 크다.

1) 제도 개혁 정책 및 핵심 원칙

행정부의 최근의 개혁정책은 최고의 정치적 단계에서의 정치적 책임감을 내세우고 있으며, 개혁정책의 구조는 대통령의 집행권한에 기초한다.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통령은 규제 정책, 계획, 재검토에 대한 주요 조연자이고, 관리예산처(OMB)는 규제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 기구이며, 정보규제국(OIRA)의 책임자는 정책의 조종자로서 임명되었다. 클린턴 정부동안 국가업적평가(NPR)은 최고 수준의 개혁과 책임을 위한 정치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부통령 책임하에 실시하였다.

1993년의 클린턴 행정명령은 규제의 질적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명령은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을 요구한다. 미국은 규제에 대한 엄격한 편익비용 심사를 적용한 몇 안되는 OECD 회원국 중 하나이다. OECD는 사회전반에 생산된 편익효과가 분배되어야 하며,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편익을 창출해야 한다 것을 규제의 주요 원칙으로 권고하였다.

개혁의 광범위한 목표로서 사회복지의 극대화는 규제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1981년의 규제 축소와 함께 고려되었다.

1981년 행정명령은 처음으로 새로운 규제들이 사회적 편익비용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규제의 목적은 단지 개인을 위한 규칙인 아닌 사회의 순수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1991년 관리예산처(OMB)는 '대통령은 국가의 장기적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규제제도의 적정한 편익비용 균형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1993년 행정명령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편익비용심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고, 사회복지의 극대화는 규제의 목적이고, 순수한 편익이 잠재적인 경

제, 환경, 공공보건과 안전 및 효과적 배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2) 행정에서 개혁규제를 위한 메카니즘

모든 OECD국가들처럼 미국도 규제기관의 개혁의 총괄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각각의 규제기관은 해당 법과 대통령의 규제 정책의 제한 속에 규제정책의 수행을 위한 책임이 있다.

넓고 복잡한 미국의 규제체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련의 감독·단속 메카니즘을 설치하였다. 대통령과 의회 모두,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중앙관리부서를 통해서, 그리고 의회는 주로 프로그램에 의해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회계감사원 같은 기관은 감시를 통해서 강력한 규제감독을 수행한다. 대통령과 의회 모두 강력한 규제 감독을 시행하지만 대통령과 의회의 관심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편익비용과 비용 효율성 및 정책 지속성 등의 전반적인 규제시스템의 기능에 초점을 두는 동안 의회는 규제법률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 산하 조직인 OMB는 여러 OECD국가 중 가장 강력한 규제감독 기관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구조상의 권한을 반영한다. OMB는 정책초기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조율, 재검토 및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OMB는 규제개혁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정부의 많은 규제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OMB안의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의 특성을 구별하는 것은 부처에서 규제결정의 여러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규제국(OIRA)는 가장 중요한 규제들을 세 차례 검토한다: (1) 연간 규제계획의 준비동안의 기획단계에서; (2) 연방정부 관보에 내용을 공표되기 전에 제안 단계에서; 그리고 (3) 완성된 규정으로 공시하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정보규제국(OIRA)의 역할은 대통령의 정책들 및 원칙들과 일치하지 않

은 결정과 정책들을 확인하기 위해 규제와 효과분석을 재검토 하는 것이다. 사실상 정보규제국(OIRA)는 연방정부의 규제기구를 감독하기 위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중개자이다.

미국은 행정명령 12866에 의해 현존 규제들의 재검토를 위해 세 가지 중요한 메카니즘을 사용한다.

첫 번째로 종합적인 재검토 원칙이다. 행정명령 Section 5는 규제목표를 달성하기 더 나을지도 모르고, 대통령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수정하거나 철폐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중요한 규제들의 주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한다.

두 번째 재검토 메카니즘은 관리예산처(OMB)에 근거를 둔다. 관리예산처의 관리자는 수정이 필요한 규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규제기관의 인력들로 구성된 규제작업그룹과 함께 작업을 하도록 요구 받는다.

세 번째는 부통령이 규제 재검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국가수행검토(NPR)는 5년안에 현존하는 규제의 수를 50% 축소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관리예산처(OMB)는 국가수행검토(NPR)의 노력은 법문물의 총 페이지의 약 40%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보고하였다.

라.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개혁

미국 연방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프로그램 평가와 목표를 위한 국정 압력, 공공에서 개인으로의 비용 전환하였던 예산삭감 등 정보화시대에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또한 전통적인 규제형태에 대한 보충 또는 선택으로서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향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1996년에 기업과 국민은 연방정부 약식, 설문조사, 정보수집 등의 다른 종류의 정부문서업무를 다루기 위해 연방정부의 각종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는데 67억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것은 300만 종업원들이 민간부분에 고용된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세금과 관련된 형식적인 서류가 대략 80%정도를 차지한다.

1980년 이후로 미국은 문서업무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집중적인 시스템

을 발전시켰다. 문서잡업축소법령(Paperwork Reduction Act)은 독립적인 재검토조사부처인 정보규제국(OIRA)을 설치하고, 기관들이 정보규제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서류작업을 가제로 요구할 경우, 국민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문서업무 부담 관리에 대한 정부노력의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관리예산처(OMB)는 정보수집 활동의 비용과 결과의 인식 개선에 진전이 있었고, 문서업무의 산출 속도를 줄이는 것에 성공을 했다. 그러나 정보규제국(OIRA)의 노력은 국민의 정보를 요구하는 중요한 규제프로그램에 의해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문서업무축소법의 중요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프로그램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1980년과 1996년 사이에 총 문서업무 부담은 매년 46억 시간에서 67억 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1980년에 국민당 20시간에 1996년에 국민당 25시간으로 증가한 것이다.

문서업무축소법령하에 국민이나 기업의 정보 수집, 유지, 또는 정부에 정보 제출 등의 조건은 최소 3년에 1회 이상 정보규제국(OIRA)의 승인을 받드시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은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지지 않거나, 부담이 되거나, 중복되거나 다른 수단이 있다면 정보규제국(OIRA)에게 문서업무요구를 수정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연방정부 정보정책의 관리와 조율을 위한 관리예산처(OMB)의 책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관리예산처(OMB)는 의무 기관들의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매년 그러한 위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나, 상당한 숫자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회계감사원은 1999년도에 기관들이 문서업무축소법을 위반하고 정보를 수집했던 800개의 사례를 적발했다.¹²⁾

문서업무축소법에 있어서 중요한 개선은 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구조에 맞는 서류업무 축소 목적들을 부여하는 것이다. 서류는 단순히 정

12) US General Accounting Office(1999) Paperwork Reduction Act: Burden Increases and Unauthorised Information Collections (GAO/GGD-99-59), 20 April

보를 다루는 수단이고 전자매체와 같은 다른 수단들과 종류에 있어서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고어 부통령은 능률향상과 비용감소의 정부 창출을 위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임을 나타냈다.¹³⁾ 이것은 인터넷의 검색과 링크기능 뿐만 아니라 전자상 원스톱 쇼핑 등의 사용 증가로 인해 촉진 되었다.

더 효율적이고 빠른 정보수집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T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로 문서적성 없이 문서업무를 하는 것으로 완벽한 형식의 새로운 방법에 관한 것이다. 텔레파일을 개개인의 신고자들에게 제공하려는 국세청의 최근 움직임은 종이문서를 사용했던 40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TOUCH-TONE 전화로 납세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는 상담자를 위한 새로운 채널을 열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T를 사용하는 예로 Business. Gov(<http://www.business.gov>)를 링크한 전자상의 원스톱 이용이다. 이 서비스는 기업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대답, 연방정부 정보의 검색 능력, 정부문서의 검색, 연방 기관들로부터의 기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검색을 통하여 사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자격 및 허가의 간소화이다. 규제형식 중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 자격 및 허가의 요구조건이다. 이러한 형식의 규제들은 투자 지연과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중소기업(SME) 창업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들에게는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한다. 미국은 아직 잠재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미국에서 허가 및 면허활동들은 정부의 여러 수준에 따라 분담되어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전문적인 직업(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의 숙련도와 질, 그리고 지역수준의 활동(예: 지역허가)을 관리하기 위해서 허가 및 면허를 사용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유해물질이나 지역

13) Gore, Al (1997), Access America: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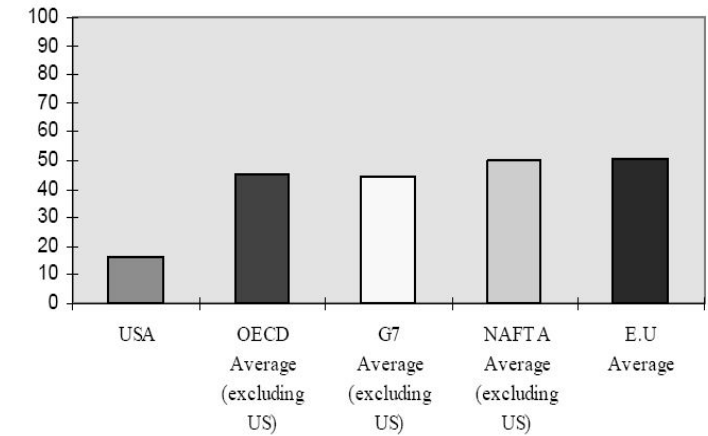
의 상하수도 시스템, 주정부간의 상업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원자력처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허가 및 면허를 주로 사용된다. 이런 연방정부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연방정부 단계의 면허 및 허가의 사용은 과거에 매우 느리게 발전하였다.

연방정부나 주 차원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몇 가지 면허와 허가 요구는 간소화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몇 가지 유일한 작업들이 진행 중이다.

- 환경부분에서 공정과정이 변할 때 마다 새로운 대기배출 허가를 위한 요구는 시장수요에 민첩한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연방 기관에게는 업무를 가중시킨다. 환경보호청에서 추진되는 시스템은 배기량에 대한 5년 동안 운용상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사전승인 할 예정인데, 이는 규제 지연을 줄이고 환경보호청이 환경오염 문제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몇몇 큰 도시들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합리화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 사업 면허와 승인의 간소화

- 이 종합적인 지표는 허가 및 면허를 없애거나 단순화시키려는 노력을 나타내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높은 등급을 가진다. 미국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랭크되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구조를 고려할 때, 면허 및 허가 비용에 대한 인식 부족은 주정부들의 상대적인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와 같은 다른 연방 국가들은 연방정부 수준에서도 면허나 허가로 인한 과중업무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출처 : OECD Public Management Service

마. 정책적 시사점

미국정부는 올바른 규제실천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사법적, 구조적인 제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규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능력은 OECD국가 중 최고에 속한다. 규제를 위한 정책구조는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다. 장기간에 걸친 정부 업무 진단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개혁에 동참한 부서에게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행정조직 전반에 자발적인 개혁의 분위기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개혁에 있어서 인상적인 요소는 관리예산처(OMB)의 지휘아래 규제부터의 편익비용 원칙의 수용과 분석적인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20년 넘는 집단적이고, 꾸준한 노력이다. 규제 채택에 있어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OECD국가 중 규제효과의 범

위 및 현상에 대한 논의는 유일한다.

규제의 질을 강조하는 것 또한 미국 프로그램의 강점이다. 1980년대는 개혁기구와 절차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시기였지만 그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극대화를 목표로 한 편익비용원칙보다 규제 축소라는 압력으로 인해 약해졌다. 그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되고 대립적인 방식에 의존하여 각각의 규제의 질을 높였지만 규제기관의 욕심이나 행정적인 문화는 거의 변화시키지 못했다. 예를 들어 중앙 감독기구인 관리예산처(OMB)의 역할은 전체적이고 조직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조치들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결과지향 정책결정과 정부의 재투자에 대한 초점과 관리예산처(OMB)의 노력들로 1990년대에 개혁프로그램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주 정부 규제에 있어서 긴밀성과 일관성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미국은 일관성 있는 규제 품질에 대한 기준과 규제기구에 대한 관리체계를 세우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연방/주 정부의 상호 긴밀성과 복잡성의 관리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적법 절차와 융통성 관계, 법적 명확성과 혁신 관계, 경험주의와 법률적인 방식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규제의 질에 대한 문제는 기초가 되는 주요 입법의 품질이다. 미국은 다른 OECD 국가들이 그러한 것보다 더 법적인 질에 관한 입법안의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힘의 조직적 균형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적 구조이다.

세계화와 혁신이 진행됨에 따라 규제과정에서의 부진, 지연, 비효율성은 미국을 점점 더 난처하게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새로운 규제는 더 빠르게 쟁점화 되고, 현존하는 규제들은 더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정책 의무와 유연성의 부족은 장기적이고 번거로운 규제 과정임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에서 더 많은 개혁의 범위와 속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의회의 태도이다. 정책 결과에 대한 더 많은 책임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정책이 실행되는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려는 의회의 의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강하지는 않다. 규제개혁의 범위와 속도의 결정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

이의 결과지향적 관계의 관리가 될 것이다.

비용과 이익의 분배, 결정과 비결정의 단기적, 장기적 효과의 기대와 함께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사소통과, 개혁영향 평가는 앞으로의 과정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다.

2. 영국의 규제개혁

가. 규제개혁의 배경

영국은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으로부터 규제개혁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선택과 경쟁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업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와 제3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관료주의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는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최근의 정부의 최우선 사항에 위치한다.

영국의 규제는 유연하고, 합의에 의하고, 소송이 없고, 분권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규제 조치는 정부와 개인적 조직의 다양한 수준에 의해 쟁점화된 개인적 집단을 위한 승인서와 이행 법체계, 국회법, 의회명령, 법률 등을 포함한 폭넓고 다양한 법과 비공식적 도구들로 설명된다.

영국의 규제개혁을 촉진한 배경은, 1970년대 노동당 정부의 개입주의 산업정책(interventionist policy)의 실패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대처 정부의 급진적 자유주의에 기인한다.

1980년대 강력한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갖추고 집권한 대처내각은 규제완화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하였다.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케인즈 주의를 폐기하고, 세금감면, 국가지출의 감축, 통화긴축에 의한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정책의 시행과 주요 법률의 제정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을 시행하였다. 1994년에 제정된 규제완화 및 적용제의 법(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은 영국의 규제개혁에 관한 최초의 법적 시도라고 평가받는 법률이다. 이후 영국정부는 규제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규제 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도입하여 정책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그 후 198년 블레어정부는 증거에 의거한 실효성이 높은 정책입안을 지향하기 위하여 수상성명으로 일련의 규제개혁정책을 정치주도로 실시하였으며, 1993년에 정부현대화 정책이 본격화되어 기업 등에 불필요한 규제의 배제와 정부 현대화라는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규제영향평가제도(Regulatory Impact Assessment)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일련의 규제개혁정책을 법제화하는 한편 필요한 사회적 규제를 배려하고 부당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배제에 대한 주무장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여 기동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01년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2001)을 마련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절차도 강화하여 과잉규제에 대하여 소관장관이 공개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개시하고, 그것이 가결된 경우에 소관장관은 규제수정안을 의회에 회부한다. 의회에서는 각원 심의회에서 심의를 개시하여 장관이 제출한 규제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경우에는 규제수정안이 성립하고, 의회의 심의회가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소관장관은 규제수정안을 철회하거나 또는 수정한 후에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2005년 7월에 내각사무처의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에서는 ‘2001년 규제개혁법’의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2005년 3월까지 60종의 규제개혁명령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보고서발표 시점까지 실제로 제정된 규제개혁명령은 27건에 그치고, 보고서는 규제개혁이라는 목적의 달성도가 예상외로 저조하고 실행된 개혁수도 적고 법률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었다.

최근의 영국정부의 규제개혁 경향은 영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

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현대적·민주적 영국을 만드는 것이며, 영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바른 여건들을 구비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 서비스를 개혁하고 국가 인프라를 현대화해 국민과 사회에 더 많은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보다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 영국을 보다 안전한 환경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 규제개혁의 책임자 : 국가적 정책 및 기관

1) 규제 정책의 체계

영국에서의 규제정책은 법규와 비공식적 정책도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법률, 위원회의 명령, 지방조례 및 규칙, 회람, 지침, 규칙(code of practice) 등이 있으며 이것은 중앙 및 지방정부, 독립규제기관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형성된다.

모든 법규는 의회에서 제정된다. 의회는 정부부처나 각 규제기관들이 제출하는 규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법정이나 영국의 법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유럽의 법률과 상충될 때 이를 폐지하도록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본법은 여왕이나 각 부처의 장관에게 관련 '법적도구' 혹은 '보조법규' 라고 지칭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 상/하원의 합동위원회는 법적도구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도구의 개정 과정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또 기업체의 감독, 조세규제, 요금결정, 의견수렴절차 및 기간 결정, 규칙 설정, 면허 등에 관한 세부조항이 존재한다. 이런 규제도구들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통보만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부처가 독립규제 기관들에게 발행하는 지침들 또한 규제도구에 포함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토지이용계획 승인과 같은 다양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부처가 제정한 많은 규제를 집행한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례나 규칙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확인 절차를 수립하여 그 질을 많이 향상시켜 왔다.

2) 규제개혁의 추진기관

영국의 규제개혁추진체계는 내각사무처 산하의 규제개혁총괄기구인 규제개선사무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각 부처별 규제사무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권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독립위원회로서 규제개선위원회(Better Regulation Commission)는 규제개혁에 대해 내각에 독자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각 중앙부처의 장관들은 관할영역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을 추진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규제개혁을 위한 독립자문위원회들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통신, 석유, 보건, 환경 분야 등 각 분야별로 규제를 실행하는 수많은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s)들이 존재한다. 이밖에 의회산하에도 규제개혁관련 기구가 있는데, 의회의 위원회들과 회계감사국이 그것이다. 2006년부터 규제개선사무국은 규제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부처별 독립규제기관의 수를 2009년까지 현재 31개 기관에서 7개 기관으로 통합, 축소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관련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추진기관들은 내각사무처 및 각 부처별 규제사무국, 규제책임성패널(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 법제화자문실(Parliamentary Counsel Office), 규제개혁장관(Regulatory Reform Ministers), 중소기업센터(Small Business Service), 재무성(Treasury) 등을 포함한다.

규제개선사무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은 2005년 영국정부는

14) OECD.(2002). Regulatory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Paris : OECD.

규제심사국(Regulatory Impact Unit: RIU)을 대체하는 규제개선사무국을 신설하고 내각사무처 소속의 규제개혁총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기관은 규제개선특별팀이 제시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Hampton 보고서의 제언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규제개선사무국은 정부부처 및 규제기관들이 공공부문, 사기업 부문, 비영리부문 등 사회경제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부처별 규제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전의 규제심사국이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을 주요 목표로 하였던데 비해, 규제개선사무국은 그 기능과 더불어 규제 집행 및 단속시스템을 강화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규제기관들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유지하여 규제를 형성,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또한 규제개선사무국은 규제심사국이 수행하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범위는 공공부문, 사기업부문, 그리고 유럽연합의 규제이슈들을 포함한다. 또한 규제검열 및 단속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파악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규제개선사무국은 2005년에 지역규제개선그룹(Local Authority Better Regulation Group)을 설립하고, 2006년에 이를 지방규제개선사무국으로 재편하였다. 이 조직의 구성원은 기업체, 규제기관, 각 부처, 소비자 집단, 지방정부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이 조직의 임무는 중앙정부에서 형성된 규제정책이 지방에 서도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Hampton 의제(agend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방에 서의 규제집행 모범사례, 규제집행의 우선 순위, 위험 기반 규제성과관리 등의 이슈에 관해 조사한다.

영국정부는 2006년에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성과와 신설규제안에 대하여 독자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규제개선특별팀(Better Regulation TaskForce: BRTF)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독립 위원회인 규제 개선위원회로 격상시켰다. 규제개선사무국과는 달리 규제개선위원회의

위원들은 기업체, 공공조직, 비영리조직 등 정부외부의 다양한 영역에서 온 자율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선위원회는 규제개선특별팀이 수행하던 기존의 업무와 더불어, 각 정부부처가 작성하는 규제간소화 및 행정부담 축소 계획을 조사하며,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성과를 검토하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업무범위는 민간, 공공, 비정부 부문과 EU의 규제관련이슈를 포괄한다.

부처별 규제심사국(Departmental Regulatory Impact Unit)은 규제개선사무국의 전신이었던 규제심사국의 부처별 위성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 기관은 소속부처의 규제활동들을 조정하고 규제자들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규제책임성패널(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은 1999년 설립되었으며, 주요임무는 정부의 규제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총체적인 규제시스템과 개별부처의 규제성과(regulatory performance)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내각사무처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이 패널은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그 위원으로서 통상산업부 장관, 재무장관, 내각사무처 의회담당장관 등이 참여한다.

영국은 각각의 주요 규제부처에서는 특정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규제개혁장관은 관할영역에서 오래되고 번거로운 규제들을 철폐하며, 신설규제를 도입할 때는 그것이 피규제기업에 부과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보장한다. 부처들은 내각사무처에 규제성과를 보고하며, 규제개혁장관들은 규제책임성패널에서 규제이슈와 관련된 진전사항을 보고한다.

다. 규제 개혁의 내용 및 시사점

영국의 규제개혁은 1980년대에 시작된 민영화의 물결과 연계된 규제완화 단계, 90년대 후반부터의 규제품질관리 단계, 그리고 최근의 총체적 규제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영국의 규제개혁은 1970년대 노동당 정부의 심각한 국가의 부채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대처리즘에 의해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1980년대 중반 비효율적이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이 당시에는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철회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려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서 규제완화의 의미는 민영화 및 시장의 창출과 동일시되었으며 규제의 품질은 경제적 성과와 직결된 것으로 고려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정책은 가급적 기업에게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축소하거나 제거하지는 방향을 취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985년에 모든 부처가 기업체의 규제순응비용을 평가하도록 요구되었다. 또한 1987년 규제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규제완화단(Deregulation Unit)이 통상산업부에 이전 설치되었고, 이것이 다시 내각사무처로 이전하였다. 또한 1994년 제정된 규제완화법(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은 법제화에 의해 야기되는 기업의 규제부담을 축소할 신속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재규제(re-regulation)를 수반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쟁이 창출된 분야의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많은 독립규제기관들이 신설되고 규칙들이 제정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관할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규제를 형성하고 집행하기 시작했다.

보건, 환경,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규제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로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은 규제완화에서 규제품질관리로 그 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무조건적인 규제의 철회와 완화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요컨대 규제의 제거 보다는 규제품질의 제고에 우선적인 초점을 놓게 되었다.

2000년에는 규제영향분석지침을 발간하였다. 이 지침은 초기영향분석서 작성단계에서 최종분석서 작성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규제대안을 고려하며, 규제의 비용/편익을 명백하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2001년에는 Regulatory Reform Act를 제정하였고, 이 법은 장관에게 기본법에 있는 조항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보조법제화(secondary legislation)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즉 불필요한 규제나 규제부담을 식별하여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법적도구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신설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명기하였다.

2004년 이후부터 영국은 각기 다양한 수준의 정부 및 규제기관간의 규제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총체적 규제효과를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규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정부는 지방정부간의 규제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복잡한 독립규제기관들을 통합하여 규제의 중복성을 제거하며, 유럽의 규제강령을 도입하여 집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정부는 31개의 독립규제기관들을 7개로 통합 축소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규제집행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위험평가에 근거한 규제단속을 강조하고, 기존의 규제단속협약을 대체할 규제순응규칙의 형성하며, 처벌제도(penalty regimes)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간소화와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표준비용산정모형을 도입하여 규제행정비용의 산정을 합리화하고, 규제간소화를 위하여 1규제 신설 1규제 폐지 정책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모든 부처가 2006년 말까지 규제간소화 계획(simplification plan)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규제개혁은 규제완화 및 품질관리 단계를 거쳐 총체적 규제관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총체적 규제관리를 위한 충분한 체계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영국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낮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관으로부터 기업 친화적 환경을 구비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

는 영국이 뚜렷한 전략적 방향 아래 과도한 행정절차 철폐 등 규제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한 올바른 전략이다.

3. 캐나다의 규제개혁

가. 규제개혁의 배경

캐나다는 연방제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국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이다. 국민의 통일적 상징으로서의 군주를 받드는 점이 캐나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방수상이 행정적 수반으로서 전권을 행하는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 체제를 갖추고 있다. 연방국가로서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 주(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캐나다는 주정부가 자율적이며 독자성이 강한 국가체계를 가지고 있다. 입법권은 캐나다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국군통수, 무역과 상업, 은행, 통화와 파산, 우편, 어업, 특허권, 저작권, 인구조사, 조세, 교통, 통신 등과 관련된 법을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캐나다는 규제개혁 정책이 1970년대 이래로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규제개혁 분야에 있어 선구적인 나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제도와 운영을 가진 나라로 평가된다.

캐나다는 RAOICS, SCC, DMCT, First Minister's Meetings, Industry Canada, PCO, TBS 등의 규제개혁 관련기구가 있다. 캐나다는 규제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목표를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오늘날 캐나다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포괄적인 규제개혁제도를 가진 나라의 하나로 과거의 규제개혁이 오늘날 캐나다의 경제적 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77년 재정위원회사무국(Treasury Board Secretariat: TBS)에서 규제에 대한 정기적 평가 실시 명령이 규제개혁의 시작되었다. 이는 규제권

한의 사용도 정부예산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규제개혁의 역사적 배경은 1970년대에 규제개혁의 필요성 최초 인식하고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보건, 안보분야 등) 검토 시작하였다. 1979년에 규제개혁만을 전담하는 최초의 기구인 규제개혁 조정관실(Office of the Coordinator Regulatory Reform: OCR)이 설립하여 규제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공정성·건강·안전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적 영향분석(Socio Economic Impac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는 규제의 경제적 영향(economic deregulation)에 초점을 맞추었고 규제로 인한 민간부문의 부담 경감 최대규제개혁의 목표로 1980년에 하원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관리에 관한 29개 권고안을 제시 연방정부, 규제개혁담당 각료 선임 및 항공운송 산업을 포함, 주요 분야 규제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1985년에 캐나다 규제개혁의 기본법으로서, 규제의 정의 및 기타 규제수단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신설·강화, 기존규제 정비, 규제 송부 및 등록관리, 정밀검토, 조사, 공표 등 규제과정 전반을 규정을 위한 규제와 관련된 법령으로 규제개혁 기본법 (Statutory Instrument Act: SIA)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 신규규제의 억제, 규제의 일제정비 보다는 규제 하나하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철폐, 연방과 지방행정간의 협의를 통한 규제부담의 최소화, 규제도입과정에서 국민의 접근보장과 사전협의의 확대 등을 위한 규제개혁의 지침 (Guide Principles of Regulatory Reform)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에는 규제가 캐나다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효율적인 규제 프로그램 개발과 정부 부처 간 공조 유도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규제정책 공조(특히 농업, 운송 분야 등) 및 정부와 산업계간 공조관계 발전에 그 초점을 두었다. 1992년에는 캐나다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캐나다 내의 지방간 교역장벽 제거를 통한 캐나다 단일 시장의 달성이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을 바탕으로 한 '캐나다 공익과 순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규제개혁 정책을 규정하였다.

2000년대에는 시민사회와 기업과의 정책공조등 Governance의 개념의 심화와 후기 산업사회의 심화에 따른 빠르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대응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동적 관계개선과 세계화에 따른 자유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NAFTA 와 같은 국제적 경제협약과 WTO등의 국제기구의 영향으로 국내의 산업부분의 규제를 국제 협약에 따른 Global 기준의 적용 등이 규제 개혁의 큰 동인이 되었다. 2004년 6월 Governor in Council(GIC)에서 규제 절차 지침서(Regulatory Process Guide: Developing a regulatory proposal and seeking its approval)의 작성과 2004년 9월 'Smart Regulation: A Regulatory Strategy for Canada'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규제의 질 관리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요 내용은 21세기의 규제 체계는 더욱 캐나다 국민들에게 효과적이고 대응적이고 비용 대비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성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이 통합된 국제체제에서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하는데 규제가 이런 무역과 투자, 경쟁, 그리고 혁신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정부들도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여 British Columbia 정부의 경우 2001년 규제개혁과 규제관리라는 국제적 경향에 맞추어 현존 규제의 1/3까지 감축을 추진하였다.

나. 규제개혁의 책임자 : 중앙부처 규제개혁기구

캐나다는 RAOICS, SCC, DMCT, First Minister's Meetings, Industry Canada, PCO, TBS 등의 규제개혁 관련기구가 있다.

1998년에 추밀원 산하(Privy Council Office)에 설립된 기구로서 Regulatory Affairs and Orders in Council Secretariat(RAOIC)는 규제정책에 관한 내각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캐나다의 규제개혁 총괄기구라고 할 수 있다. RAOIC는 연방과 주의 사회 경제적 정책들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각종 정책들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이슈들을 평가, 감시, 조정, 조

언을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RAOIC는 규제사무국(Regulatory Affairs Divisions: PCO-RAD)와 Orders in Council Division(PCO-OiC) 2개의 부서로 나뉜다.

규제사무국(Regulatory Affairs Divisions: PCO-RAD)은 규제영향분석서(RIA)를 평가 검토하고 각 부처의 규제법령안이 전반적인 정책관점에서 심사하고, 규제개혁 정책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등 연방 규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부처인 Orders in Council Division(PCO-OiC)은 추밀원내 오래된 기관 중 하나로서 내각(Governor in Council: GIC)에 규제안을 제출하고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에 규제안을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별 심의위원회 (Special Committee of Council: SCC)는 내각에 소속된 위원회의 하나로서 의장은 부총리가 되고 위원은 주요 각료들로 구성된다. SCC는 정부전반에 걸친 규제의 조정과 규제 및 검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규제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새로운 규제를 승인하고 입법기획을 수행한다. SCC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새로운 규제가 규정될 수 없다. 1999년부터는 연방규제정책의 책임이 재무위원회로부터 (Treasury Board)로 이전되었고 규제관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책임 등이 당해 기관으로 통합되었다. 규제정책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및 결정과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는 SCC가 조정한다. 다만, 규제입안단계부터 해당부처의 regulatory impact unit와의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하여 실제 규제가 PCO에 제출되는 단계에서는 쟁점사항이 거의 해소된 상태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행정문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재정위원회 사무처(Treasury Board Secretariat: TBS)는 규제와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연간 정부부처별 규제관련 계획 및 우선순위 사업에 관한 보고서와 연간 정부부처 성과보고서 안에 기재되는 규제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방법에 있어 규제기관들에 지침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자들이 수행하는 관련 프로그램들의 효율성을 설명하고 재정적인

연관성(financial implication)에 따른 규제검토업무 역시 수행한다.

정부는 정책 목표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습적인 입법적 도구에 추가하여 성과 중심적인 규제, 경제적 도구, 정보와 교육프로그램, 자발적인 시도 등의 광범위한 수단이나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

다. 규제의 개혁의 내용 및 시사점

대표적인 규제개혁 경향으로 규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Smart Regulation 추진하였다. 새로운 규제개혁 전략으로 국가의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성 증진, 혁신 및 경제성장예의 기여, 사업 분야에 대한 행정부담 감소 등을 위한 주요 분야의 개혁 가속화 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규제형성은 국민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규제는 무역에 역효과를 최소화 하고 경쟁적인 경제 환경 조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캐나다만의 독특한 규제조건의 제시 등을 최소화 하고 외국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학습으로 규제의 질 개선 방향을 취하고 있다.

과거의 규제개혁이 오늘날 캐나다의 경제적 성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캐나다는 규제개혁에 관해 끊임없이 정책목표를 세우고 실행수단을 개발해 온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결과 오늘날 캐나다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포괄적인 규제개혁제도를 가진 나라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캐나다 규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관계에 있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는 신뢰성의 상승을 이끌어 내어 상호간 협력이 더 쉬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규제의 개혁은 중앙정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결국 각주가 다양한 규제의 질 개선을 위한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런 주 정부의 강력한 기능은 미국과 비교할 때 크고, 규제의 조정제도의 발달이 캐나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독일의 규제개혁

가. 독일의 규제개혁의 배경

1990년 10월에 통독과 더불어 연방공화국에 편입된 구동독지역 5개 주를 포함한 16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광범위한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주는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자적인 주헌법을 가지고 주의회 선거에서 다수를 획득한 정당이 주정부를 구성한다. 현재 독일은 매우 복잡한 산업·서비스 사회,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규제가 범람하는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약 25년 전부터 규제관련 법률의 시행결과 및 법률제정절차를 평가해 왔고 이러한 법률영향평가는 ‘보다 적은 규범 그러나 보다 높은 효과와 수용의 정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슈뢰더 수상이 집권한 1998년부터 연방정부는 법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 규제영향평가에 관해서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 지침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규제개혁의지는 행정의 현대화와 규제관련 입법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처 간 입법업무를 효율성 제고하며 규제관련 법률안의 질적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독일연방정부는 1999년 12월 현대국가-현대행정이라는 행정개혁프로그램을 각의 결정하여 행정현대화, 관료주의철폐, 전자정부추진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행정규제 완화와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관료주의 철폐라는 이름하에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6월에 연방정부는 연방공동직무법(Bundes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GGO)을 개정 및 시행하고, 입법영향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 GFA)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관련 법률을 포함한 입법과정에서 혁신적 인 과학기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규제개혁의 중심부분으로서 제도화하였다.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의 실무적 착근을 위해 현재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들은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국가사업에 대

한 영향평가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5월 연방내각은 연방경제노동부(BMWA)가 마련한 29개 추진대책을 의결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연방경제노동부의 29개 추가대책은 크게 고객 지향적 행정업무로 행정절차간소화, 기업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관료주의 철폐정책에 대하여 게르하르트 총리는 2003년 11월에 발표한 “Agenda 2010 개혁프로그램의 20개 추가대책과 함께 관료주의 철폐를 확대 추진할 계획을 2005년 3월 발표하였다.

독일의 규제개혁은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 1단계는 1958년 연방공동직무법이 제정된 것으로, 규제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간의 협력을 상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제 2단계는 1983년 주요 이슈였던 법·행정 간소화 시기로서 연방연방내무성 산하 “연방법행 정간소화위원회”(Unabhängige Kommission für Rechts- und Verwaltungsvereinfachung des Bundes)가 설치되어 일련의 규제정비작업이 수행되었다. 법·행정간소화의 주요 핵심은 도로, 철도, 정수시설 그리고 주택건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및 공단, 발전소 건설 등과 관련된 계획 내지 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의미한다.

제 3단계는 1989년 이후 민영화가 주요 이슈였던 시기이다. 일련의 민영화작업의 성과는 기업의 시장적응성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기업입지강화를 제고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 4단계는 1998년 이후 연방공동직무법이 개정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사민당·녹색당이 연정을 이루어 “현대국가-현대행정”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2000년 뵘/콘첸도르프의 ‘규제영향분석 핸드북’을 기본으로 하여 연방연방 내무성을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이하의 3대 프로젝트로 연방행정의 내부 현대화, 연방온라인 2005, ‘관료주의 철폐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규제개혁의 책임자: 규제 정책의 체계

독일의 규제개혁 추진기관은 분야별 규제 기관으로서 규제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고려하는 기관들이다. 해당 관계 부처의 경우, 연방 차원의 책무성을 이행해야 하며, 공무집행상의 행정업무를 하부 기관에 위임하고, 정책계획과 전략적인 규제현안 및 규제대안을 도모하는 등 근본적인 규제방향을 설정하는 기관들이다. 특히, 규제의 품질을 제고시키는 주요한 업무를 맡은 기관은 주로 연방의 부처들이다.

연방내무부(BMI: Bundesministerium des Innern)는 규제개혁의 핵심추진기관으로서 절차적 규제개혁에 기여하고 있다.

연방내무부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추구하는 주요 목적은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관련 입법을 개선하는 일과 관료제 축소 및 관료제 운영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계량화 하는 데에 있다. 이는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절차적 규제 개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절차적 규제기관으로서 법률과 하부 규제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주도한다. 또한 제출된 입법 초안이 공동규정절차(the Joint Rules of Procedure)에 의거해서, 규제영향평가의 시행의 의무를 준수하였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연방카르텔감독청(BkartA: Bundeskartellamt) 및 독점규제위원회(Monopolkommission)로 두 기관은 경쟁법(GWB)하에서 해당 분야별로 규제 정책의 적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본질적 규제 개혁에 기여하고 있다.

연방카르텔감독청은 연방기술경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에 귀속되어 있지만,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기관들 중의 하나로서 상급 관청들 중 하나이다. 연방카르텔감독청의 활동의 법적 근거는 „카르텔법(Kartellgesetz)“으로 간주되는 있는 경쟁법, 그리고 유럽 입법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방카르텔감독청의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우선 연방카르텔감독청은 원천적으로 개별 기업 간 연합 등 카르텔 형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 질서에 해를 가하는 기업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금

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기관은 기업 간 연합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 내에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벌인 잘못된 기업 관행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부를 포괄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한다.

독점규제위원회는 경쟁정책과 규제 분야의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확보된 자문위원회로서 과거, 독점규제위원회는 사회공급망산업(Netztindustrie)에 대한 특별평가서 작성을 추가로 위임 받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임에 기초하여, 2년에 한번 씩 해당 분야별 - 우편분야, 전자통신분야, 도관연결 공급에 기초한 전력 및 가스 분야, 철도 분야 등에 관한 경쟁의 변화 추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연방공급망청(BnetzA: Bundesnetzagentur)은 이 기관은 전력, 가스, 전자통신, 체신, 철도와 같이 사회공급망 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별 규제관리청의 상급기관이다. 예를 들면, 전자통신분야의 규제관리청인 통신규제청(RegTP)은 연방공급망청의 하위기관이다

기타의 규제개혁 추진기관으로는 연방법무부(The Ministry of Justice), 연방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연방총리부(the Chancellery)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 규제 개혁의 내용 및 시사점

독일에서의 규제개혁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경쟁 하에서 사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했던 국가의 규제목표가 규제관련 법 규정의 삭제 또는 정비를 통한 법과 행정의 간소화 그리고 시급한 경제적 요구의 고려를 위한 입법절차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의 규제개혁 기본 틀 내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구체적인 규제개혁의 혁신내용으로는, 전력 및 가스에 대한 에너지원이 강조되는 독일의 에너지산업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의 압력과 해당

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입법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에 압박이 가해졌다. 관련 산업에 있어서 환경 보호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강조는 경제성과 상충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 및 관리가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전력과 가스 분야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일련의 중요한 규제정책들을 추진, 실행 시켜나갔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관할권이 매우 모호하여 규제의 남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에너지산업분야의 규제가 규제개혁의 방향측면에서 관련 입법개선으로 이어졌으며, 규제개혁 방식으로는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는 의료정책 추진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의료정책 추진의 주요 목적 중,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독일 내 전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의료보험 제도상 국민의 부담 몫을 줄이는 사항은 해당 분야에서의 정부목표이다. 약제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약의 상용에 관한 안정적인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독일국민의 90퍼센트가 국민 건강 보험기금(SHIs: the Statutory Health Insurance funds)의 회원이며, 나머지 10%는 민간분야의 건강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그러나 의약품 시장은 상업적인 이윤 논리와 국민건강 최우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상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규제개혁은 불가피 하였다.

독일의 규제개혁은 규제의 전 과정에서 품질 및 규제 조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다 나은 규제'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독일의 규제 개혁은 경제, 환경 및 시민들에 대한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영향분석, 법규 간소화, 가능한 모든 규제 대상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공청회를 통한 협의, 규제 관련 법규의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규제 입법과정에서 혁신적인 과학기법으로서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유럽연합의 규제관련 지침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